

#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김국신  
신상진  
여인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INU

통일연구원

#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김국신  
신상진  
여인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INU

통일연구원

## 동북아시아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인 쇄 2006년 12월 28일

발 행 2006년 12월 28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동북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61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동북아시아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 배정호, 김국신, 신상진, 여인근.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연구총서 ; 06-15)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383-5 93340 : ₩10000

349.11-KDC4

327.519-DDC21

CIP2006002858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서론	1
II.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협력 환경	7
1. 동북아시아 국제환경의 특징	9
2. 동북아시아의 갈등 요인	13
3. 동북아시아의 협력 요인	40
III.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대북전략	59
1. 미국의 동북아전략	61
2. 미국의 대북전략과 북·미관계의 변천	79
3.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전략적 입장과 대응	101
IV. 일본의 동북아전략과 대북전략	109
1. 일본의 동북아전략	111
2. 일본의 대북정책	125
3.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입장과 대응	150

V.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대북전략 .....	159
1. 중국의 동북아전략 .....	161
2. 중국의 대북전략과 북·중관계의 변천 .....	179
3.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	203
VI. 러시아의 동북아전략과 대북전략 .....	215
1. 러시아의 동북아전략 .....	217
2. 러시아의 대북전략과 북·러관계의 변천 .....	237
3.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과 대응 .....	276
VII. 한국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	285
1. 대외전략의 기초 .....	287
2. 주변 4강에 대한 대외전략 .....	290
참고문헌 .....	30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19

## 표 목 차

<표 II-1> 북한 미사일의 제원 및 특성 .....	29
<표 II-2> 전 세계 제조업에서 동북아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 .....	41
<표 II-3> 세계 교역과 투자에서 동북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2004년) .....	42
<표 II-4> 한·중·일 3국의 경제통합 노력 .....	44
<표 II-5> 미·중 무역추이(1980년~2005년) .....	52
<표 IV-1> 미·일의 공통의 전략목표 .....	117
<표 IV-2> 주일미군 재배치·재편안의 주요내용 .....	118
<표 IV-3> 주일미군 재배치·재편의 주요 로드맵 .....	120
<표 IV-4> 북·일 정상회담의 의제별 합의사항 및 과제 .....	136
<표 IV-5> 제2차 평양회담의 핵심 합의 사항 .....	143
<표 IV-6>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 .....	154
<표 VI-1> 러시아의 대중 교역추이 .....	232
<표 VI-2> 러시아 대미 교역추이 .....	233
<표 VI-3> 러시아 대일 교역추이 .....	234
<표 VI-4> 러시아의 대한민국 교역추이 .....	235
<표 VI-5>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입 추이 .....	239
<표 VI-6>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교역실적 .....	244

## 그림 목 차

<그림 VI-1> 러시아의 동시베리아-태평양 원유파이프라인  
건설계획 ..... 236

# I

## 서론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탈냉전시대가 도래되면서 국제환경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세계질서는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정점으로 중국·일본·유럽연합·러시아 등이 지역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단극하의 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를 형성하였고, 아울러 국제관계에서 경제력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파워의 개념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첨단기술에 의한 하이테크의 전쟁이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는 안보환경에도 안보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변화가 초래되도록 하였다. 전통적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안보·금융안보 등 경제안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테러리즘, 마약, 생태계의 파괴·변화에 의한 거대한 자연 재앙, 인권, 국제조직 범죄, 사이버 테러, 해적 행위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9·11테러와 같이 무차별적 목표를 대상으로 시간·공간·수단의 구분 없이 가해지는 국제테러가 21세기의 새로운 주목되는 안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갈등과 대립의 역사와 더불어 아직 냉전기류가 잔존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전략환경의 유동성·불확실성·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9·11 테러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반테러 안보전략이 전개되면서 동북아 전략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반테러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경계·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있고,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와 더불어 미·일동맹이 새로운 차원에서 재편되면서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동북아 전략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북·미갈등의 증폭과 함께 또 다른 변수로서 동북아 전략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중국 견제, 중·대만 문제와 미·중관계, 중·일의 견제와 갈등, 북한 핵문제와 북·미갈등 및 관련국들의 이해관계 등과 같은 갈등요인도 있지만, 한·중·일·러 경제협력과 상호의존,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 제고, 글로벌 경제속의 미·중의 경제적 상호의존 등 협력요인도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의 국제환경 속에서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 단행을 계기로 ‘위기과 기회’의 매우 중요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즉, 한반도가 북한의 핵실험 단행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국면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본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대외전략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동북아지역의 갈등과 협력 환경에 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지역 국제환경의 특징에 관하여 분석한 후, 역내 갈등요인으로서 중·일의 견제와 갈등, 중·대만문제, 북한의 핵·미사일과 주변국의 전략적 입장과 이해관계 등에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제Ⅲ장, 제Ⅳ장, 제Ⅴ장, 제Ⅵ장에서는 미·중·일·러의 동북아전략과 대북전략에 관해 분석한다. 즉, 미·중·일·러 각국의 동북아전략에 관해 분석한 후, 미·중·일·러의 대북전략과 대북관계에 관해 분석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6자회담 복귀 등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입장과 대응에 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Ⅶ장에서는 상기의 동북아지역의 갈등과 협력 환경, 미·중·일·러의 동북아전략과 대북전략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한반도가 북한의 핵실험 단행 및 6자회담 복귀로 인해 위기와 기회의 국면을 맞이

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핵실험 단행과 후유증, 그리고 6자회담 등에 초점을 맞추어 대외전략의 기초를 모색하고, 나아가 대미·대중·대일·대러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의 수립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미·중·일·러 각국의 전략적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의 수립이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 II

# 동북아지역의 갈등과 협력 환경



## 1. 동북아지역 국제환경의 특징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제환경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세계질서의 다원화 및 국제사회의 다극화, 국제관계에서 경제력의 비중의 증대에 따른 힘의 개념 변화, 국제적 상호의존의 증대, 첨단기술의 혁신과 하이테크 전쟁의 등장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는 안보환경에도 안보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변화가 초래되도록 하였다. 즉, 탈냉전시대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안보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안보위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국제테러리즘, 마약, 생태계의 파괴·변화에 의한 거대한 자연 재앙, 인권, 국제조직 범죄, 사이버 테러, 핵적 행위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9·11테러와 같이 무차별적 목표를 대상으로 시간·공간·수단의 구분 없이 가해지는 국제테러가 21세기의 새로운 주목되는 안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갈등과 대립의 역사와 더불어 아직 냉전기류가 잔존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전략환경의 유동성·불확실성·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

예컨대, 동북아 안보환경은 탈냉전시대의 도래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러시아의 개혁·개방, 중러 국경지역의 군사력 감축, 남북한관계 개선 등으로 정치·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아울러 역내 안보대화 및 지역안보협력의 활성화 경향 등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동북아 지역에는 강대국의 이해관계 교차에 따른 견제·갈등·대립, 북한 핵 문제로 인한 북·미간 갈등,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공존과 잠재적 군사적 긴장, 중국과 대만의 정치·안보 갈등, 중·일

갈등 등 다양한 불안정한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9·11 테러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반테러 안보전략이 전개되면서 동북아 전략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반테러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경계·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와 더불어 미·일동맹이 새로운 차원에서 강화되면서 동북아 전략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을 최대의 잠재적 도전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경계심을 바탕으로 ① 국방성에 의한 포위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거점 확보 전략(a hedging strategy)과 ② 국무성을 통한 개입전략(an engagement strategy)을 추진하는 한편<sup>1</sup>, 범세계적 수준의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공통전략 목표에 관한 공동성명」(2005.2)에 ‘중국’과 ‘대만’문제를 명기하였고, 일본은 「2004 방위계획의 대강」(2004.12)에서 9·11테러 이후,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 및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동북아지역의 안보 불안요인으로 지적하였는데, 이와 같은 미·일의 대중국 견제론은 제V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일미군의 재편에 투영되어 나타났다<sup>2</sup>. 즉, 21세기의 범세계적 차원의 미·일동맹의 강화는 미국이 중국의 역내 패권 추구를 억제하고 역내 균형자 또는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견지해 가려는 전략에 따라 주일미군의 재편을 미·일 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한 ‘동아시아 공동사령부’의 기능 수행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sup>3</sup>, 중

<sup>1</sup> 배정호, “21세기 미일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국제문제연구』 제6권 3호 가을호 (2006).

<sup>2</sup> 위의 책.

<sup>3</sup> 전경만, “동북아 안보구도 전망과 신험력주의 구상,” 『국방정책연구』, 봄호 (2006).

국의 적지 않은 경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대이라크전 전개에 반대하는 한편,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 확대에 대응하여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활성화, ASEAN과의 협력 강화, 인도 및 서남아시아와의 협력 증진을 추진하였고, 나아가 러시아와 공동으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전개하였다.

즉,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상당량의 첨단무기를 구입하는 한편, 2005년 8월 18~25일에는 중·러 양국 1만여 명의 병력(중국군 8,000명, 러시아군 1,800명)과 각종 최신예 무기·장비가 투입되는 군사훈련<sup>4</sup>을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하여 산둥반도로 이동하여 마무리를 지었다. 산둥반도에서의 상륙훈련은 지형이 타이완(臺灣)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인해 실시되었는데, 이는 타이완에 대한 무력통일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한 대규모 상륙훈련이다.

이와 같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중국의 동향은 일본에 대한 견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중·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에 의한 중국국민들의 정서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토 영유권 문제, 지역 패권 경쟁 등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들 갈등 요인이 서로 얽혀 증폭될 수 있는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5년에 4월에 접어들어서는 일본정부의 왜곡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등에 중국인들이 격분하면서 반일의 격한 시위가 중국 대륙의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하여 상하이, 항저우, 톈진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1919년 5·4운동 이래 최대 규모의 반일

---

pp. 6~41.

<sup>4</sup> 한국국방연구원, 『2005~2006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6).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2006년 9월 26일 취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동년 10월 8일 첫 방문국으로서 중국을 방문하여 베이징 정상회담을 가짐에 따라, 중·일관계는 개선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정서적 갈등을 바탕으로 파워 게임의 성격을 내포한 동북아 잠재적 갈등요인이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단행으로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이 동년 7월 5일 단·중·장거리 미사일 7기를 동해안으로 시험 발사를 함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 1695’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미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벼랑 끝 전술’에 의한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동북아 안보환경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동북아 다자간 안보논의의 장을 역할을 하던 6자회담도 존재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동년 10월 15일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을 만장일치로 채택·발표하였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제재 조치는 각국의 전략적 입장에 따라 내용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미·일·중·러 등 역내국가들은 대북 제재에 총론수준에서는 동참을 하지만, 각론 수준에서는 자신들의 전략적 입장에 따라 내용과 강도를 다소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미·일이 금융제재 등 경제제재를 비롯하여 북한선박 검사 실시,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의 추진 등 강경한 편인데 비해, 중·러는 상대적으로 대북 제재에 신중한 편이다. 그리고 미·일 주도의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박, 중국의 설득 등으로 북한이 일단 6자회담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역내 관련 국가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인식케 하는 것인데, 만에 하나 6자회담이 갈등으로 막을 내리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한층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요컨대, 동북아 지역은 한·중·일·러 경제협력과 상호의존,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 제고, 글로벌경제속의 미·중의 경제적 상호의존 등 협력요인도 있지만, 중·일 견제와 갈등, 중·대만 문제와 미·중관계, 북한 핵문제와 북·미갈등 및 관련국들의 이해관계 등과 같은 갈등요인도 있다.

## 2. 동북아지역의 갈등 요인

### 가. 중·일관계 견제와 갈등

#### (1) 중·일관계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중·일관계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야 했다. 냉전 후 유동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기 시작하였고, 일본 또한 21세기의 정치대국을 지향하여 국제사회의 역할증대를 추구하면서 중·일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는 협력, 정치군사적 관계는 갈등관계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냉전직후 중·일 양국은 양자관계를 ‘세계 속의 중·일관계’로서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1년 8월 가이후 도시키 일본 총리의 방중, 1992년 4월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일 및 동년 10월 일본

천황의 방중 등을 실현시켰고, 나아가 1994년 3월부터는 일본 방위청·중국 국방부간의 안보대화를 시작했지만, 1994년 5월 호소카와 내각의 나가노 법무장관의 ‘난징학살 날조’발언, 동년 10월부터 전개된 중국의 핵실험과 일본의 ‘중국 경제론’ 등으로 인하여 중·일간에는 갈등이 야기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양국관계의 불편한 상황은 1996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하시모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2000년 모리 총리의 ‘신의 국가’ 발언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으로 중국 국민의 정서적 반감 속에서 지속되었다.

따라서 중·일 양국은 2003년 3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신지도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고위인사의 왕래 등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5월 31일에 러시아의 페테르부르그시에서 정도(定都) 3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중·일관계는 갈등이 다소 완화되어 관계개선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8월 4일에 일어난 일본 제국주의의 유기(遺棄) 화학무기 폭발사건의 처리 문제, 9월 18일 중국 언론에 의해 폭로된 일본인 집단 매춘관광, 10월 29일 시안(西安) 서북대학(西北大學) 교내 파티시 일본 유학생의 음란공연에 대한 중국 교수 및 학생들의 시위사건 등으로 인하여 중국 내 반일감정이 재차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중·일관계의 개선노력은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고, 2005년에 접어들어 일본정부의 왜곡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에 중국인들이 격분하면서 반일의 격한 시위가 중국 대륙의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4월 2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시작된 반일 시위는 열흘 만에 전국적으로 번졌다. 4월 9일 베이징대학 및 칭화대학 등의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에 2만명이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10일의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 시위에는 수만명이 참여하였고, 16일에는 1919년 5·4운동 이래 최대 규모의 반일 시위가 상하이, 항저우, 톈진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일어났다. 특히 과격했던 상하이의 반일 시위에서는 5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일본총영사관을 에워싼 채 돌을 던지고 일본 상점과 일제 자동차를 공격하는 폭력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국의 격렬한 반일 시위는 일본 내 우익보수세력의 반중 감정을 자극하였고, 아울러 중·일간의 ‘기 싸움’ 양상과 함께 일본정부의 단호한 대중국 비판이 야기되도록 하였다. 2005년 4월 17일 베이징 중·일 외교장관 회담직후 마치무라 노부다카 외무장관의 대중국 비판 발언과 더불어 일본 정치권에서는 대중국 비판의 강경발언이 잇따라 터져 나왔고, 4월 23일에 일본의 우익단체와 일반시민 2,000여명은 ‘중국타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거부’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중국의 ‘반일 시위’에 항의하는 ‘반중 집회’를 전개하였다. 즉, 중국의 격렬한 반일시위 및 일본의 단호한 대중 강경 대응으로 인하여, 중·일관계의 갈등은 정면충돌로 치달으며 증폭되었다.

이처럼 긴장고조의 중·일관계는 중국정부가 반일 시위가 자칫 반정부 소요사태로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엄중 경고를 내리고, 나아가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과거 일제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함 더불어 중·일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예컨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4월 21일 반일 시위를 경고한 데 이어 공안당국은 반일 집회에 대해 엄중경고를 보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4월 22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과거 일제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부터의 사과’를 표명한 뒤, 23일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일 정상회담 직후, 24일 일본 국내 아사히 신문에서는 중·일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전국 유권자 808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비판 여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 신문의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찬성 36%, 반대 48%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계속 되면서 중·일 관계는 갈등의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본 국내에서도 동아시아 외교의 취약을 우려하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비판이 야당은 물론 언론계, 학계, 재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중·일관계는 2006년 9월 아베 총리의 등장과 10·8 아베-후진타오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회복 및 개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과거사 문제에 의한 중국국민들의 정서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토 영유권 문제, 지역 패권 경쟁 등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들 잠재적 갈등 요인이 서로 얽혀 증폭될 수 있는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2) 중일 갈등의 배경과 요인

### (가) 역사문제와 중·일 정서적 갈등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바 있는 일본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와 더불어 대륙침략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sup>5</sup>, 1937년 7월 7일의 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을 계기로 하여 중·일간에 전면전이 전개되었다.

이로써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중·일간에는 8년간 참혹한 전쟁이 지속되었고, 중국대륙에서는 무고한 많은 중국인들이 희생되었다. 중·일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의 점령지에서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다. 예컨대, 1937년 12월 당시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南京)이 점령될 때에는 약 30만의 중국인이 일본군에 의해 비참하게 학살되었다<sup>6</sup>. 이 ‘난징 대학살’ 사건은 중·일전쟁시 일본군이 자행한 잔혹한 행위의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또 많은 중국인들은 일본군의 세균전·독가스전을 위해 설치된 731부대 등에서 인체실험 등으로 희생되어야 했다<sup>7</sup>.

따라서 제2차 전쟁이 끝난 후, 전면적인 중·일전쟁을 일으킨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총리는 자살하였고, 관동군 지도자들은 처형당했다.

그러나 중·일전쟁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잊혀지는 ‘죽은 과거사’가 아닌, 생존자들의 증언, 기록사진, 보존되고 있는 당시의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오늘날 중국인들의 머릿속 및 가

<sup>5</sup> 山田 明 編, 『外交資料, 近代の膨脹と侵略』(東京: 新日本出版社, 1997).

<sup>6</sup> 南京大虐殺の真相を明らかにする全國連絡會 編, 『南京大虐殺』(大阪: 東方出版, 1995).

<sup>7</sup> 戦争犠牲者を心に刻む會 編, 『七三一部隊』(大阪: 東方出版, 1997).

슴속에 ‘살아있는 역사’로서 남아 있다. 즉, ‘침략자와 피침략자’, ‘가해자와 피해자’ 등 중국인들의 역사적 피해의식, 정신적 아픔은 반일 감정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정치인들이 전전(戰前)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발언을 할 경우, 중국인들은 강한 반발을 나타내었다.

1994년 5월 호소카와 내각의 나가노(永野茂門) 법무장관의 망언 즉 “난징 학살 날조”발언이 있는 지 약 1년 3~4개월 후, 장쩌민 국가주석은 1995년 8월 하순 및 9월 상순에 개최된 ‘항일전쟁승리 50주년 기념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일본침략에 의해 중국이 입은 직접적 경제적 손실은 1,000억 달러, 간접적 손실은 5,000억 달러”라는 언급하였다.

중국이 1972년 국교 수교시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이 장쩌민 국가주석의 발언은 중국의 공식견해가 되고 있다. 또 1998년 11월 25~30일 중국의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한 장쩌민 국가주석은 ‘일본의 역사의식’이 미흡하다고 몇 차례나 강하게 비판하였고, 그와 같은 과거사문제에 따른 갈등은 ‘정상의 서명 없는 공동선언’이라는 파문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후, 중·일관계는 최근까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으로 갈등의 관계가 지속되었다.

오늘날 중국인들에게 일본은 아주 싫어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sup>8</sup>. 일본인들 또한 중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있다<sup>9</sup>. 중·일관계도 한·

<sup>8</sup> 『中國青年報』에 게재된 “중국청년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청년들의 일본에 대한 총체적 인상은 “좋다, 매우 좋다”는 14.5%에 불과하고,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는 41.5%이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83.9%는 ‘日本’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南京대학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답변했다.

일관계처럼 감정과 이성이 얽혀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일 정서적 갈등, 즉 중국인들의 대일감정을 이용한 ‘역사카드’를 중국정부는 대일정책에서 때때로 이용하였다. 중·일 정서적 갈등은 그 자체로서는 그다지 심각한 현안은 아니지만, 중·일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그 기저에 투영하여 때때로 갈등을 한층 악화시키거나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 (나) 중·일 영유권 갈등

동지나해의 한 무인군도(無人群島)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일간에는 최근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5개의 섬과 3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무인군도의 일본명은 센카쿠(尖閣)열도, 중국명은 다오이다오(釣魚島), 타이완(臺灣)명은 다오이타이(釣魚臺)인데, 중국(북주)으로부터 동쪽으로 420Km, 타이완의 기륭(基隆)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90Km, 일본 오키나와의 나하(那覇)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4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북위 25 42', 동경 123 30' 지점에 위치).

그다지 쓸모가 없었던 센카쿠·다오이다오 열도는 부근의 대륙붕에 풍부한 석유자원, 천연가스층이 묻혀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는데, 문제를 가장 먼저 표면화시킨 국가는 타이완이다.

타이완정부는 1970년 7월 미국 석유회사 걸프사 계열의 퍼시픽 걸프에게 타이완 북동지역의 석유 탐사권을 허용하면서 이 센카쿠·다오이다오 열도의 주변지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일본의 거친 항의에

---

<sup>9</sup> 일본 時事通信이 1998년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국은 일본이 싫어하는 국가 5위이다. 즉 천안문사건, 핵실험, 臺灣주변으로의 미사일 발사, 중국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 등으로 일본인들은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것이다.

타이완은 후퇴했다.

또, 중국도 센카쿠·다오이다오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지만, 1978년 8월 중·일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될 때 ‘귀속의 보류’방식을 통하여 일단 덮어지게 되었고, 나아가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조인 직후 일본을 방문한 덩소평 당시 중국 부총리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후손들에게 해결하도록 넘겨 두자”고 했다.

그러나 1990년 일본의 우익단체 청년사가 설치한 센카쿠·다오이다오 열도의 등대에 대하여 정식항로표지로 인정하는 문제<sup>10</sup>, 1992년 2월 중국의 영해법 제정과 센카쿠 열도의 중국령 명기 등으로 센카쿠·다오이다오 열도 문제는 중국과 일본 간의 현안문제로 재차 대두하게 되었다.

현재 센카쿠·다오이다오 열도의 영유권 문제는 중·일관계의 중요한 잠재적 갈등요인이다.

중·일이 센카쿠·다오이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핵심적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부근의 대륙붕에 매장된 풍부한 석유자원, 천연가스층 때문이다.

## 나. 중·대만 문제

대만의 분리독립 움직임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강경 대응 그리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도 동북아 안보환경을 저해하

---

<sup>10</sup> 일본의 우익단체인 정치결사 “일본 청년사(青年社)회원”은 1988년 센카쿠열도의 한 지역에 설치한 등대를 보수한뒤 이듬해인 89년에 이 등대를 정식 항로 표지로 허가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은 2년 뒤인 90년에 등대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정식 항로표지로 인정하려 하였으나, 중국, 대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만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 통합과 독립을 둘러싼 갈등의 성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국익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국제문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또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도 대만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만문제의 향방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대만의 분리독립 추진이 대만해협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대만독립공화국 수립을 당 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민진당과 리덩후이의 후원 하에 2001년 7월 결성된 대만단결연맹이 대만 내 독립을 추구하는 주요 정치세력이다. 집권 민진당은 점진적 독립을 추구하고 있고, 대만단결연맹은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를 ‘특수한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양국론)로 규정하고 통일보다는 대만의 안정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총통선거 시에는 집권 민진당과 대만단결연맹이 ‘범록’ 연합을 결성하여 대만독립에 반대하는 ‘범람’ 연합세력에 대항하였으며, 양안 간 ‘직접 3통’ 실시를 반대하고 ‘중국위협론’을 강조함으로써 중국과 대만의 통합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고, 대만독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하려 하고 있다. 대만단결연맹은 대만의 본토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만의 국가주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sup>11</sup>

대만 민진당과 대만단결연맹은 각종 선거에서 득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만주민의 종족의식을 부추기고 있다. 1996년 이후 대만에서 실시된 총통직선과 입법원 선거 등을 전후하여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이유도 대만독립 세력들이 대만문제를 득표 전략으로

---

<sup>11</sup> 대만단결연맹 당 강령은 <<http://www.tsu.org.tw/tsuOutline.php>> (검색일: 2006. 9.27)을 참조.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래 대만주민들의 민족 의식이 점차 중국민족주의로부터 대만인 의식으로 변화되고 있다.<sup>12</sup>

대만에서 독립 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이 대만의 민주화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제기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만을 대중국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대만의 정치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등 독재국가의 민주화 촉진 기반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대만의 독립지향 세력들은 중국이 경제발전을 중시하고 200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 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 무력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대만해협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고 인식하여 대만독립을 주장하고 있다.<sup>13</sup>

대만문제의 해결을 3대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은 분리독립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 무력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까지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sup>14</sup>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대만 정책은 대체적

---

<sup>12</sup> Yu-Shan Wu, “Taiwan’s Domestic Politics and Cross-Strait Relations,” pp. 37~38; Chia-lung Lin, “The Political Formation of Taiwanese Nationalism,” Stephane Corcuff (ed.), *Memories of the Future: National Identity Issues and the Searches for a New Taiwan* (Armonk: M. E. Sharpe, 2002), pp. 219~241.

<sup>13</sup> Kenneth Lieberthal, “Preventing a War over Taiwan,” *Foreign Affairs*, Vol. 84, No. 2 (March/April 2005), p. 56; 李家泉, “當前台海形勢與中央對台政策新思維探討,” 『中國評論』, 8月號 (2005), p. 28.

<sup>14</sup> 『하나의 중국원칙과 대만문제』 백서에서는 대만에 대해 군사력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외국이 대만을 침범하였을 때, 그리고 대만당국이 담판을 통한 평화통일을 무기한 거절할 때, 중국은 무력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동원하여 주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0년 『중국의 국방』 백서를 통해서도 중국은 상기 3가지 조건 하에서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공표하였다.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國務院新聞辦公室, “一個中國的原則與台灣問題,” 『新華月報』, 第3期 (2000. 3), pp. 144~148; 2000년 중국 국방백서 전문은 <<http://www.china.org.cn/e-white/2000/20-1.htm>> (검색일: 2000.12.9) 참조.

으로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통일 보다는 독립 저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천수이벤이 재집권에 성공한 후, 중국은 '5·17 성명'을 발표하여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는 것이 양안 동포가 직면한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성명을 통해 대만독립 저지를 긴박한 임무라고 표현한 것이다. 후진타오 지도부는 통일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현 단계에서는 통일보다는 분리독립 저지정책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2005년 3월 중국 전인대가 통과시킨 것도 '통일법'이 아닌 '반분열국가법'이었다.<sup>15</sup>

중국을 대만독립 세력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대만이 분리될 수 있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때 또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될 때, 비평화적 방식을 통해 국가주권과 영토안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하게 되면 중국도 소련처럼 붕괴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과거 대만이 독립 움직임을 보인 것은 중국의 강력한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만 대만의 독립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보고, 대만독립 저지를 위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는 의지를 대만에게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sup>16</sup>

현 중국 지도부는 대만의 분리독립을 실력으로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 4개 현대화정책 시행 이래 지속해 온 경제 현대화 우선정책에서 경제현대화와 군사현대화를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최근 10여 년간 국방예산

<sup>15</sup> '반분열국가법' 전문은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5-03/14/content\\_2694168.htm](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5-03/14/content_2694168.htm)> (검색일: 2005.3.14) 참조.

<sup>16</sup> Yan Xuetong, "Origins of the Policy to Pay any Price to Contain Taiwan's Independence," pp. 41~42; Robert L. Suettinger, "China's Foreign Policy Leadership: Testing Tim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9 (Winter 2004), p. 6.

을 10%가 훨씬 넘게 증액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소브르메니급 구축함과 수호이 30 전투기 등 첨단 군사무기 장비를 구매하는 등 해군과 공군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대만독립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2004년 9월 16기 4중전회에서는 대만에 대해 군사공격 임무를 맡게 될 공군, 해군 그리고 제2포병 사령관을 당 중앙군사위원으로 새로이 임명하였다.<sup>17</sup> 해군과 공군 출신 장성들을 총참모부와 총정치부 등 인민해방군 작전부서 책임자로 등용하고 있는 점도 대만문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2005년 8월 말 중국 인민해방군이 러시아 군대와 함께 산둥반도에서 ‘평화의 사명 2005’로 명명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것도 미·일이 대만해협의 평화를 공동 전략목표로 설정한 데 대한 대응의 성격이 짙다.<sup>18</sup>

둘째, 후진타오 지도부는 대만독립 저지를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장쩌민 시기까지 중국은 외부세력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라고 비판하고 외국세력이 대만을 침범할 경우에도 대만에 무력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으나,<sup>19</sup> 현재 중국은 미국이 대만의 독립세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대만독립을 저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sup>20</sup> 2003년 대만 민진당이 독립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려 하였을 때에도 중국

<sup>17</sup> “海空軍二炮司令進入中央軍委,” 『文匯報』, 2004年 4月 30日.

<sup>18</sup> 중국은 러시아와 실시한 합동군사훈련의 목적이 국제 테러주의, 극단주의, 분리주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Peter Finn, “Chinese, Russian Militaries to Hold First Joint Drills,” *The Washington Post*, August 15, 2005.

<sup>19</sup> 2000년 3월 전인대 개최 기간에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룽지 총리는 외국이 대만문제에 간섭할 경우에도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sup>20</sup> 黃嘉樹, “中國新領導核心對台政策的調整與新意,” 『中國評論』, 5月號 (2005. 5), pp. 9~10; 李家泉, “當前台海形勢與中央對台政策新思維探討,” p. 26; 時殷弘, “中國大陸對台新策略評析,” 『中國評論』, 2月號 (2005. 2), p. 43.

은 미국에게 압력을 행사해주도록 요청하였으며,<sup>21</sup> 2005년 ‘반분열국가법’ 발표 이전에도 천원린(陳雲林)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주임을 미국에 파견하여 헤들리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 등에게 이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구한 바 있다. 천수이벤이 대만독립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대만의 독립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통일전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중국은 장빙쿤(江炳坤) 국민당 부주석의 양안관계 해빙을 위한 방중(破冰之旅)을 성사시킨데 이어 4월과 5월에는 련잔(連戰) 국민당 주석과 송추위 친민당 주석의 역사적인 중국방문을 이끌어냈다. 국민당 주석의 중국방문과 후진타오-련잔회담은 1945년 제2차 국공합작 결렬 이후 60년 만에 국·공간에 성사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비록 국민당이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이지만, 후진타오-련잔 간 회담에서 ‘92합의’(‘하나의 중국’원칙)의 기초 위에서 대만의 최대 정당인 국민당과 평등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후진타오의 대대만 정책의 승리로 볼 수 있다.<sup>22</sup> 아울러 중국은 15종류의 대만 과일에 대해 무관세 수입조치를 단행하여 대만 중남부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실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민진당과 대만단결연맹 지지기반을 잠식하려 하고 있다.<sup>23</sup>

<sup>21</sup> 2003년 12월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張依璠, “美警告陳水扁別胡來” <<http://www.people.com.cn/GB/paper68/10879/987835.html>> (검색일: 2006.1.17).

<sup>22</sup> 후-련 합의문은 <[http://news.xinhua.com/newscenter/2005-05/12/content\\_2950862.htm](http://news.xinhua.com/newscenter/2005-05/12/content_2950862.htm)> (검색일: 2005.5.13) 참조. 李家泉, “當前台海形勢與中央對台政策新思維探討,” 『中國評論』, 8月號 (2005. 8), pp. 22~28.

<sup>23</sup> Tsai Ting-I, “The Beijing-Taipei fruit fracas” <<http://www.atimes.com/atimes/China/GH26Ad02.html>> (검색일: 2005.9.25).

미국에게 있어서 대만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동남아와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해상 교통로로서 안보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민주화 모범국가로서 중국의 인권신장과 민주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교두보이기도 하다. 또한 대만은 미국의 중요한 군사무기 판매 대상국이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sup>24</sup> 따라서 미국은 대만과 단교 이후에도 대만에게 군사무기를 제공해 왔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일본과 ‘2+2 안보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만해협의 평화유지를 공동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대만문제에 대한 미·일의 공동 군사개입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sup>25</sup> 이처럼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려는데 있다. 2005년 8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산둥반도 인근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일차적인 목적도 대만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양간 간 군사충돌 뿐만 아니라 미·일·중·러 간에도 무력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sup>24</sup> 丁詩傳, “美國對台灣問題的維持現狀政策與中國的戰略選擇,” 『中國外交』, 第11期 (2004.11), pp. 29~30.

<sup>25</sup> 중국 외교부는 대만해협 사태를 미·일이 공동 전략목표로 설정하는 등 대만문제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있는 주 목적은 대만해협의 긴장을 유도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184294.htm>> (검색일: 2004.2.24).

## 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 및 주변국의 전략적 입장과 이해관계

### (1)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북한은 2006년 7월 5일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동해안을 향하여 스커드·노동·대포동 등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어 동년 10월 9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1기의 대포동 2호는 실패하였지만, 6기의 스커드·노동 미사일은 홋카이도 서쪽 500~600km 지점과 니가타 앞바다 북서쪽 700km 해상에 떨어졌으므로, 북한으로서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고, 핵실험 역시 TNT 0.4~0.8kt 폭발 규모에 불과하였지만,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는데 일보를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반응에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동북아 전략환경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갈등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 (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등의 미사일을 개발·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미사일 완제품을 수입하여 역설계 함으로써 스커드 미사일의 자체개발에 성공하였다. 1985년 중반 이후부터 북한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소련제 보다 성능이 향상된 개량형 SCUD-B(사거리 320~340km)를 양산하여 1987~1988년까지 이란에 1백 여기를 수출하였는데, 1989년에는 사정거리 500km인 개량형 SCUD-C 발사에 성공하였고, 1991년부터 연간 100~150기를 생산

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완비하였다.

이어,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1993년 5월에 독자 개발한 디자인으로 사정거리 1,000~1,300km의 노동 1호(일명 SCUD-D)의 발사에 성공하였다. 노동 1호는 히로시마 원폭의 3배 이상의 핵 및 화학탄두의 장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인공위성을 통하여 1997년 말에 노동 1호가 실전 배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는데, 1998년 8월에 함북 무수단리에서 노동 1호와 SCUD-C 미사일을 결합시킨 '장거리다단계 로켓' (대포동 1호)의 시험발사를 시도하였다. 대포동 1호는 노동 1호 엔진에 스커드미사일의 엔진을 얹은 2단계 로켓으로서 사거리 1,500~2,000km에 탄두중량 1,000kg까지 탑재가 가능하며, 전장 23.3m, 직경은 1단이 1.2m, 2단은 0.88m로 북한 최초의 2단 로켓 미사일이다.

2006년 7월 5일 시험발사에 실패한 대포동 2호는 대포동 1호보다 장사정이며, 2단 로켓이다. 즉, 1단은 직경 2.4m, 길이 16.2m의 미확인 추진체 위에 2단 로켓인 직경 1.2m, 길이 16m의 노동 1호를 얹도록 고안되었고, 탄두 1,000kg에 사거리는 4,300~6,000km로 추정되고 있다. 대포동 3호는 대포동 2호를 경량화 시킨 것으로 탄두 중량을 조정해 사정거리 12,000km에 탄두 중량은 240~650kg 정도인데,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 북한은 KN-02 전술미사일 SS-22 전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2004년~2006년 신형 전술미사일의 실험발사를 매년 실시하였는데, KN-02 전술미사일은 100~120km의 사정거리를 갖는 1단

계 고체연료 탄도미사일로서 구소련의 SS-21와 유사하다<sup>26</sup>. SS-22 전역미사일은 사정거리가 900km로 스커드 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길고, 오차범위도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이 1~2km인데 비해 370m에 불과할 정도로 적중도가 높는데,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발사한 6발의 미사일 중의 하나가 북한식 SS-2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7</sup>.

<표 II-1> 북한 미사일의 제원 및 특성

명칭	사정거리(km)	탄두중량(kg)	로켓수(단계)	제공시기
KN-2	100~200		1	2004년
Scud-B	320~340	1,000	1	1985년 이후
Scud-C	500	770	1	1989년 이후
로동-1	1,350	1,500	1	1993년
SS-2	900	500		2000년
대포동-1	1,500~2,200	700~1,000	2	1998년
대포동-2	4,000~6,000	700~1,000	2	2006년 실험 실패
대포동-3	10,000~12,000	240~650	3	?

출처: Anthony H. Cordesman, "Proliferation in the 'Axis of Evil': North Korea, Iran, and Iraq,"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30, 2002; Charles P. Vick, DPRK Missiles <<http://www.fas.org/nuke/guide/dprk/missile>>.

<sup>26</sup> John Pike, KN-02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http://www.globalsecurity.org/wmd/world/dprk/kn-2.htm>>.

<sup>27</sup> 이인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실태 및 의도" (통일연구원 정책간담회 발제문, 2006. 9. 28).

## (나) 북한의 핵능력

북한은 구소련의 기술적 지원 아래 핵무기 개발을 모색하였고, 1960년대에는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한 후 핵 관련 전문가의 양성과 함께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료를 도입하는 등 관련 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 접어들어서는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여 자체 기술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을 확장하였고, 1980년대에는 원자력의 실용화, 핵개발 체계 완성에 주력하여 1986년에 우라늄 정련, 변환시설의 운용을 시작하였고, 1989년에는 태천에 200MWe급 원자력발전소를 착공하였으며, 영변지역에 재처리시설 건설을 착수하였다. 나아가, 1990년대에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8</sup>.

이와 같은 핵 개발을 추구해 온 북한은 1992년 봄 처음으로 IAEA의 사찰을 받기 시작했으나, 투명성을 요구하는 IAEA의 요구를 거부하여 제1차 핵위기를 유발하였고, 2002년 이후에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두고 미국과 대립하면서 제2차 핵위기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크게 플루토늄(PU) 핵무기와 우라늄 핵무기(HEU)의 두 종류의 개발로 추정되는데, 우라늄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고<sup>29</sup>, 2004년 9월 최

<sup>28</sup> 배정호·김태우 외 『미·북 핵·미사일 협상 및 한반도 위기설에 관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 (2002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보고서); 국방부, 『국방백서 2000』 (서울: 국방부, 2000). 외

<sup>29</sup> 이는 북한이 1990년대 후반에 파키스탄으로 기술전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과 생산규모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인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실태 및 의도”

수현 외무성 부상의 핵연료 재처리 발언을 계기로 미국 정보기관이나 한국의 국방부 등에서는 현재 북한이 플루토늄 핵무기 1~1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2004년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한 최수현 외무성 부상은 8,000여 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무기화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핵무기의 보유 가능성을 시사하였는데, 미국 DIA는 북한이 2004년말까지 7~8개의 플루토늄탄에 4~8개의 우라늄 탄 보태서 총 12~15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CIA는 8000개의 연료 봉으로부터 2~3개 정도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sup>30</sup> 그리고 윤광웅 국방장관은 2004년 11월 “정보를 종합할 때 1990년 초에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1~2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김승규 국정원장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동년 10월 9일 국회에서 “북한이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이전에 확보한 플루토늄 10~12kg을 포함하여 총 4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up>31</sup>.

요컨대, 북한의 핵능력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이 TNT 0.4~0.8kt 폭발 규모의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핵실험 능력을 일단 입증하였다 해도 핵 파괴력의 보유는 아직 불확실한 수준이다<sup>32</sup>. 단, 플루토늄 5~6kg이면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약 7~8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sup>30</sup> DPRK Nuclear Weapons Program <<http://www.golbalsecurity.org>> 참조

<sup>31</sup> 『한국경제신문』, 2006년 10월 10일

<sup>32</sup>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15kt와 22kt 정도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폭발 규모이다.

## (2) 미·중·일·러의 전략적 이해관계

### (가) 미국

탈냉전기에 들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를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통하여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 및 수직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33</sup>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이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개발이나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확산이란 핵보유국 내에서의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NPT는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국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다. 핵 보유국에 대한 핵군축 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닐뿐더러 이들에게는 IAEA의 사찰의무도 없는 반면, 비핵국들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금지됨은 물론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NPT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5개국은 북한 등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국익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입각하여 생·화학무기 확산방지도 이들 핵보유국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와는 달리 미사일 확산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적 차원의 미사일 통제체제로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수출통제를 전제로 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

<sup>33</sup> NPT(Non-Proliferation Treaty)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1970년 출범한 국제 조약이다. 현재 회원국은 187개국(북한 제외)이다. 핵을 가진 나라 중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등이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다.<sup>34</sup> MTCR의 법적 성격은 공식적인 국제조약이 아니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미사일 부품·기술에 대한 이전 통제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통제외지 때문이다. MTCR의 규제사항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미 제정한 수출규제와 동일하다. 미국은 미사일 확산에 대한 자국의 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도화하여 회원국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MTCR 통제지침을 따르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질서 유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중동 등 지역 질서의 안정적인 관리차원에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대만·한국 등의 핵개발 의지를 자극하여 동아시아지역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일본·한국 등 우방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시리아·이란·이집트·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수출되어 우방국인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미국은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여 핵개발을 동결시키는 한편, 1996년 북·미 미사일협상을 시작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 및 MTCR 가입을 촉구해 오고 있다.

1993년 1월 이후 8년간 클린턴 행정부 집권기간 동안 미국은 전

---

<sup>34</sup>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은 1987년 미국·프랑스 등 선진 7개국이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및 관련 부품·기술의 국가간 이전과 최종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출범하였다. MTCR은 출범 당시 핵무기 운반 미사일만 대상으로 했으나 1993년 1월 이후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운반 미사일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MTCR 비회원국이 미사일 통제품목을 다른 국가에게 수출할 경우 미국의 제재법이 그 효력을 발하게 된다. 김경수·김환청·이무성·김상범, 『국제 비확산체제와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통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6), pp. 102~118 참조.

세계적인 군비축소를 지향하며 다자간 안보대화 및 관련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일방주의적인 힘의 외교를 통해 불량국가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5월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공식 천명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수단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였다. 즉, 북한 등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MD체제 구축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적 목표를 정당화하였다.

2001년 9·11 테러 참사를 계기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를 미국 안보에 대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sup>35</sup> 2003년 3월 19일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라크와 전쟁기간 중 미국은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여 2003년 4월 23~25일 미국·북한·중국 3자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3자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폐막되자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31일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물리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제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를 제안하였다. PSI는 2003년 6월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국·영국·스페인·프랑스·독일·이탈리아·포르투갈·네덜란드·호주·폴란드·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후 11개 참여국은 2003년 9월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PSI의

---

<sup>35</sup> The White House, *President Deliver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9, 2002).

차단원칙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PSI의 차단원칙은 대량살상 무기 이동에 대한 정보 교환, 차단작전을 위한 자원 및 능력 제공, 국내 법적 장치 및 국제법 강화, 영해·영공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하고 있는 선박·항공기를 검색하고 관련물품을 압수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36</sup> 그러나 PSI는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해상에서의 선박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하자 미국은 이에 근거하여 PSI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보강하고 있다. 여하튼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PSI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의 일환으로 구축시키고 있다.

#### (나) 일본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었고,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 및 중국의 군사력의 첨단화를 동북아 지역의 불안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일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자위대의 질적 증강, 안보 관련 법안의 정비 등을 꾀하고 있다.

즉,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 시험발사 사건 직후에는 동북아 안보정보 능력의 강화를 위해 내각부의 정보조사실에 정보위성센터의 설립과 더불어 2기의 정보위성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일본 국내의 안보불안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활용하여 미국 주도의 MD연

<sup>36</sup>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에는 현재 7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U.S. to Host 5th Meeting 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December 2, 2003) <[usinfo.state.gov/topical/pol/arms/03120201.htm](http://usinfo.state.gov/topical/pol/arms/03120201.htm)>.

구 적극적 참가, 자위대의 첨단무기화에 의한 전력 증강, 미·일 방위 협력지침과 관련된 주변사태법 등 3개 법안의 정비, 일본 유사시에 대비한 3개 법안의 정비 등을 추구하였다. 나아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실험발사 직후에는 1기의 정보위성 추구 보유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V장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2006년 10월 9일 핵 실험 단행 직후에는 일본은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미사일과 함께 핵개발로 인해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배증했다는 인식아래 금융제재에 이어 북한 선박의 입항·수입 전면 금지 등 독자적인 대북 추구 제재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아래 이에 대응한다는 명분아래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 하드파워 및 소프트 파워의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 (다) 중국

평화와 안정이 국제질서의 양대 특징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중국은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내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은 주변환경의 안정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였으며, 미사일기술수출 통제체제도 준수하고 있으며, 1997년 마지막으로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후 핵실험을 자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중국은 북핵문제의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및 의장성

명 채택과정에서 기권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핵확산 노력에 부응했다. 당시 중국은 한편으로 한·중수교 직후 북한을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6·4 천안문사건 이후 악화된 대미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권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력의 급격한 증강과 이에 따른 중국의 국제 영향력 증대는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負責任大國) 역할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2년 말 북핵 위기 발생 직후부터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3자회담과 6자회담으로 나오도록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에게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해 왔다. 1차 핵위기 시와는 달리 중국은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행사해 왔다. 6자회담을 주도함으로써 중국은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중국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일부 중국 전략가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자극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촉진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중국은 2006년 7월과 10월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도록 경고하였으며, 이를 무시하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한 후에는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지지하고 대북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라) 러시아

아시아에서 러시아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는 안보를 확보하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동부 국경지대와 지역에서 우호적인 대외적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이다.<sup>37</sup> 따라서 현재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기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이다.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라는 정책기조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이의 개발 및 생산, 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3~1994년 제1차 북핵 위기시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한편, 한·미·일과의 공조를 통해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였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I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시 러시아 정부는 이것이 이웃 국가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북아의 공동안보 및 안전 시스템 구축과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간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38</sup> 2002년 10월 야기된 제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2003년 8월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2005년 11월 이후 북·미 간의 현격한 입장

<sup>37</sup>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 IN ASIA IN 2004: SOME RESULTS," <<http://www.In.mid.ru>> (검색일: 2005.1.13).

<sup>38</sup> 『러시아방송』, 1998년 9월 1일, 9월 4일.

차이로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관련국들의 합의로 12월 중 속개될 예정이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동등한 참여 확보를 중시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는<sup>39</sup> 6자회담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2006년 7월 5일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사전 미통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의 위반, 국제적 항해의 자유 위협, 미사일 파편들의 러시아 해안 인근 도달 등을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반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개발을 제한하는 7월 16일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10월 9일의 북한 핵실험과 관련, 푸틴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핵비확산체제의 큰 훼손으로 평가하는 한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였다.<sup>40</sup>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는 러시아 정부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비편파적이고 균형잡힌’ 것으로 평가하고 10월 14일 채택에 찬성하였다. 북·미·중이 10월 31일 베이징 3자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자, 푸틴 대통령은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환영한다”<sup>41</sup>는 입장을 취했다. 러시아는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의 남북한·중국 방문과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강조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sup>39</sup>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June 28, 2000)” <<http://www.mid.mid/eng/econcept.htm>>, p. 12.

<sup>40</sup> “Russia condemns N.Korea nuclear test-Putin,” <<http://en.rian.ru/russia/20061009/54646166-print.html>> (검색일: 2006.10.9).

<sup>41</sup> “방러 반장관 북 6자회담 복귀합의 과정에 한국 배제되지 않아”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6.11.2).

### 3. 동북아시아의 협력 요인

#### 가. 한·중·일 경제협력과 상호의존

최근 세계경제는 각국의 무역 자유화 및 개방화정책, 운송 수단의 발달,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힘입어 국가간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범세계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간 경제협력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범세계적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WTO체제가 중심축을 유지해 나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sup>42</sup>가 심화·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에서는 19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되고 1990년대 초반 한국이 소련 및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함에 따라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동북아 역내 국가간 교역과 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RTA)이 없는 상태에서도 역내 국가간 상호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와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홍콩 및 대만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빠른 속도로 높아가고 있다.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동북아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현재 18.6%에 달한다. 그 가운데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GDP의 1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11.4%)의 비

<sup>42</sup> 지역주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인접국끼리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회원국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증대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중이 한국(1.7%)과 중국(4.0%)의 비중을 합한 것보다 높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앞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비중이 급증하여 2015년 8.5%에 달하고 일본의 비중은 11.5%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주목된다.<sup>43</sup>

둘째, 동북아지역은 세계의 제조업 생산에서 점유하는 비중도 중국을 중심으로 확대일로에 있어 ‘세계의 공장’, ‘세계의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표 II-2> 참조). 이러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동북아의 위상은 향후 중국경제의 부상과 함께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2> 전 세계 제조업에서 동북아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자동차(2004)	휴대전화(2005)	퍼스컴(2005)	반도체(2004)
일본	45.8	6.2	2.6	18.4
중국	22.1	35.0	83.5	2.9
한국	15.1	26.0	3.0	12.8
대만	-	6.0	5.3	14.3
홍콩	-	-	-	0.1
동북아	83.0	73.2	94.4	48.5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通商白書 2005』, pp. 62~63.

셋째, 동북아지역은 전 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현재 동북아지역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에 달했다. 그 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20.5%와 18.8%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았다. 특히 한·중·일 3국이 전

<sup>43</sup> 일본 경제산업성, 『通商白書 2005』, p. 60.

세계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8%와 13.3%를 기록하였다. 일본이 전 세계 교역에서 점하는 비중은 5.5%(수출 6.3%, 수입 4.9%)인 반면, 중국은 6.5%(수출 6.6%, 수입 6.0%)를 차지하여 일본보다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가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수출 2.8%, 수입 2.4%)를 기록하였다.

한편 2004년 현재 동북아지역이 전 세계의 외국인 직접투자(Inward FDI) 및 해외 직접투자(Outward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1%와 11.6%이었다. 주요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은 중국과 홍콩이 각각 9.4%와 5.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해외 직접투자 공여국으로는 홍콩과 일본이 각각 5.4%와 4.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4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한 비중은 1.2%였고,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비중은 0.7%를 기록하였다(<표 II-3> 참조).

<표 II-3> 세계 교역과 투자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2004년)  
(단위 : %)

	교역	수출	수입	외국인 직접투자	해외 직접투자	국내총생산 (GDP)
동북아	19.6	20.5	18.8	19.1	11.6	18.6
한·중·일	14.5	15.8	13.3	11.7	5.1	17.1
한국	2.6	2.8	2.4	1.2	0.7	1.7
중국	6.5	6.6	6.0	9.4	0.2	4.0
일본	5.5	6.3	4.9	1.2	4.2	11.4

출처: 이창재 외, 『동북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KIEP, 2005. 12), p. 25와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May 2006을 이용하여 재작성.

주 : 동북아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홍콩, 대만을 말함.

넷째, 동북아국가들의 역내무역 의존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지역에서 기능적 시장통합이 크게 진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동북아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31.0%에서 2004년 40.0%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한국의 총수입에서 동북아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3.8%에서 40.3%로 높아졌다. 동북아국가 중에서는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졌는데, 같은 기간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서 22.3%로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수입면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5.3%에서 12.5%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 대일 수출 비중은 13.3%에서 8.1%로 줄었으나, 대일 수입 비중은 24.8%에서 20.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총수출에서 동북아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51.4%에서 2004년 36.9%로 낮아졌다. 특히 일본의 비중이 같은 기간 17.8%에서 12.3%로 낮아진 반면, 한국의 비중은 3.6%에서 4.4%로 높아졌다. 한편 같은 기간 중국의 총수입에서 역내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에서 41.9%로 약간 늘어났지만, 대일 수입은 22.8%에서 15.8%로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6.3%에서 10.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총수출에서 역내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24.0%에서 2004년 35.5%로 크게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역내국가들의 비중도 20.9%에서 30.1%로 급증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6.2%에서 7.8%로 증가한 데 비해 대중국 수출 비중은 4.7%에서 13.1%로 급증하였고, 일본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도 같은 기간 10.1%에서 20.7%로 배증하였다.<sup>44</sup>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여타 역내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모두

<sup>44</sup>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20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역내국가들을 수출시장으로 활용하면서도 역내국가들로부터 수입은 더 하지 않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와 1997년 동아시아를 덮친 경제위기 이후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동북아시아에서는 제도적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도적 통합 논의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표 II-4> 참조),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II-4> 한·중·일 3국의 경제통합 노력

회의	날짜	주요 내용
ASEAN+3 정상회의 (마닐라)	1999.11	- 한·중·일 3국 정상 역사적 3자회담 - 3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합의
	2001	-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발전연구중심(DRC), 일본의 총합연구개발기구(NIRA)간 공동연구 시작 - 제1단계 주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중·일 3국간 무역 및 투자 증진 방안' - 2001년부터 3국간 무역 원활화 및 투자 증진 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ASEAN+3 정상회의 (브루나이)	2001.11	- 2002년부터 3국 경제·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 회의의 정례화 합의
	2002	-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정례화 시작
	2003	- 제2단계 주제: '장기적 경제전망과 중기적 정책 방향'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 프로젝트 수행
ASEAN+3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발리)	2003.10	-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 - 14개 협력활동, 3국의 업계·학계·정부 관계자들 간 '한·중·일 투자협정의 가능한 방식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 등 명시
	2006	- 3국의 업계 관계자가 포함된 한·중·일 FTA에 관한 산·학 공동연구 진행

출처: 이창재 외, 『동북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KIEP, 2005. 12), pp. 35~36에서 작성.

한편 한·중·일 3국간에는 양국 경제의 제도적 통합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한·일 FTA 협상과 한·중 FTA에 관한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한·일 FTA는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여 양국 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 경제계간 비즈니스 포럼, 산·관·학 공동연구회 등을 거쳐 2003년 12월 제1차 공식 협상이 개시되었다. 2005년 중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일 FTA협상은 2004년 11월 제6차 협상 이후 양국간 의견 대립과 과거사문제, 독도 문제 등이 겹치면서 2년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다.

한·중 FTA는 2004년 8월 양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중 FTA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였고, 중국 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이 양국의 간사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한·중 FTA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sup>45</sup>

결국 동북아 역내에서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교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통합을 위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남북한 관계, 영토 및 과거사 문제로 인한 반일감정, 중·일간의 패권경쟁 구도 등 외교안보 현안들 및 3국의 동북아가 아닌 역외국들과 FTA 체결 경쟁, 중국의 ‘중화경제권’ 구축 정책과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축 정책 간의 대립 등으로 제도적 통합 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sup>45</sup> 박재욱,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 실태와 전망』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2006. 9. 29).

## 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 제고

다자간 안보협력은 협력안보<sup>46</sup>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데 참여국의 공동 관심사의 개발 및 논의를 통하여 국가 행동양식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분쟁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역내 국가간의 안보정책 대화의 관습화 및 제도화를 도모하고, 공통규범의 공유를 추구할 경우 안보레짐(regime)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sup>47</sup>.

첫째,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역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안보영역 즉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테러, 마약, 첨단기술 등 다양한 안보영역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sup>46</sup> 협력안보는 대립구조가 불명확하고 안보적 불안정성이 잠재하는 지역에서 분쟁의 발생 소지 및 불안요인을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사전에 방지·제거하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적 성향이 강한 개념이다. 따라서 협력안보는 역내 국가간 안보정책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및 안보대화의 관습화 및 제도화, 신뢰양성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s), 안전보장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및 비군사적 수단의 전략적 활용, 예방외교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안보협력 레짐의 형성을 추구한다. 말하자면, 협력안보는 특정한 안보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① 불특정의 잠재적 위협이 현재화(顯在化)하여 군사적 충돌로 악화되는 것을 정치·군사적 신뢰의 축적 등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②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며, ③ 군사적 충돌의 발발시에는 그 규모를 한정시킬 수 있는 틀의 구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협력안보가 군사적 침략이나 분쟁의 발발한 후에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협력안보는 분쟁발생 이후에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장치로서 동맹이나 집단 안전보장을 필요로 한다. 즉 협력안보는 동맹이나 집단안전보장처럼 강제력에 의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대결안보(confrontational security)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쟁억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sup>47</sup> 배정호, 위의 책; 김계동, “다자안보기구의 유형별 비교연구: 유럽통합과정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1호 (1994); 문수언 외,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국제정치논총』 제37집 3호 (1998);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다자간 안보협체의와 상호보완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둘째, 그와 같은 포괄적 협의를 통하여 역내 안보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또 역내 국가간 안보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제를 개발하며, 공동의 안보영역이 확대되도록 한다.

셋째, 안보의 상호의존 및 상호신뢰의 증대를 통하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간 상호의존과 통합이 촉진·강화되도록 한다.

넷째,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및 국방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군사정보의 교환 및 군 인사의 교류를 주선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및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군사적 신뢰가 축적되도록 한다.

다섯째, 그와 같은 운용적 신뢰구축과 더불어 구조적 군비통제의 실현이 추구되도록 하고, 아울러 분쟁방지를 위한 예방외교의 수행을 위하여 사실 조사 활동(fact finding)이 시행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다자안보레짐이 유럽의 경우에는 1975년에 설립된 유럽 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가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1995년에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로 확대·발전되어 기능중이다. 즉, 유럽에서는 집단방위를 피하는 다자동맹인 NATO가 핵심적인 안전보장 장치로 기능하고, 협력안보의 틀인 OSCE는 이를 보완적인 안전보장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북아지역에는 다자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주창해 왔지만, Track 2 또는 Track 1.5 형태의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sup>48</sup> 중국·러시아·

중앙아시아 3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 공화국-이 참가하는 소위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등이 상호신뢰구축 및 안보협력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을 논의하는 장은 아니지만,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미·일·중·러·북 6개국이 참가하는 6자회담이 있다.

한·일 등 역내국가들이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레짐으로 발전되기를 바랐지만,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단행으로 존재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즉, 동북아 지역은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현재 동북아 지역의 다자 안보협력 레짐은 아직 초보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을 구축하는 것은 역내국가들의 주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sup>48</sup> ‘동북아협력대화’(NEACD)는 1993년 3월의 북한의 NPT 탈퇴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긴장고조와 동년 7월의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New Pacific Community’ 구상발표를 계기로 동년 10월 미국 국무부의 지원아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 분교의 ‘세계 분쟁 및 협력 연구소’(IGCC: Institute for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를 중심으로 창설되었다. NEACD는 세계분쟁협력연구소(IGCC)의 주도아래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의 외교·안보 및 군사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참가하는 準정부기구의 협의체이다. 즉, 각국마다 외무부와 국방부를 대표하는 고위 실무자 각 1명, 현역 군인 1명, 민간기관·두뇌집단·대학의 전문가 또는 학자 2명을 포함한 5명의 대표단이 NEACD에 참가하고 있으므로, NEACD는 참가자의 실질적인 구성을 볼 때, 準정부기구로서 Track 1.5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NEACD는 동북아국가들간의 상호신뢰와 보장의 토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군사분야의 각종 조치들을 포함하면서도 기기에 국한되지 않은 ‘상호재보장조치’(MRMs: Mutual Reassurance Measures)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소지역(sub-region) 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 즉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과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엄태암, “동북아 6자회담의 실효적 추진방안,” 유재건 편저,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서울: 나남, 1999).

그러나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 이어 9·11테러에 의한 안보환경의 질적 변화로 인하여 동북아 지역의 다자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역내 국가들의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는 역내 강대국 간의 세력관계의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존의 냉전적 구도와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에 기인한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고,<sup>49</sup> 안보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안보위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전통적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테러리즘, 마약, 생태계의 파괴·변화에 의한 거대한 자연 재앙, 인권, 국제조직 범죄, 사이버 테러, 해적 행위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9·11테러와 같이 무차별적 목표를 대상으로 시간·공간·수단의 구분 없이 가해지는 국제테러가 21세기의 새로운 주목되는 안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국경을 초월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의 영역에 속하는 안보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즉, 동북아 역내 관련 국가들은 국제적 성향을 지닌 포괄적 안보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조정과 협력을 위한 ‘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더불어 역내 국가들의 다자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

<sup>49</sup> 정진위,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서울: 법문사, 1998).

## 다. 글로벌경제속의 미·중의 경제적 상호의존

미국과 중국은 1972년 수교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양측 경제관계는 전무하였다. 1978년 문화혁명의 잔재를 청산하고 덩샤오핑(鄧小平) 체제가 확립되자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에 의한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현대화를 위해 서방국가들로부터 자본·기술 도입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중국은 1979년 1월 1일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1980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에 가입하였다. 국교 수립 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을 정상적인 무역 상대국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80년부터 매년 의회 심사를 거쳐 중국에 대한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hip: NTR) 지위를 갱신해왔다. 그리고 NTR 지위를 갱신해주는 조건으로 중국에 대해 시장개방은 물론 인권·종교자유·대만문제·대량살상무기 수출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요구해왔다. 중국은 1986년부터 GATT 가입을 모색하였지만, 미국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국의 GATT/WTO가입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sup>50</sup>

1980년대 미·중 양국관계는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대체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가

---

<sup>50</sup>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1947년 차별 없는 무역제도 하에서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조약이었다. GATT는 제8차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결과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라는 새로운 국제조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과거의 GATT는 상품만 관할하고 있어 보복 조치도 상품 분야에 대해서만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적었다. WTO 하에서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어느 분야에서든지 서로 교차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그 실효성이 증대되었다.

발생하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일련의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그러나 미·중간 통상관계는 정치·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1988년 35억달러, 1989년 62억 달러, 1990년 104억 달러, 1991년에는 150억 달러에 달했다.<sup>51</sup> 천안문 사태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중국은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걸프전이 발발하자 이라크를 비난하며 미국과 외교관계 회복을 모색하였다. 그 후 1991년 11월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는 다시 정상화되었다. 1991년 말에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대소 견제를 위한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축소되었지만 동아시아 안보구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및 국제현안 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오고 있다.

1992년 초 덩샤오핑은 남방지역을 시찰하며 중국이 소련과 같은 붕괴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원칙에 입각하여 개혁·개방과 현대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후 1992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정책목표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위해 기업·유통·가격·재정·세제·금융 등 다방면에 걸친 개혁을 가속화하였다.<sup>52</sup>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자 대외무역에 관여한 기업들도 자율경영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경영혁신을 단행했다.<sup>53</sup> 그 후 중국은 수출상품에 대한 국가규제 완화, 수입조절세 폐지 등을 취하며 법과 제도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

<sup>51</su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p. 152 참조.

<sup>52</sup> 임양택, 『아시아 대예측』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9), pp. 90~91 참조.

<sup>53</sup> 오용석, 『현대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서울: 나남출판, 2004), pp. 291~295 참조.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경제체제가 새로이 정립되자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 결과 미·중간 수출입이 급성장하여 총교역량은 1990년 200억 달러 수준에서 2000년 1,200억 달러 수준으로 6배 확대되었다.

<표 II-5> 미·중 무역추이(1980년~2005년)

(단위: 억\$)

	1980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37.5	48.1	118	143	131	163	192	221	284	347	418
수입	11.6	152.2	456	712	818	1,000	1,023	1,252	1,524	1,967	2,435
총액	47.1	200.3	574	855	949	1,163	1,215	1,473	1,808	2,314	2,853
변화율 (%)	-	-	193	134	110	226	45	212	227	280	233
무역수지	+25.9	-104.1	-338	-569	-887	-837	-831	-1,031	-1,240	-1,620	-2,017

출처: John Frisbie and Michael Overmyer, "U.S.-China Economic Relations: The Next Stage," Current History (September 2006), p. 244; 1980년, 1990년 자료는 한광수, "위안화 환율변동과 미·중 통상 관계," 『현대중국연구』 제8집 1호 (2006), p. 146 재인용.

중국이 사회적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후 미·중간에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더불어 정치적 협력관계도 긴밀해졌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미·중관계는 대만문제, 중국내 인권문제, 중국의 미사일 수출, 무역마찰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제 관계에 적극 개입하며,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켰

다.<sup>54</sup>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포괄적 개입정책을 실시하여 양국간 공동협력 영역을 꾸준히 확대하였다. 그 결과 1997년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건설적 전략 동반자 관계’임을 선언하고 정상회담 정례화, 군사분야 협력, 워싱턴과 베이징간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1998년 6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재확인하고 그 실천적 조치로서 전략 핵심사업 상호조준 해제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에 합의하여 양국이 함께 설 수 있는 공동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1999년부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관련된 쌍무적 협상을 진행하며, 2000년 10월 중국에 대해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를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sup>55</sup> 그 후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공식 가입하게 되자 미·중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수출보조금을 감축하였다. 그리고 WTO에 가입한 후 규정에 따라 관세를 더욱 인하하고 수입쿼터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시장개방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미·중간 교역도 확대되어 미국은 중국의 제2위 무역상대국, 중국은 미국의 제3위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3년간 미국의 수출은 81%, 수입은 92% 증가하였다. 2005년 미국의 수출은 418억 달러, 수입은 2,43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제1 수출 대상국이 되었

<sup>54</sup>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sup>55</sup> 문준조, 『중국의 WTO 가입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1), pp. 21~32.

다.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상품은 신발, 장난감, 섬유, 의류, 목재가구 등 노동집약적 제품과 TV세트, DVD, 휴대폰 등과 같은 기술집약적 인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중국산 제품이 빠른 속도로 미국시장에 진출하게 된 요인은 대형 도매업체들이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시장구조와 관련 있다. 즉, 월마트와 같은 대형업체들이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최저가로 판매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6</sup>

한편, 교역의 증대와 함께 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여 미국의 500대 기업 중 300여개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2005년 총 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이루어 졌고, 1979년부터 누적된 총 투자액은 520억 달러에 달한다.<sup>57</sup>

미국과 중국은 경제협력을 통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미국 기업의 직접투자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고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지수를 낮추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싼 원료를 공급받아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경제성장에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은 제품에 대한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써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통상마찰이 증가되고 있다.

2001년 831억 달러에 달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2005년 2,017억 달러로 2.4배 확대되었다. 미·중 간 무역 불균형을 바라보는

---

<sup>56</sup> Oded Shenkar, *The Chinese Century: The Rising Chinese Economy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the Balance of Power, and Your Job* (N. J.: Pearson Education, Inc. 2005); 김민주·전세경 옮김, 『중국의 세기』 (서울: 렉스미디어, 2006), p. 35 참조.

<sup>57</sup> John Frisbie and Michael Overmyer, "U.S.-China Economic Relations: The Next Stage," *Current History* (September 2006), p. 243.

미국의 시각은 주로 중국정부에 의하여 조작된 위안화 환율 탓이라는 주장하고 있다.<sup>58</sup> 즉, 중국 정부가 수출에 유리하도록 위안(元)화의 환율을 저가 평가한 상태에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무역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중국측의 덤핑 판매, 지적 재산권 침해, 수출 보조금 정책 등이 양국간 공정무역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 환율이 시장에서 자동조절될 수 있도록 자동변동환율제로의 전환, 지적 재산권 보장, 중국 정부의 정책 투명성 확대, 중국제품의 국제표준 규격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압력을 받고 있는 미 의회는 위안화 절상 압력책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 27.5%를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등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59</sup>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위안화 가치를 3~5% 상향조정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대, 항공기 등 미국산 전자제품 구매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며 미국측의 압력을 해소시키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은 거부하고 있다. 대신 정부 정책의 투명성 제고, 규제 완화,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미국의 압력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국제무역의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단지 중국만의 탓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 2,017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그 해 미국

<sup>58</sup> 한광수, “위안화 환율변동과 미·중 통상 관계: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8집 1호 (2006), pp. 149~154 참조.

<sup>59</sup>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pp. 185~188 참조.

의 대외 무역적자 총액의 26%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을 통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사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상당 부분 경제적 세계화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결과이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대미 수출을 추진해 온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에 수출품을 만들던 제조업 기반들을 중국으로 많이 이전시켰다. 미국의 대외 무역수지 적자에서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던 비율이 1996년에서 2005년 사이에 42%에서 18%로 감소하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23%에서 26%로 3%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sup>60</sup> 실제로 2003년 이후 중국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 증대는 대부분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자제품 조립 공장을 중국에 이전한 결과이다.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미국 기업들의 매출액도 중국의 수출로 기록되어 미·중간 무역 불균형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무역마찰도 증대하고 있지만 이는 일정 부분 경제적 세계화의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양국의 무역마찰은 협상을 통해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양국의 통상마찰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되어 WTO 질서 안에서 정상적인 교역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는 미국의 자본·기술 그리고 시장에 의존해 있고, 미국 경제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양국 경제가 밀접하게 상호 연계되어 공동 발전을 모색하게 되면 정치·외교적 협력을 유도해 내는 파급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지도층은 안보문제에 관해

<sup>60</sup> John Frisbie and Michael Overmyer, "U.S.-China Economic Relations: The Next Stage," *Current History* (September 2006), pp. 246~247 참조.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경제협력이 정치적 유대를 자동적으로 강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 경제가 현재와 같이 연평균 9%대의 고성장을 지속하면 2020년 이후에는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시하고 이를 경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61</sup> 중국 또한 자국의 패권국가로의 발전을 견제하며 전략적 포위 구도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향후 15년 후에는 미·중간에 경제협력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 증대는 정치적 협력관계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후퇴를 방지하는 제어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중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 증대가 안보차원의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정치·외교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적 파급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국가 안보차원의 충돌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sup>62</sup>

---

<sup>61</sup>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Mapping the Global Future: Repor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s 2020 Project* (December 2004), pp. 30~31.

<sup>62</sup> 예즈칭 지음, 이우재 옮김,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 북스), p. 351 참조.



# III

##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대북전략



## 1. 미국의 동북아전략

### 가. 안보분야

#### (1)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월 20일 취임 직후 국방력 증진, 힘을 통한 국익확보, 미국식 국제주의 등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강조하며 미사일 방어(MD)체제 구축에 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였다. 한편, 미 국방부는 군사·안보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①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략 중심축 이동, ② 해외 기지 등 전방배치 전력 감축, ③ 정보력 절대 우위 유지, ④ 군사력 기동성 강화 및 경량화 등 4대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국방정책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전략틀로서는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MD, 일방적인 핵무기 감축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sup>63</sup>

2001년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고 불량국가들의 정권 교체까지 도모하는 공세적인 안보전략을 제시하였다.<sup>64</sup> 미국은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실시하여 탈레반 정권을 궤멸시키고, 2003년 3월 19일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새롭게 부각된 미국의 공세적인 안보전략은 주로 중동지역에서 그 실효성을 발휘하고

<sup>63</sup> 2001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국무부 부장관이 밝힌 내용. 『조선일보』, 2001년 5월 11일 참조.

<sup>64</sup>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www.whitehouse.gov/nsc/nss.html](http://www.whitehouse.gov/nsc/nss.html)>.

있다. 지정학적으로 기존 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고착되어 있으면서도 미·일·중·러 상호 관계가 특정 이슈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유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보다 전통적인 세력균형정책이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10만 명의 미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자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역내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역내 평화유지와 더불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균형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한국·호주 등 우방국과 양자간 안보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아·태지역에 민주화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인도·러시아 가운데 어느 나라도 지역 패권국이 되지 않도록 세력균형을 유지한다는 기본구도 하에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여 중국 주변에 군사력 배치를 증강시키고 있다.

## (2) 동맹관계 재정립과 미군 재배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21세기 아시아전략의 요체로 설정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여 안보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면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끌어 올려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부담뿐만 아니라 권한까지 분담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sup>65</sup> 아울러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측에 MD체제 구축에 적극 참여, 자위대 관련 유사법제의 정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제정 등을

---

<sup>65</sup> Richard L. Armitage et. a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INSS Special Report (October 11, 2000) <[www.ndu.edu/inss/press/Specialreports/SR\\_JAPAN.HTM](http://www.ndu.edu/inss/press/Specialreports/SR_JAPAN.HTM)>.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측 요구에 대해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내각은 유사법제를 정비하고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적극 호응하였다.

9·11사태 이후 미국은 일본에 대해 반테러 전쟁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당시 일본은 자위대 함정을 인도양에 파견하여 미군에 대한 물자보급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라크와의 전쟁 과정에서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중동지역으로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9·11사태 이후 선제공격 위주의 반테러 안보전략은 해외주둔 미군부대를 소규모 기동군 형태로 재편성하도록 촉진시켰다. 특히 이라크 전쟁은 우호국가와 적대국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질서에 정착되었던 미국의 동맹전략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맹방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자, 미국은 영국과 스페인을 주축으로 다국적군을 형성하고 터키, 폴란드, 파키스탄 등의 지원을 받아 군사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동맹관계의 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해외주둔 미군부대의 형태·규모·능력 및 군사동맹의 성격까지 재정비하는 「지구적방위태세검토」(Global Posture Review: GPR)로 명명된 재편작업을 촉진시켰다.<sup>66</sup>

GPR은 해외배치 미군을 주둔군 개념에서 벗어나 기동군 개념으로

---

<sup>66</sup> Douglas J. Feith,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Transforming the U.S. Global Defense Posture* (December 3, 2003) <[www.defenselink.mil/speeches/2003/sp20031203-0722.htm](http://www.defenselink.mil/speeches/2003/sp20031203-0722.htm)>.

전환하고 기동화·신속화·경량화하여 원거리 투사능력을 갖추도록 재편성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군의 군사변혁과 함께 동맹국의 획기적인 전력증강 및 역할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GPR의 전략적 구상에 입각하여 미국은 일본 및 한국 정부와 동맹체제의 재편성 및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위한 협상을 전개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2003년 2월부터 주일미군 재편협상을 진행하였다.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2005년 2월 19일 미·일동맹의 세계화와 더불어 양국의 전략적 상호의존관계를 구체화시킨 공통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양국의 전략목표는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협력활동, 자유민주주의 기본가치 추구, 테러 근절 및 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미·일 파트너십 강화를 규정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는 일본의 안전 확보, 북한 문제들의 평화적 해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후 양국은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sup>67</sup> 2006년 5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시기를 제시하였다.

주일미군 재편 계획은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군단과 사단의 중간 규모인 미래형 사단의 거점사령부(UEX)로 재편하고, 2008년까지 일본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하여 유사시 주일 미 육·해·공군의 통합작전을 지휘하는 거점이 된다. 요코다 기지에 병치된 미 제5공군 사령부와 항공총대사령부는 ‘공동통합운용조정소’를 창설하여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동아시아 MD 사령부 역할을 수행한

---

<sup>67</sup>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Document, *U.S.-Japan Alliance: Transformation and Realignment for the Future* (October 29, 2005) <[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cc/doc0510.htm](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cc/doc0510.htm)>.

다.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제3해병기동전개부대 사령부는 미국 영토인 괌(Guam)으로 이전하고, 기타 해병부대는 재편된 해병기동전개여단으로 축소된다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일동맹 변혁과 재편의 특징은 군사협력 긴밀화 및 동맹능력의 강화로 규정할 수 있는 데, 군사협력 긴밀화는 미·일 사령부 사이의 연계 강화, 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 운용성 확보, 기지 공동 이용 및 공동 훈련 실시 등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주일미군과 자위대 재편 계획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은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과 거의 동시에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을 전개하였다. 미국은 한국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을 연구하기 위한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2003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2차례 개최된 FOTA회의를 통하여 용산기지 이전 및 미 2사단 재배치, 10대 군사임무 전환, 연합군사능력 발전 등에 합의하였다.<sup>68</sup> 그 결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용산기지는 유엔사와 연합사를 포함하여 2008년 말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고, 미 2사단 재배치는 1단계로 2006년까지 한강 이북의 군소기지들을 동두천·의정부 지역으로 통합하며, 2단계로 한강 이북의 주요부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한·미 양국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이라는 새로운 회의체를 구성하여 한·미 군사지휘관계 조정을 포함한 동맹조정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2월 제1차 SPI 회의가

<sup>68</sup>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uture of the ROK-U.S. Alliance's Policy Initiative) 회의 내용은 국방부, 『보도자료』 2003. 3~2004. 8 <[www.mnd.go.kr/webmodule/htsboard/hbd/hbdlst.jsp?typeID](http://www.mnd.go.kr/webmodule/htsboard/hbd/hbdlst.jsp?typeID)> 참조.

개최된 후 1~2단계의 공동연구가 마무리되자, 2005년 9월 제4차 SPI 회의에서 양측은 작전통제권에 관한 논의를 ‘적절히 가속화’하자는데 입장을 같이하였다. 2006년 10월 20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양측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며, 이러한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sup>69</sup>

미국은 일본·한국과 3년간의 협상을 통하여 미군 재배치 계획을 확정짓고 일본·한국과 동맹관계를 재정립하였다. 미국은 특히 일본과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함께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여 일본의 군사적 활동범위는 미국과의 협력아래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미·일 양국은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 공통의 전략목표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건설적 역할, 중·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 증대” 등을 명시함으로써 중국을 잠재적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여 공동 대처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동맹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공통의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 단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 받기를 원했다. 즉,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신속히 파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문제에 합의하였다.<sup>70</sup> 이번 합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sup>69</sup>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06년 10월 20일 참조.

<sup>70</sup> 외교통상부, “2006년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전략적 유연성 설명자료” (2006. 1. 22)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되,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 (3)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

미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고도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적절한 대응전략을 추진하지 않으면,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파괴적인 군사 기술을 배치하고 군사적으로 경쟁할 큰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71</sup>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패권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함께 MD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동남아와 중아아시아지역에 미군을 파견하여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국방정책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개된 국방예산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6년도 국방비가 전년보다 14.7% 증가된 350억 달러라고 공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700억 달러에서 1,05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72</sup> 또한 중국의 전략무기 현대화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며 범위도 확대되어 이미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변경시키고 있다고 강조한다. 중국은 현재 미국을 목표로 한 CSS-4 대

---

<[www.mofat.go.kr/mofat/mk\\_a008/1197362\\_5496.html](http://www.mofat.go.kr/mofat/mk_a008/1197362_5496.html)>.

<sup>71</sup>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6, 2006), p. 29.

<sup>72</sup>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6* (2006. 5. 23), pp. 19~21.

륙간탄도미사일(ICBM) 20여기, 아시아지역을 목표로 한 CSS-3 ICBM 20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2010년에는 이 외에도 CSS-5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동풍 31호(DF-31), JL-2s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73</sup> 아울러 중국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무기체계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미군의 기지사용 협정을 체결하고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sup>74</sup> 이들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의 세력이 팽창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중국과의 해양 분쟁이 빈번해지자 미군의 존재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한편, 미국은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했다. 2003년 말 이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키르기스스탄에는 1,000여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타지키스탄에는 공군기지를 유지하고 있다.<sup>75</sup>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군의 진출은 중국과 러시아의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영향권에 포섭하기 위해 중국과 치열한 외교 경쟁을 벌였다.<sup>76</sup> 미국은 2005년

---

<sup>73</sup>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6* (2006. 5. 23), pp. 26~27.

<sup>74</sup> 한국국방연구원, 『2005~2006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6), pp. 106~107 참조.

<sup>75</sup> 위의 책, pp. 99~100 참조.

<sup>76</sup> 2005년 4월 9~13일 원자바오 총리는 인도를 방문하여 싱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1962년 국경분쟁 이후 소원해진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국경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4월 22일 국방대표단을 인도에 파견하여 F-16전투기 판매 등 군사 지원 의향을 전달하고 핵·에너지 분야 협력도 제의하였다. 그 후 싱 (Manmohan Singh) 인도 총리를 워싱턴에 초청하여 2005년 7월 18일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핵협력 협정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 비군사적 핵시설의 사찰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차원의 핵기술과 연료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NPT에 참여하지 않은 인도와 핵협력 협정을 체결하자 미국이 스스로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인도를 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6년 3월 1일 인도를 방문하여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경제협력과 국방협력을 증진시키며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sup>77</sup> 한편, 파키스탄도 미국에 대해 인도와의 협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파키스탄이 핵·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킨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따른 직접적인 마찰은 주로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며, 대만의 분리 독립을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대만에 첨단무기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2005년 2월 미·일 양국이 ‘중·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통의 전략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자, 중국은 이에 크게 반발하여 동년 3월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규정하였다. 반국가분열법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외국 군대가 대만에 주둔할 경우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국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sup>77</sup> The White House, *U.S.-India Joint Statement* (March 2, 2006).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등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훼손할 경우, 대만 방어를 위해 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을 방지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위상이 크게 추락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대만이 중국에 흡수통일 될 경우 중국의 해양진출을 우려한 일본이 핵무장을 포함한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sup>78</sup>

#### (4) 대중국 외교의 협력과 견제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두 가지 대립되는 경향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군사·안보전략 차원에서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하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동맹체제를 발전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과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한편, 외교적 접촉을 확대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가치를 확산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억제와 접촉이라는 이중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sup>79</sup>

미국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테러와의 전쟁 등 세계적인 문제와 북한의 핵개발 억제 등 동북아 지역 차원의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 가능성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며 추진되고 있는 군사·안보전략과

<sup>78</sup> Kerry B. Dumbaugh, *Taiwan-U.S. Political Relations: New Strains and Change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October 10, 2006), pp. 4~5.

<sup>79</sup> 예즈칭 지음, 이우재 옮김, 『중국 세계전략』 (서울: 21세기 북스, 2005) p. 283 참조.

는 별개로 9·11테러 사태 이후 미·중간의 정치·외교적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다.

미국은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 후 중동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하게 된 미국은 대외정책의 기초를 반테러 국제연대에 두고 중국에 대해서 현실주의적 타협 자세를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0월 21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 장쩌민 중국 주석과 개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가 아닌 지역 강대국으로 존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 후 미국과 중국은 지도층 인사들의 빈번한 상호 교환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켰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줄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직후 2002년 10월 25일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sup>80</sup> 이 회담에서 양국정상은 차관급 국방협의회를 2년 만에 재개하고 군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당시 부시 대통령은 장쩌민 주석에게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며, 향후 미·중관계 관계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협조하는 데 크게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다.<sup>81</sup>

<sup>80</sup> The White House, *President Bush, Chinese President Jiang Zemin Discuss Iraq, N. Korea*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2/10/20021025.html](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2/10/20021025.html)>.

<sup>81</sup> Steven R. Weisman, "North Korea seen as ready to agree to wider meetings," *The New York Times*, August 1, 2003.

2003년 3월 19일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중국은 베이징에서 2003년 4월 23~25일 미국·북한·중국 3자회담을 중재하였다. 그 후 중국은 2003년 8월 27~29일 남북한과 미·일·중·러 6개국이 참여한 1차 6자회담을 중재하고 이를 계속 주관해 왔다. 양국의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후진타오 주석은 2004년 11월 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시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략대화 성격을 가진 미·중간 고위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제1차 미·중 고위급회담(Senior Dialogue)이 2005년 8월 1~2일 북경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차관급 전략회담으로 미국측에서는 졸릭(Robert Zoellick) 미 국무부 부장관, 중국측에서는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부 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양국 대표들은 이 회담에서 군사·에너지·테러리즘·통상·대만·민주화·인권 문제 등 양국간 현안 및 국제안보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졸릭 부장관은 중국측에 국제체제 유지에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행동할 것을 강조하고, 미국 내에서도 미·중간 협력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sup>82</sup> 그 후 졸릭 부장관과 다이빙귀 부부장은 워싱턴에서 2005년 12월 7~8일 제2차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2차 회담에서 양국은 다시 인권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하고 번영된 세계를 위한 협력방안, 이란·아프가니스탄·북한 문제 등에 관한 협력방안, 테러리즘·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너지 안보 협력, 그리고 무역수지 불균형 및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sup>82</sup> USINFO.STATE.GOV, *U.S. Wants Deeper Cooperation With China, State's Zoellick Says* (August 3, 2005).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한 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협력관계는 긴밀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대북제재 결의 1695호를 채택하자,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며 탈북자·위폐 문제등과 관련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후 중국은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미·중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미·중간 제3차 고위급회담이 2006년 11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sup>83</sup> 이번 회담은 번즈(Nicholas Burns) 미 국무부 차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공동 주재하였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간 공통 관심사 및 국제현안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였다. 번스 국무차관은 북한 핵문제가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정면의 정중앙(front and center)에 있는 문제라며 중국측에 이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sup>84</sup> 이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개최된 미·중 고위급 회담의 성격을 미 국무부는 양국이 공유하는 미래의 공동이익에 관한 전략적 개념들에 관한 논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호개방(open door)적인 개입정책’과 ‘중국 위협론’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대중국정책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고 있다.<sup>85</sup>

<sup>83</sup> 제3차 미·중 고위급회담은 당초 2006년 상반기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졸릭 부장관이 갑자기 사임하여 지연되었다.

<sup>84</sup> Nicholas Burns,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Testimony to the House Inter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November 15, 2006).

<sup>85</sup> Kerry B. Dumbaugh, *China-U.S. Relations: Current Issues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Updated September 22, 2006), p. 5.

## 나. 경제분야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일반무역관세협정(GATT),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을 창설하고 이들 국제기구들을 통하여 세계경제질서를 유지해 왔다. 또한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계 각국과 직접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시켜 왔다. 미국의 동아시아 경제정책은 무역·투자 자유화 등을 통해 역내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확보하는 데 있다. 아울러 방대한 미국 시장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개방하여 이들의 경제성장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특히 일본·한국·중국의 경제성장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며 달성되었다.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질서를 옹호해 온 미국은 아·태지역 국가들에 의한 배타적인 아시아 경제권 형성에 반대해 왔다. 1989년 오스트레일리아 호크(R. J. L. Hawke) 수상이 미국을 제외한 APEC 창립을 제안하였을 때 미국은 자국이 배제된 지역협력체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하였다. APEC은 결국 1989년 미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아·태지역의 경제협의체로 발족하였다. 한편, 1990년 말레이시아 마하틸(Mahathir Mohamad) 수상이 ASEAN<sup>86</sup>과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만의 동아시아경제그룹(East Asian Economic Group: EAEG) 형성방안을 제시하자 미국은 이를 배타적인 아시아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그리고 일본·한국이 마하틸 수상의 EAEG 제안에 동조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독자적인 경제협의체

---

<sup>86</sup> ASEAN은 부르네이·버마·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성을 저지하였다.<sup>87</sup>

APEC은 설립 후 4년 동안 비공식적인 장관급 상담기구로서 진행되었다. APEC의 발전방향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무역확대 및 경제·기술협력을 촉진시키는 기구로 활용되기를 원했다. 한편 미국은 APEC을 GATT의 맥락에서 아·태지역의 자유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기구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1993년 시애틀 회의에서 미국은 APEC을 아·태지역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고 사무국도 설립하여 이를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공식적 기구로 발전시켰다. 미국 주도하에 APEC 회원국들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Bogor)회담에서 선진국들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은 2020년까지 자유무역을 확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미국은 APEC 국가들에게 보고르 선언에 따라 일방적으로 자유무역과 투자자유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이미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유무역과 투자자유화 조치는 유럽연합(EU)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하였다.<sup>88</sup>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이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경제협력기구로서 APEC의 기능은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다.<sup>89</sup>

1997년 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한국·말레이시아·필리핀 등으로 확산되어 갔다. 아시아금융위기에 대해 미국은 국제통

---

<sup>87</sup> Arvind Panagariya, *Regionalism in Trade Policy: Essays on Preferential Trading* (Singapore: World Scientific, 1999), pp. 160~161.

<sup>88</sup> John Ravenhill, "APEC adrift: implications for economic regionalism in Asia and the Pacific," *The Pacific Review*, Vol. 13, No. 2 (2000), p. 322.

<sup>89</sup> 미국은 APEC을 단순한 경제협력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태지역 안보공동체로 전화해 나가는 구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배극찬, "미국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여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 4. 28), p. 8 참조.

화기금(IMF)을 통해 지원을 받으라고 주장하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IMF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서구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시장 개방과 급격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건을 내세우며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 IMF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 설립을 제안하였다. 당시 일본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긴급재정 지원을 위해 1,000억 달러 기금을 갖춘 아시아통화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하였고 대부분 동아시아국가들도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아시아통화기금이 설립되면 IMF체제의 권위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다.<sup>90</sup>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아시아 국가들만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997년 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ASEAN Plus Three: APT)은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 하였다. 이는 사실상 말레이시아 마하틸 수상이 주장해 온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형성을 의미한 것이었다. 1999년 APT 정상회의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간의 경제유대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공동화폐 및 공동시장 구축을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sup>91</sup> 그 후 ASEAN 국가들과 일본·한국·중국 등은 양자간 자유무역시대(Free Trade

<sup>90</sup> David P. Rapk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power to block: the APEC and AMF cases," *The Pacific Review*, Vol. 14, No. 3 (2001), pp. 373~410.

<sup>91</sup> John Ravenhill, "APEC adrift: implications for economic regionalism in Asia and the Pacific," p. 330.

Area: FTA) 형성을 추진하며 경제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모색해 온 13개국은 2004년 11월 제8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2005년 말레이시아에서 첫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를 열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ASEAN+3가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제도화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과 동남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독자적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형성되면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된 반면,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3개국은 역사적으로 상호 견제해 왔고 안보차원의 이익도 각기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에 자유무역지대 형성 이상의 경제통합은 쉽게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는 표명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EAS는 출범하기 이전부터 각국의 이해가 달라 참가범위를 확정짓지 못했다. 특히 일본과 중국 사이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로 참가 범위를 한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미국·러시아 등 역외 국가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대립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2005년 12월 14일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EAS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이 회의에 ASEAN+3 이외에 동아시아가 아닌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정상이 참석하여 회의의 정체성부터 모호하게 되었다.<sup>92</sup>

1990년대 초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 이후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

<sup>92</sup> 배공찬, “미국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여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 4. 28), pp. 10~15 참조.

시장경제체제가 정착할 때까지 동아시아지역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양국이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sup>93</sup> 그러나 일본 경제가 10년간 장기침체에 빠진 반면,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를 포함한 대중화권은 무역액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아시아 경제의 허브로 급속히 발전하였다.<sup>94</sup> 특히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자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구도에서 경제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주목하게 된 미국은 안보전략 차원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동아시아 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F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2006년 2월부터 한국, 동년 6월부터 말레이시아와 FTA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2002년 ASEAN과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합의하자 미국도 양자협상을 넘어 ASEAN 전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sup>95</sup> 미국은 이와 같이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FTA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경제협상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매년 2회 최고위급 경제전략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2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인

<sup>93</sup> 한광수,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p. 130 참조

<sup>94</sup> Oded Shenkar, *The Chinese Century: The Rising Chinese Economy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the Balance of Power, and Your Job* (N. J.: Pearson Education, Inc. 2005); 김민주·전세경 옮김, 『중국의 세기』 (서울: 렉스미디아, 2006), p. 16 참조.

<sup>95</sup> Dick K. Nanto, *East Asian Regional Architecture: New Economic and Security Arrangements and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18, 2006), p. 3.

제1차 경제전략대화에는 폴슨 재무장관이 대표가 되어 백악관경제자문위원장,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sup>96</sup> 이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측에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시장 개방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2. 미국의 대북전략과 북·미관계의 변천

### (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초

2001년 1월 20일 부시 대통령과 체니(Richard Cheney) 부통령이 공식 취임하여 공화당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공화당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 및 부시(George H. Bush) 행정부에서 일한 보수주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파월(Colin Powell) 국무장관,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 라이스(Condoleezza Rice)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등 핵심적인 외교·안보정책 담당자들 모두 공화당의 보수적인 철학 및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군사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외정책은 힘을 통한 국익확보를 추구하는 현실주의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7</sup>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체제 밖에 존재하는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힘에 의한 압박정책을 통해 순응시키겠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해왔다.

<sup>96</sup> *Financial Times*, September 2006; 『중앙일보』, 2006년 11월 16일 참조.

<sup>97</sup>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Policy* (January/February 2000), pp. 45~62;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Republican Platform 2000: Renewing America's Purpose, Together* (August 3, 2000).

부시 대통령은 2001년 6월 6일 성명을 통해 공화당 행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진행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하고 북한과 협의할 의제로 ①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된 제네바합의의 이행 개선, ②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및 수출 금지, ③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위협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어 “이런 논의를 포괄적 접근의 틀에서 추진하겠다”며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제재를 완화할 것이며 기타 정치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98</sup>

부시 대통령이 선언한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된 제네바합의의 이행 개선’이란 북핵문제의 투명성을 당장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네바합의를 수정·보완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배치문제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협상의제로서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이다.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협상의제를 제시함으로써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호혜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성립된 제네바합의를 북한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파악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

북한은 2001년 6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부시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 선언에 대해 첫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미국이 의제로 제시한 핵·미사일·재래식군비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전제 조건적이며 의도에 있어서 적대적”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은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통해 우리를 무장 해제 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sup>99</sup> 또한 북·미관

<sup>98</sup> The White House, *Statement by the President* (June 6, 2001).

계에서 모든 현안의 발생근원은 북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제시한 의제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그 후에도 미국측의 회담의제 철회를 요구하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협상 자세가 클린턴 행정부 집권 마지막 시기에 취했던 수준에 이를 때에 가서야 북·미대화의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94년에 체결한 제네바 합의와 2000년 10월 12일 조명록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올브라이트(Madeleine A. Albright)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북·미 공동코뮤니케의 토대 위에서 북·미대화를 재개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sup>100</sup>

## (2) 테러와의 전쟁과 제2차 핵위기

북·미관계가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1년 9월 11일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여객기 4대를 납치하여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미 국방부 청사에 대한 동시다발 자살테러를 감행한 테러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테러 발생 직후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행위는 지극히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테러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테러참사 이후 미국은 북한의 테러반대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단순한 성명

<sup>99</sup>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2001. 6. 18 발췌),” 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서울: 연합뉴스, 2001), p. 895.

<sup>100</sup> 북·미 공동코뮤니케는 양국이 상호 적대관계를 포기하고 경제 교류·협력을 확대하며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U.S.-DPRK Joint Communiqué (October 12, 2000); 북한은 2000년 10월 12일 발표한 북·미공동선언을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역사적 외교문건으로 평가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조미관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 『로동신문』, 2000년 11월 7일 참조.

발표를 넘어서 국제테러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 일본 요도호 납치범 추방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북한이 반테러 전쟁에 적극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였다.<sup>101</sup>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후 테러와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미 국무부도 보다 강경한 대북 성명을 발표하였다. 리커(Philip T. Reeker) 국무부 부대변인은 2001년 11월 29일 외신기자들을 위한 브리핑에서 IAEA가 다른 나라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검증절차에 3년 이상 걸린다고 밝히고, KEDO에 의해 북한에 건설 중인 경수로의 핵심부품 공급시기와 일정을 맞추어 핵사찰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당장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2</sup> 그 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면 경수로 건설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북압박을 강화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연두 국정연설에서 전 세계 테러 조직 소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국가들로부터의 위협 방지를 테러와의 전쟁의 2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였다.<sup>103</sup>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 이후 럽스펠드 국방장관과 라이스 안보담당 보좌관은 북한을 미사일 장사꾼이라고 비난하며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지지하였다. 테넷(George J. Tenet) CIA 국장은 2월 6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악의 축의 일원으로 규정한 근거는 탄도미사일 위협이라고 단정하고,

<sup>101</sup> 『한겨레신문』, 2001년 10월 24일 참조.

<sup>102</sup> 『조선일보』, 2001년 12월 1일 참조.

<sup>103</sup> The White House, *President Deliver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9, 2002).

미국은 2015년경 북한·이란·이라크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sup>104</sup> 아울러 북한이 탄도미사일 완제품은 물론 원자재·부품·전문기술 등을 시리아·이란·이집트·리비아 등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월 국무장관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해야 할 시점이 됐는데도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수로 건설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은 2002년 10월 3~5일 켈리(James Kelly)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여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21개월 만에 첫 번째 공식적인 북·미대화를 가졌다. 켈리 특사는 방북시 북한 측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등 미국의 ‘안보상 우려 사항’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였다. 켈리 특사는 또한 북한이 우라늄 농축방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핵 개발 계획을 폐기해야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sup>105</sup> 이에 대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sup>106</sup> 그리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

<sup>104</sup> George J. Tenet, *Worldwide Threat-Converging Dangers in a Post 9/11 World*,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February 6, 2002) <[www.cia.gov/cia/public\\_affairs/speeches/dci\\_speech\\_02062002.html](http://www.cia.gov/cia/public_affairs/speeches/dci_speech_02062002.html)>.

<sup>105</sup>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가스원심분리기를 구입하여 자강도 희천시 하갑, 평양 인근의 평성과학기술단지내 국가과학원,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동 등의 소규모 지하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1천여 대의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핵폭탄 2개를 만들 수 있는 3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앙일보』, 2002년 10월 25일 참조.

<sup>106</sup>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02년 10월 16일 켈리 특사 방북시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Richard Boucher, Spokesman,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Press statement (October 16, 2002) <[www.state.gov/r/pa/prs/ps/2002/14432.htm](http://www.state.gov/r/pa/prs/ps/2002/14432.htm)>.

책을 포기하고 북한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면 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 개발 계획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상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안보현안 문제들을 북·미 최고위급회담을 통해 논의하자고 요구하였다.

켈리 방북 이후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제네바합의, NPT, IAEA 안전협정,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는 것은 제네바합의에 따른 당연한 의무이며 새로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후 뉴욕에서 2002년 11월 14일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는 12월분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12월 12일 제네바합의에 따라 연간 50만톤 중유 제공을 전제로 하여 취했던 핵 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 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재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sup>107</sup> 그 후 북한은 영변의 5MW급 원자로, 8,000여 개의 폐연료봉저장시설, 방사화학 실험실, 연료봉 제조시설에 설치된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의 작동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 의사를 표명하고, 2월부터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였다.<sup>108</sup>

### (3) 다자회담과 대북 압박정책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 부시 행정부 내에서 대북정책에 관해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였다. 파월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국무부

<sup>107</sup>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621호 (2002. 12. 6~12), pp. 3~4 참조.

<sup>108</sup> CIA, *Unclassified Report to Congress on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1 January Through 30 June, 2003)* <[www.cia.gov/cia/reports/721reports/jan\\_jun2003.htm](http://www.cia.gov/cia/reports/721reports/jan_jun2003.htm)>.

인사들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럽스펠드 국방장관, 체니 부통령, 볼튼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북한과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표출되자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신보수주의자들은 핵협상에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고 보다 개혁지향적인 유화적인 정권을 수립하여야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대북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sup>109</sup> 그러나 당시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사태악화는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된 부시 대통령은 일단 국무부측이 주장하는 다자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월 14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에너지와 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재강조하며, 북핵문제를 북·미 양자간 협상이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한국 등을 활용한 다자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sup>110</sup> 북한의 핵폐기는 제네바합의에 따른 당연한 의무이며 새로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먼저 핵폐기를 선언하지 않

<sup>109</sup> Nicholas Eberstadt, *Diplomatic Fantasyland: The Illusion of a Negotiated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ww.nautilus.org/forums/security/0342\\_Eberstadt.html](http://www.nautilus.org/forums/security/0342_Eberstadt.html)>; Henry S. Rowen, "Kim Jong Il Must Go," *Policy Review*, No. 121 (October & November 2003), pp. 3~16; Richard Perle and David Frum, *An End to Evil: How to Win the War on Terror* (New York: Random House, 2003), pp. 103~104.

<sup>110</sup> The White House, *President Bush Discusses Iraq* (January 14, 2003)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3/01/20030114-2.html](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3/01/20030114-2.html)>.

은 상태에서 북·미 양자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은 또한 북한을 다자협상 틀에 묶어 더 이상 핵 카드를 이용한 벼랑끝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핵 문제 해결 이후 보상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관련국에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자협상을 통해서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3월 19일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라크전에 몰입하게 된 미국은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2003년 4월 23~25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북한·중국 3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등 여타 북한관련 주요 사안 해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sup>111</sup> 북한은 핵폐기와 동시에 북한의 안보우려 사항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시 이행’ 원칙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3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각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함으로써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회담에서 이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연료봉 8,000여 개의 재처리 완료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를 더욱 자극하였다.

3자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폐막된 후 미국은 북한의 마약·위조지폐·대량살상무기 불법거래 봉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

<sup>111</sup> U.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File, *Power Says Beijing Talks Show United Opposition to Nuclear Korea* (April 25, 2003) <usembassy.state.gov/seoul/www41ai.html>.

북핵문제 논의, 탈북자 수용 입법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대북압박을 가시화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31일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차단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제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제안하였다. 그 후 6월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국·영국·스페인·프랑스·독일·이탈리아·포르투갈·네덜란드·호주·폴란드·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PSI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맹국들은 각기 국내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영해·영공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하고 있는 배와 항공기를 정선시키거나 강제 착륙시켜 조사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sup>112</sup> 그러나 PSI는 상설된 조직을 가진 국제기구가 아니다.

PSI는 원래 2002년 12월 예멘으로 향하는 북한 미사일 수출 선박을 나포하였다가 풀어 준 경험에 비추어 발전된 구상이다.<sup>113</sup> 당시 미국은 북한 화물선 소산호가 15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선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나포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에 국제법에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강제하기 보다는 각국이 각자 국내법에 기초하여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와 같이 PSI를 통한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일본·호주와 별개의 3자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의 불법적인 마약·

<sup>112</sup> 그 후 Brisbane, Paris, London, Washington 등에서 연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대량살상무기 운송을 금지시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U.S. Department of State, U.S. to Host 5th Meeting 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December 2, 2003) <usinfo.state.gov/topical/pol/arms/03120201.htm>.

<sup>113</sup> Rebecca Weiner,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o Stem Flow of WMD Materiel* (2003) <cns.miis.edu/pubs/week/030716.htm>.

위조지폐·미사일 등의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 상원은 2003년 7월 9일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일환으로 북한난민구호법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도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탈북자를 수용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sup>114</sup> 그 후 미국 상·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를 지원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및 난민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 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의 법제정을 추진하여 결국 1년 후 2004년 10월 이에 대한 입법절차를 완료하였다.

#### (4) 1~3차 6자회담

미 국무부는 2003년 7월 18~19일 미국을 방문한 중국 외교부 다 이빙궈(戴秉國) 부부장을 통해 다자회담 구도 속에서 북·미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및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히면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공식화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한이 다자회담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003년 8월 27~29일 베이징에서 남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하여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NPT 복귀를 강조하며 핵폐기의 진전에 따라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가침 협정 체결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한 문서 보장 방법 등에

---

<sup>114</sup> Glenn Kessler, "White House Mulls Plan to Admit North Koreans," *The Washington Post* (July 16, 2003).

대해 서로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북한은 북·미간 불가침 조약 체결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은 상호 동시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핵억제력 즉,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하였다.

제1차 6자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를 선행조건으로 엄격히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을 완화하여 북한의 핵폐기 과정과 미국의 인센티브 제공 과정을 병행 실시해 나갈 수 있다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sup>115</sup> 2004년 2월 25~28일 제2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CVID)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제2차 6자회담에서 한국이 제안한 대북 에너지 지원계획에 대해 동참하지는 않겠지만, 이해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실질적인 핵개발 계획의 포기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다소 완화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 자체를 부인하고, 군사용 핵만 동결하고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핵 동결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였다.

2004년 6월 23~26일 개최된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보다 융통성 있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초기 준비단계 3개월 동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핵폐기 원

<sup>115</sup> David E. Sanger, "U.S. said to shift approach in talks with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5, 2003).

칙에 합의한 뒤 이를 전제로 핵개발을 동결하면, 한국·중국·일본·러시아가 매달 수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거나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겠다는 임시 안전보장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후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은 북한체제의 항구적인 안정보장을 제공하고, 북·미 국교정상화 및 경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sup>116</sup> 그러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며, ‘핵동결 대 보상방안’을 강조하였다. 즉, 미국이 200만KW 상당의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고, 북한을 미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며, 경제제재를 해제 하는 등의 보상방안을 수용하면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동결에 들어갈 것이며, 여건이 되면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찰방식은 6자회담 참가국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3차 6자회담 이후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한 리비아의 사례를 따라 완전한 핵폐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제4차 6자회담 개최를 거부하며 2004년 11월 2일 대선결과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 (5) 부시 2기 행정부와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라크 전쟁에 관한 정당성 논란으로 미국사회가 보수·진보층으로 분열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실시된 2004년 11월 2일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의 케리(John Kerry) 후보를 누르고 재선

<sup>116</sup> 외교통상부, 『제3차 6자회담 결과』, 2004년 6월 28일 <[www.mofat.go.kr/mofat/mk\\_a008/mk\\_b083/mk\\_c163/1161198\\_52](http://www.mofat.go.kr/mofat/mk_a008/mk_b083/mk_c163/1161198_52)>.

에 성공하였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였다.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배분이 55석 대 44석, 하원에서는 232석 대 202석으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부시 2기 행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이라크 내부의 폭력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왜곡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라크 주둔 미군의 포로학대 장면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서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점차 확대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각 개편을 추진하였다. 보수 온건파로 알려진 파월 국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파월 국무장관 후임에는 라이스 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명하였다.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는 2005년 1월 18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검증이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도 참여하는 다자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sup>117</sup> 그러나 북한을 쿠바·미얀마·이란·벨로루시·짐바브웨 등과 함께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의 하나로 표현하여 북한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부시 대통령은 2005년 1월 20일 취임연설에서 자유의 확산을 위한 전세계 민주주의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 축소로 이

---

<sup>117</sup> Condoleezza Rice, *Opening Statement by Dr. Condoleezza Rice*, U.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anuary 18, 2005); 『조선일보』, 2005년 1월 20일 참조.

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유의 확산’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로서 천명하였다.<sup>118</sup> 부시 대통령은 2월 2일 국정연설에서 북핵문제에 관해서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간략히 언급하였다.<sup>119</sup> 그러나 이란에 대해서는 핵문제 이외에 테러지원국, 자유박탈국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와 덧붙여 이라크 전후처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정착 문제 등에 대한 외교정책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중동지역의 평화와 민주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북한은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을 보이지 않자,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를 폭압정권이라고 전면 부정해 나온 조건에서 미국과 회담할 명분조차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6자회담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하였다.<sup>120</sup> 이 성명은 또한 부시 행정부의 지속·강화되는 대북압살정책에 맞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그 후 북한 외무성은 3월 31일 담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6자회담은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균축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21</sup>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조건으로써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 남한 내부의 핵무기 철수 및 남한 자체의 핵무장 요소 제거와 검증,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핵전쟁 연습 중지를 제시

<sup>118</sup> The White House, *President Sworn-In to Second Term* (January 20, 2005)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1/20050120-1.html](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1/20050120-1.html)>.

<sup>119</sup> The White House, *State of the Union Address* (February 2, 2005)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2/20050202-11.html](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2/20050202-11.html)>.

<sup>120</sup>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729호 (2005. 2. 4~17), pp. 3~5 참조.

<sup>121</sup>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735호 (2005. 3. 25~31), pp. 3~4 참조.

하였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성향 및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치밀한 계산 하에 핵보유 선언이라는 공세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부시 행정부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유해오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핵보유 선언을 하여도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즉각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둘째, 부시 행정부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중동지역의 안정 및 민주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한층 더 강화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라크 내부 사태가 계속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을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북한의 회담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3월 18~21일 한·중·일 3국을 순방하였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3월 20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사실을 지적했다.<sup>122</sup> 라이스 장관은 또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핵폐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안전보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라이스 장관은 동북아 순방을 통

---

<sup>122</sup>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with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Ban Ki-Moon after Meeting* (March 20, 2005) <[www.state.gov/secretary/rm/2005/43665.htm](http://www.state.gov/secretary/rm/2005/43665.htm)>.

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한·미·일 3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았지만 대북 압박을 가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한편, 북한은 4월초 영변 5MW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월 11일 영변 5MW 원자로에서 8,000여 개의 폐연료봉을 모두 인출했다고 발표하였다.<sup>123</sup> 이 당시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에서 지하 터널을 건설하기 위해 갱도를 파고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시켰다.<sup>124</sup> 북한은 이와 같이 핵실험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미국의 협상 자세 변화를 촉구하였지만 미국은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하지 않으면 6월 이후에는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여 대북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라크 전후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미국은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북핵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기를 원했다. 부시 대통령은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미스터(Mr.) 김정일’로 호칭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북측이 미국과의 회담에 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 (6) 한국의 중재 활동과 4차 6자회담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발표하여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불투명해지

<sup>123</sup>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741호 (2005. 5. 6~12), pp. 5~6 참조.

<sup>124</sup> David E. Sanger and William J. Broad, “Photos hint North Korea is Preparing nuclear test,” *The New York Times*, May 6, 2005.

자 참여정부는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를 전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2005년 6월 10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였다.<sup>125</sup> 아울러 양국정상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다자 안전보장 및 에너지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북·미관계가 보다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5년 6월 14~17일 평양에서 개최된 6·15 5주년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여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6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하고 북핵문제 해결시,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의지가 확고하다면 7월에라도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sup>126</sup> 또 핵문제 해결시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미국과의 수교 및 우방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7월 12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에 즉각 착수해서 3년 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선언을 발표하였다.<sup>127</sup> 당시 한국을 방문한

<sup>125</sup>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동맹 공고, 북핵 평화적 해결 공동목표』 <www.president.go.kr/cwd/kr/archive\_view.php?meta\_id=di> (검색일: 2005. 6. 13).

<sup>126</sup> 『중앙일보』, 2005년 6월 18일 참조.

<sup>127</sup> 통일부, 『통일부장관 ‘중대제안’ 설명 기자회견(요지):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보고 (2005. 7. 12)』 <www.unikorea.go.kr/kr/KUN/KUN0101R.jsp>.

라이스 국무장관은 한국측의 중대 제안이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 내고 회담의 추진력을 계속 유지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이 대북 송전을 제안함으로써 6자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해 온 북·미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제3차 회담 이후 13개월간의 공백을 거쳐 2005년 7월 26일 북경에서 제4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13일간 지속되었지만 핵 폐기 범위와 평화적 핵 이용 여부를 둘러싸고 북·미간 타협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휴회되었다. 그러나 9월 13일 개최된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미국측이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국제적 우려가 해소되면 평화적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선으로 양보함으로써 경수로 문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았다. 그리고 9월 19일 북한 핵 포기,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 체제 안전보장, 대북 경제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sup>128</sup>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포기과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포기와 함께 이른 시일 내에 NPT에 복귀하여 IAEA의 감독을 수용하며, 미국 등 5개국은 북한 안전보장과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 그리고 에너지·교역·투자분야의 협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북한과 미국은 합의문 해석에 차이를 보였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월 20일 미국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로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면 즉시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측이 ‘선 핵무기 포기, 후 경수로 제공’ 주장을 고집한다면 북·미관계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sup>128</sup> 외교통상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2005.9.19, 베이징)』 <[www.mofat.go.kr/mofat/mk\\_a008/mk\\_b083/mk\\_c163/1190667\\_52](http://www.mofat.go.kr/mofat/mk_a008/mk_b083/mk_c163/1190667_52)>.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선 경수로 제공, 후 핵포기’에 대한 북한측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하였다.<sup>129</sup>

한편, 미국 재무부는 제4차 6자회담이 진행 중이던 2005년 9월 15일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BDA)’를 애국법에 의해 우선적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였다.<sup>130</sup> 동년 10월 1일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8개 북한 무역상사가 미국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동결령을 내렸다.<sup>131</sup> 이들 회사와 거래가 있는 미국 내외 모든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및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가 적용되었다.

### (7)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2005년 11월 9~11일 개최된 제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해 취한 북한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sup>132</sup> 그러나 미국은 국제 범죄행위

---

<sup>129</sup>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758호 (2005. 9. 16~22), pp. 14~15 참조.

<sup>130</sup> 미 의회는 9·11테러 이후 테러단체들의 자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돈세탁(Money Laundering)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애국법(Patriot Act)을 제정하였다. 그 후 미국은 법무부·국무부·국방부 등 14개 수사기관을 동원해 북한의 마약 제조, 달러 위조, 미사일 수출 등의 불법 거래를 통한 해외자금을 추적해 왔다. 『한국일보』, 2005년 9월 9일 참조.

<sup>131</sup> 2005년 6월 조선광업무역회사, 조선련봉총회사(련각산수출조합), 단천상업은행(조선창광신용은행) 등 3개사, 2005년 10월 조선해성무역, 조선종합설비수입, 조선국제화학합작, 조선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 조선영광무역, 조선연화기계합작, 토성기술무역 등 8개사에 대해 거래를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U.S. Department of State, USINFO.STATE.GOV, *Treasury Identifies Eight North Korean Weapons Proliferators* <usinfo.state.gov/is/Arcjove/2005/Oct/21-616972.htm>.

<sup>132</sup>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과 마약 밀매 대금을 비롯한 불법자금 세탁 등에 관여해 왔으며 ‘우선적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한겨레신문』, 2005년 11월 12일 참조.

에 대한 법 집행문제는 6자회담 틀 밖의 이슈라고 주장함으로써 제5차 회담은 결렬되었다. 제5차 6자회담 이후 북한은 ‘위폐제조 및 돈세탁’ 문제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위한 ‘조작’으로 주장하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가 6자회담 복귀를 위한 ‘근본문제’라는 입장을 취했다.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 북한과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였다.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2006년 1월 30일 위폐 관련자를 처벌하고 위폐유통 차단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미국은 관련자 처벌과 공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폐 동판 폐기 등의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월 9일 미국의 화폐 위조 주장을 부정하는 한편, 국제적인 돈세탁 방지규범 참여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미국의 정책변화를 기대하였다.<sup>133</sup> 미국과 북한은 2006년 3월 7일 뉴욕에서 북한의 달러위조 및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양자접촉을 가졌으나 6자회담 재개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 회담에서 북측 대표 리근 국장은 위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간 협의기구 설치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sup>134</sup>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위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설치 제안 거부하고 북한에게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우선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sup>135</sup> 그 후 미국은 ‘6자회담과 금융제재는 별개’라는 입장

<sup>133</sup>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776호 (2006. 2. 3~9), p. 16 참조.

<sup>134</sup> Raphael F. Perl, *North Korean Counterfeiting of U.S. Currency*,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2, 2006), pp. 15~16.

<sup>135</sup>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 방지기구(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APG)는 1977년 2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출범하였다. 2005년 현재 APG 회원국은 한국·미국·일본·호주·대만·싱가포르 등 28개국이다. 북한이 APG에 가입할 경우 APG 사무국의 금융거래 실태조사를 통하여 북한의 불투명한 거래 실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에서 후퇴, 6자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금융제재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북·미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부 탈북자의 미국 방명을 허용하며 북한 인권문제를 부각시켰다. 이와 같이 대북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7발을 시험 발사하였다.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6기의 스커드·노동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고, 함경북도 화대군 대포동에서 대포동-II호 미사일 1기를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하여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 등 상황의 반전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나,<sup>136</sup> 미국은 안보에 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일본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7월 15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및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대북 결의 169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안보리 결의 1695호는 유엔회원국들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미사일과 관련 물품·재료·제품·기술이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미사일이나 관련 물품·재료·제품·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가 채택되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

<sup>136</sup> 통일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보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보고자료), 2006년 7월 6일 참조 <[www.unikorea.go.kr/index.jsp](http://www.unikorea.go.kr/index.jsp)>.

을 차단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였다. 한편, 미 상원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기술을 이전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내용의 북한비확산법안을 가결하였다.<sup>137</sup>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시된 후 레비(Stuart Levey) 미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9월 8일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제재에 각국 은행이 잇따라 동참함으로써 북한을 재정적으로 거의 완전한 고립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발표하였다. 즉,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가 동결된 이후 중국·일본·베트남·몽골·싱가포르 등에서 약 24개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를 파기하거나 종결하였고, 기타 세계 금융기관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하게 되었다.<sup>138</sup>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sup>139</sup> 그러나 북한은 10월 3일 핵실험을 선언함으로써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sup>137</sup> U.S. Senate, *Press Releases, First Introduces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July 14, 2006).

<sup>138</sup>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ss Room, *Prepared Remarks by Stuart Levey, Under Secretary for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Before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September 8, 2006).

<sup>139</sup> 김국신·박영호,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9) 참조.

### 3.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전략적 입장과 대응

#### (1) 북한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제재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한 직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대북성명을 발표하였다.<sup>140</sup> 그러나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외교적 해법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 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나 핵기술을 제3국에 이전하려 한다면 이를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북한은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한국·일본에 지속적으로 핵우산을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동북아 안보공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여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이 지역의 군사력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를 “핵 보유국이라는 협상 입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핵실험이 확인되어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141</sup> 아울러 북한의 북·미 직접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편, 볼턴(John R. Bolton)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성명이 발표된 직후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제출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월 9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미국은 유엔 현장 7장

<sup>140</sup> The White House, *President Bush's Statement on North Korea Nuclear Test* (October 9, 2006).

<sup>141</sup> U.S. Department of State, *Interview With Wolf Blitzer of CNN, Secretary Condoleezza Rice* (October 10, 2006).

을 포괄적으로 원용한 대북 제재안 제시하였으나 중국은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유엔헌장 7장을 원용은 하되 군사조치를 거론한 42조를 제외하고 41조만을 명시할 것 주장하였다.<sup>142</sup> 이에 미국은 중국측 제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서 유엔 안보리는 10월 14일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군사조치가 배제됐으나 강력한 경제·외교적 제재를 내용으로 한 대북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서 핵,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품목은 물론 일부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까지 대북 제공,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등을 즉각 동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 출입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모든 국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물질의 수출입을 막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국제 기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북한의 핵실험 자체에 의구심을 드러내던 미국은 안보리 결의 채택 이틀만인 10월 16일 함경북도 풍계리 인근에서 채취한 대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다고 밝힘으로

---

<sup>142</sup> 유엔 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41조와 4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42조는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써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공식화했다.

<sup>143</sup> 한편,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0월 16일부터 5일간 일본·한국·중국·러시아 동북아 4개국 방문을 통해 대북 제재결의에 대한 일치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sup>144</sup> 라이스 장관은 일본을 방문하여 화물 검색은 유엔 결의에 근거한 강제의무라고 강조하였고, 10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국의 PSI 참여 확대 필요성 강조하였다. 한편, 미 국무부 관리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을 중단하고 PSI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동·아태 차관보는 10월 17일 “개성공단의 목적은 경제개혁이라는 미래를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지만 금강산 관광의 목적을 같은 선상에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미국은 북핵 결의의 핵심인 북한화물 검색에 한국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PSI 참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요구하였다.<sup>145</sup>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면 이란·시리아 등 ‘불량국가’의 핵 개발을 막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폐기를 선언할 때까지 PSI 공동훈련 강화, 위폐·마약 및 대량살상무기 수출 유통 경로 차단, 금융제재 조치를 제3국 기업에도 확대 적용,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 개입 등 북한에 대한 전방위

---

<sup>143</sup> The White House, *Press Briefing by Tony Snow* (October 16, 2006).

<sup>144</sup> U.S. Department of State, *Briefing on Upcoming Trip to Asia, Secretary Condoleezza Rice* (October 16, 2006).

<sup>145</sup>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측이 요청한 PSI 8개 항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WMD) 차단훈련 포함, PSI 활동 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 참관, 역외 차단훈련 참관 등 읊서버 수준의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자극을 우려하여 PSI 정식 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압박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만약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력히 반발할 경우, 미국은 대북 봉쇄를 위한 보다 강화된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도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불확실한 상황이 증대되는 것보다 북한이 다시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 (2)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는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10월 31일 베이징에서 만나 6자회담 재개에 전격 합의하였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밝히며 유엔 제재 및 금융 제재가 지속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월 1일 6자회담 틀안에서 북·미간 금융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해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6자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sup>146</sup> 한편, 미 재무부의 키밋(Robert M. Kimmitt) 부장관은 11월 8일 재무부 주도로 6자회담 틀안에서 북·미간 별도의 금융제재 관련 실무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sup>147</sup> 미국은 금융제재 해제를 위한 북·미 협상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사실상 분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자 미국은 제재와 병행하여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 변화는 대북제재 수행방식에 관한 한·미간 입장 차이를 좁

<sup>146</sup>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812호 (2006. 10. 27~11. 2), p. 13 참조.

<sup>147</sup> 『세계일보』, 2006년 11월 9일 참조.

히는 데 도움이 됐다. 니콜라스 번즈(Nicholas Burns)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유명한 외교통상부 1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제1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가 11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sup>148</sup>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12월 중순께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 공조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9·19 공동성명 이행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sup>149</sup> 차관급 전략대화와는 별도로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도 박인국 외교정책실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화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인국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은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된 화물 검색 조항 이행과 관련, 현재 운용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미국측은 한국내 상황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PSI 참여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유통성 있는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11월 7일 중간선거가 실시되었다. 개표 결과 민주당은 하원에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234석을 확보하고 28개 주지사를 장악한데 이어 상원에서도 사실상 다수당을 차지하는 압승을 기록하였다.<sup>150</sup>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중간평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는 특히 이라크전을 수행하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중가선거 직

<sup>148</sup> 2006년 1월 19일 개최된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향후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한·미동맹관계, 북핵문제, 남북관계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반에 걸친 폭넓은 대화를 진행한다.

<sup>149</sup> 『한겨레신문』, 2006년 11월 8일 참조.

<sup>150</sup> 이번 선거에서 하원의원 435명 전원, 상원의원의 1/3인 33명, 주지사 36명을 새로 선출하였다. 상원의원 선거 결과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49석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무소속으로 당선된 2명이 민주당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민주당은 51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김국산·박영호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11) 참조.

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60% 이상이 이라크전은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50% 이상이 부시 행정부의 테러전쟁 수행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사태에 대한 불만이 선거 패배의 핵심 원인이었음을 인정하고, 림즈펠드 국방장관을 게이즈(Robert M. Gates) 전 CIA 국장으로 교체하였다.

선거에 패배한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 입지가 위축되면서 향후 대내외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대북정책에 관해서도 민주당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계열의 지식인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강경발언을 하며 선제공격을 위협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 욕구를 강화시켰다고 비판해왔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이 수용 가능한 협상안을 제시하고, 북·미간 양자회담을 추진하며, 한국의 지지를 확보할 것을 권유해 왔다.<sup>151</sup> 중간선거 기간 중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북·미 양자협상을 거부하여 지난 6년 동안 북핵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엄격한 검증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강조하고 있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관한 민주당 주도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접촉을 보다 확대할 것이다. 사실

---

<sup>151</sup> Michael O'Hanlon and Mike Mochizuki,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New York: McGraw-Hill, 2003), pp. 92~93; Selig S. Harrison,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Han S. Park and Kyung-Ae Park, "U.S. lacks options in crisis with Pyongyang," *Jane's Intelligence Reviews* (April 2003), pp. 38~39.

11월 17~1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표출된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미 이러한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대북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sup>152</sup>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동석해 이어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3국 정상은 대북 제재·압력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상응하는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미국 백악관의 토니 스노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 중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 협력과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sup>153</sup> 한국전 종료를 선언한다는 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평화협정을 제안함으로써 북핵문제를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sup>152</sup> 외교통상부, “한·미정상,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논의,” 『뉴스레터』, 제141호, 2006년 11월 24일.

<sup>153</sup> The White House,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Tony Snow, Hanoi Vietnam* (November 17, 2006)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11/print/20061117-1](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11/print/20061117-1)>.



# IV

## 일본의 동북아전략과 대북전략



## 1. 일본의 동북아전략

탈냉전시대의 도래이후, 일본은 21세기의 정치대국을 지향하여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즉, 일본은 안보분야에서는 미·일동맹의 재정의를 더불어 확대·발전된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기반으로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데, 9·11 테러이후에는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 전략에 응하여 세계속의 미·일동맹을 추구하고 확대되는 군사적 역할을 통하여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의 강국을 추구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21세기의 FTA시대에 동아시아지역공동체의 건설 및 동북아경제권의 구축을 구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즉,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일, 한·일간의 갈등 때문에 일본의 동북아 경제정책은 아직 ‘동북아 외교의 부재’와 더불어 구체화되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 가. 안보분야

#### (1) 미·일동맹의 재정 정의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

1989년 동유럽에서의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지각변동에 이어 1991년말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국제안보환경은 물론, 동북아 전략환경도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국제안보환경 및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미·일동맹도 일본 국내에서 ‘미·일안전보장체제의 무용론’이 제기됨과 더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야 했다<sup>154</sup>.

미·일 양국은 미·일동맹의 약화를 우려하여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확고하게 재정립 또는 재확인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sup>155</sup> 그 결과, 일본 정부는 1995년 11월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1996년 이후 방위계획의 대강」(이하, 「1995 방위계획의 대강」이라 칭함)<sup>156</sup>에서 일본 및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필요 불가결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신뢰성 및 기능적 유효성의 향상 등을 강조하였고, 1996년 4월의 클린턴-하시모토 도쿄(東京) 정상회담에서는 미·일 안전보장체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본틀이라는 인식아래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을 천명하는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Alliance for the 21st Century)」<sup>157</sup>(이하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이라 약칭함)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미·일 동맹은 ‘재확인’되고 ‘재정의’ 되었고, 군사적 협력범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미일의 군사적 협력범위가 기존의 ‘필리핀 이북의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일 양국은 효과적인 방위협력

---

<sup>154</sup>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일본 국내에서는 ‘냉전의 산물’인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무용론’ 및 ‘오키나와 기지 철수요구’ 등의 견해, 무라야마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방위문제 간담회’의 미·일동맹보다 UN을 더욱 중시하는 견해 등이 나타났는데, 1995년 9월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병사의 일본 소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반주일미군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미·일동맹은 국내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배정호, “21세기 미·일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sup>155</sup> 船橋洋一, 『同盟漂流』(東京: 岩波書店, 2000).

<sup>156</sup> 『平成8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1995. 11).

<sup>157</sup> “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Alliance for the 21st Century”의 전문(全文)은 Mike M. Mochizuki, ed. *Toward A True Alli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에 게재된 것을 참조.

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1997년 6월 ‘일본자체’ 방위에 중점을 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주변지역 급변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으로 개정·발표하였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서는 미·일 방위협력의 중점이 종래의 ‘일본유사’ 및 ‘극동유사’에서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주변유사’로 이행함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주변지역 유사 시의 범위’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질에 따라 파악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미·일 양국의 방위협력을 종래의 ‘옛 소련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중국 위협’이나 ‘대만 유사’ 그리고 ‘한반도 유사’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에 따라 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상황에 따라 탄력성을 가지고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미·일동맹의 재정의 및 안보협력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및 동북아 안보전략도 종전의 대소봉쇄를 위한 북방중시의 방위전략에서 아시아·태평양 및 동북아 주변지역의 안정 확보에 중점을 두는 전방위 형태의 안보전략으로 전환되게 되었다.<sup>158</sup>

따라서 일본은 자조적 차원에서 확대된 군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전력 증강을 추구하는 한편, 양자간 차원에서 상호 투명도의 제고

---

<sup>158</sup> 일본은 『2000年度 外交青書』를 통하여 ASEAN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달성해 나갈 것을 강조한 데 이어, “동아시아 지역협력강화 3원칙”(2000. 11. 24) - ① ASEAN+한·중·일간 파트너십 구축, ② 개방된 지역협력 체제 강화, ③ 정치·안보문제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 을 제창하였다. 이는 일본이 아시아 지역내 주도국 위상의 제고 및 안보역할의 확대를 위해 ASEAN의 협조가 불가결하며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 지역의 경제안정이 자국의 발전에도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및 신뢰구축을 위하여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과의 군사교류를 촉진·강화시켰으며, 다자간 차원에서는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서의 주요한 역할의 담당과 함께 ‘동북아 6자회담’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 (2) 글로벌 차원의 미일의 공동목표 설정과 군사적 연대강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안보 역할의 확대전략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는데, 9·11테러 이후 일본은 미국의 대테러전을 지원하기 위해 「테러대책법」의 제정과 더불어 자위대의 활동이 인도양·중동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의한 해외미군 및 주일미군의 재편 작업의 전개에 응하여 미일동맹의 글로벌화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차원에서의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예컨대, 미국의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과 일본의 외무장관 및 방위청 장관으로 구성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는 2002년 12월 16일에 9·11테러 이후의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의 안보정책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강화할 것에 합의한 뒤, 미·일동맹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공통전략목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f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을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 10월 29일에는 ‘기지의 공유·공용’을 통해 미·일 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하기 위해 주일미군 기지의 역할 재조정, 미군과 자위대의 합동훈련 확대, 군 기지의 공동이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일미군의 재편에 관한 주일미군 재편의 중간보고서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의 재편(U.S.-Japan

Alliance: Transformation and Realignment for the Future)』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2006년 5월 1일에는 주일미군의 재편계획을 2014년까지 실행을 완료하는 ‘주일미군 재편에 관한 로드맵 (roadmap)’을 발표하였다.

주일미군의 재편이 완료될 시쯤,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상호운용 및 통합운용의 기능 강화, 방공(防空) 및 미사일방위(MD) 공동능력의 강화, 기지이전과 부단 경감 등을 통하여 군사적 연대의 강화를 추구 하며 ‘동아시아 미·일 공동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sup>159</sup>. 즉, 미·일동맹의 억지력은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강화될 것이며, 아울러 대중국 견제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일본의 동북아 전략도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sup>160</sup>에 응하여 대중국 억지력의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전개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역내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도 추구할 것이다.

#### (가) 세계 속의 미·일동맹과 전략적 공통목표의 설정

2002년 12월 16일 미국의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과 일본의 외무장관 및 방위청 장관으로 구성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는 ①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의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 ② 군사기술의 비약적 향상과 각종 기술의 통합화 지진 등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양국의 안보정책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고, 2005년 2월 19일의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에서는 양국이 추구해야 할 공통의 전략목표를 설정·

<sup>159</sup> 배정호, “강화되는 미일동맹과 한국의 전략 대안,” 『국제문제』, 제8월호 (2006).

<sup>160</sup> 이춘근,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6. 6. 1).

발표하였다.

<표 IV-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통전략목표에 관한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f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에 의하면, 미·일의 공통전략목표는 ① 글로벌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크·인도양 쓰나미 등에서의 협력,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국제테러의 방지 및 근절 등을 지향하여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② 지역차원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군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대만해협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촉진 등을 주요 전략목표로 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 강화, 중국의 대만 무력행사 가능성 억지 등의 전략적 추구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통전략목표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통의 전략목표 가운데 중국과 대만문제가 명기되었다는 것이다.<sup>161</sup> 이는 중국 및 대만문제에 대해 미·일 양국이 공통의 전략적 목적 아래 대응할 것임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대응을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주일미군의 재편 및 자위대의 역할·임무·능력 및 병력태세의 재편이 전개되어 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표 IV-1>와 같은 미·일의 공통전략목표의 인식은 미·일 동맹의 세계화와 더불어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이 한층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이는 주일미군의 재편과 자위대의 역할·임무·능력조정 등에 투영되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의 지향으로 나타났다.

---

<sup>161</sup> 川上高司, “在日米軍再編と日米同盟,” 『國際安全保障』 第33卷 3號 (2005. 12).

<표 IV-1> 미·일의 공통의 전략목표

<p>지역의 전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반도의 평화적 통일</li> <li>○핵·탄도미사일·불법활동·일본인납치 등 북한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의 평화적 해결 추구</li> <li>○세계 및 지역에서의 중국의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의 환영,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li> <li>○대만해협을 둘러싼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촉진</li> <li>○러시아의 건설적 관여의 촉진</li> <li>○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을 통한 러·일관계의 완전 정상화</li> </ul>
<p>세계의 전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기본적인 가치의 추진</li> <li>○국제평화협력활동 및 개발지원에 있어서의 미·일 파트너십의 강화</li> <li>○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삭감과 불확산의 추진</li> <li>○테러의 방지 및 근절</li> <li>○일본의 UN안전보장상임이사회 진출 실현 및 안전보장상임이사회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 추구</li> <li>○세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유지 및 향상</li> </ul>

출처: 『Joint Statement of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005. 2. 19).

(나) 주일미군 재배치·재편의 로드맵(roadmap)과 전략적 지향성

1) 주일미군 재편과 실행 로드맵

미·일 양국은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 등 미·일전략 채널을 통하여 <표 IV-1> 의 공통의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주일미군 재편에 관해 협의를 계속하였다. 그 중간 결과가 2005년 10월 29일에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U.S.-Japan Alliance: Transformation and Realignment for the Future)』으로 나타났다. 즉, 후텐마(普天間) 비행기지의 이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005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에서는 미·일의 군사적 일체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목적 아래 주일미군기지의 역할 재조정, 미군과 자위대의 합동훈련의 확대,

군 기지의 공동 이용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주일미군의 재편에 관한 중간보고서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의 재편』을 발표하였다<sup>162</sup>.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의 재편』의 주일미군 재편·재배치에 관한 핵심 사항은 미·일의 사령부 지휘 기능의 강화 및 연합군 유사 체제를 지향한 기지의 ‘공유’, ‘공동 사용’을 추구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억지력 증강을 위한 통합작전기능의 강화, 기지이전, 비용경감 등에 관한 것인데, 주요내용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주일미군 재배치·재편안의 주요내용

구체적인 안	전략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제1군단 사령부를 육·해·공 통합임무를 수행하는 통합사령부(JEX)로 개편함과 더불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縣)의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양까지 담당하는 제1군단 사령부를 전선(前線) 가까이로 옮기면서, 자마 기지가 대테러 작전과 동아시아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li> <li>○일본 육군 자위대의 핵심부대인 ‘중앙기동 집단사령부’를 자마기지에 신설·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의 군사적 연대 강화</li> <li>- 미·일 공동사령부 탄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총사령부를 요코다(横田) 기지로 이전시킴.</li> <li>○요코다 기지에 미사일 방어(MD)를 위한 미일공동운용조정소를 설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도미사일(BMD) 공격에 대해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키나와 후덴마(普天間) 기지의 미군의 공중급유기 KC-112기를 큐슈(九州) 지역의 가고시마(鹿兒島) 현(縣)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가노야(鹿屋) 기지로 이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북한을 겨냥해 오키나와 뿐 아니라 인접한 큐슈지역에도 미·일의 공동기지를 확보</li> </ul>

<sup>162</sup> 『朝日新聞』, 2005년 10월 30일.

구체적인 안	전략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나가와(神奈川) 현(縣) 아츠키(厚木) 기지에 있는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부대를 이와구니(岩國) 기지로 이전함.</li> <li>○이와구니(岩國)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화상 데이터 수집기를 미군의 아츠키(厚木) 기지로 이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부담의 경감</li> <li>○태평양 항공모함 2척과의 조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키나와의 코트니 캠프에 있던 제3 해병 원정군 사령부를 괌으로 이전함.</li> <li>- 일본내 미군 해병 병력 15,000명 가운데 8,000명 정도를 감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체의 부담 경감</li> </ul>

그런데 미·일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표 IV-2>와 같은 내용의 주일미군의 재배치·재편이 합의되었지만, 지방자치체 차원에서는 강력한 반대가 제기되었다. 즉, 일본 국내에서는 오키나와(沖繩)현(懸)을 비롯한 주일미군기지 지방자치체의 반발이 강하게 나타났고, 아울러 오키나와 해병대의 괌으로의 이전비용을 둘러싸고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에서는 3년 반에 걸친 주일미군의 재배치·재편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위한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였다<sup>163</sup>.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는 <표 IV-2>와 같은 내용의 주일미군 재배치·재편을 2014년까지 완료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표 IV-2>참조), 미·일동맹의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하였다.

<표 IV-3>의 로드맵 처럼 주일미군의 재배치·재편이 전개될 경

<sup>163</sup> 『朝日新聞』, 2006년 5월 2일.

우, 총비용은 300억달러로 추산되고, 이 가운데 일본이 260억달러(약 3조엔)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미·일의 전략적 상호 의존의 심화와 미국의 재정적 지원자로서의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재차 인식케 하는 것이기도 한다.

요컨대, <표 IV-3>과 같은 로드맵에 따라 주일미군의 재편이 완료될 시쯤,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상호운용 및 통합운용의 기능 강화, 방공(防空) 및 미사일방위(MD) 공동능력의 강화, 기지이전과 부단 경감 등을 통하여 군사적 연대의 강화를 추구하며 ‘동아시아 미·일 공동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운용의 실효성을 확보·제고하기 위해 미·일간에는 1997년에 개정된 「미·일 방위 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재개정이 검토·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2) 주일미군 재편과 로드맵의 전략적 지향성

주일미군 재편과 로드맵은 세계속의 미·일동맹을 지향하여 자위대

<표 IV-3> 주일미군 재배치·재편의 주요 로드맵

2007년 3월까지	토지반환의 계획 작성(오키나와현내 6개 시설)
2008년도	요코다(横田) 공역(空域)의 관제 업무의 일부 반환(요코다 기지)
2008년도 미국회계연도 (2008년 9월말까지)	미국 육군 제1군단 사령부 재편(자마 기지)
2010년도	항공자위대 사령부 등의 이전(요코다 기지)
2012년도까지	육군 중앙 기동집단사령부의 신설·배치(자마 기지)
2014년도까지	후덴마 비행장의 대체시설 완성, 후덴마 비행장의 전면 반환, 오키나와 해병대의 광 이전 완료, 아츠키(厚木) 기지의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부대의 이와구니(岩國) 기지로의 이전

와 주일미군은 상호운용 및 통합운용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군사적 연대의 강화를 추구하고, 일본 열도의 전력 강화와 더불어 ‘동아시아 미·일공동사령부’로서의 기능을 추구하고 있는데, 전략적 지향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sup>164</sup>.

#### 가) 미·일 통합운용 기능의 강화

미국의 제1군단은 제1특수전군, 제2보병사단, 제1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도양까지 담당한다. 이 제1군단 사령부는 전선(前線)에 보다 가까이 위치하기 위해 2008년 9월까지 워싱턴주에서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縣)의 자마(座間)지역으로 이전하며, 아울러 자마 기지에는 2012년까지 일본 육군 자위대의 핵심부대인 ‘중앙집단사령부’가 신설·배치된다.

즉, 미·일의 군사적 연대가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지휘·사령탑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자마 기지가 미·일공동사령부의 기능을 하면서 대테러 작전과 동아시아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나) 방공(防空) 및 미사일방위(MD) 공동능력의 강화

일본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년~2009년)』은 미사일 방어(MD)체제의 구축에 최우선점을 두고 있는데, 미·일동맹은 주일미군의 재편과정에서 방공(防空) 및 미사일방위(MD) 공동능력의 강화를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총사령부를 미국 제5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横田)기지로 이전시키고, 요코다(横田)기지에 미사일 공동방

<sup>164</sup> 배정호, “21세기 미·일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어를 위한 공동운용조정소를 설치한다. 즉, 요코다(横田)기지를 방공 및 미사일 방어(MD)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기지의 공유·공용을 통하여 방공 및 미사일 방어(MD) 능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오모리(靑森) 현(縣)에 있는 항공자위대의 샤리키(車力) 기지에 미사일 방어(MD)를 위한 미국의 신형 MD용 조기·경계 레이더 ‘X밴더 레이더’를 배치한다. ‘X밴더 레이더’를 통하여 미사일 동향을 감시하며, 수집된 정보를 미·일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북한을 겨냥해 오키나와뿐 아니라 인접한 큐슈(九州) 지역에도 미·일의 공동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미군의 공중급유기 12대를 큐슈지역의 가고시마(鹿兒島) 현(縣)에 있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가노야(鹿屋) 기지로 이전한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가노야(鹿屋) 기지는 한반도 및 대만 유사시 전략거점으로도 기능한다.

#### 다) 기지 이전

기지이전과 비용부담문제는 주일미군 재편을 둘러싼 미·일 협의과정에서 주요쟁점이었는데, 특히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이전과 미해병대 병력 일부의 광으로의 이전비용 분담은 핵심 사항이었다.

미·일간에는 적지 않은 ‘갈등과 타협·절충’을 거쳤는데, 후텐마(普天間) 기지는 슈와브 해변지역으로 이전하고,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미군 공중급유기는 가고시마(鹿兒島)현(縣)의 가노야(鹿屋)기지로 이전하며, 코트니 캠프의 제3 해병 원정군 사령부 및 8,000명의 해병병력이 광으로 이전한다. 광으로의 이전비용은 일본이 총비용 102억달러 가운데 59%인 60억 9,000만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리고 미군 태평양 항공모함의 조종을 위해 가나가와(神奈川)현(縣) 아츠키(厚木) 기지에 있는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부대는 이와구니(岩國) 기지로 이전하고, 이와구니(岩國)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화상 데이터 수집기는 미군의 아츠키(厚木) 기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나. 경제분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일·한·일간의 갈등 때문에 ‘동북아 외교의 부재’가 초래됨에 따라, 경제분야의 동북아 전략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즉, 일본의 동아시아지역공동체의 건설 및 동북아경제권의 구상은 아직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한·일 FTA도 아직 협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일본은 21세기의 에너지 경쟁에 대비하여 시베리아의 천연 가스전 확보를 위해 송유관 프로젝트 참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일본의 ‘21세기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건설 구상’<sup>165</sup>에 따라 동북아경제권의 구축에 관해 살펴보면, 일본은 21세기 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은 식민통치의 역사적 유산에 의한 잠재적 갈등, 경제발전의 수준 및 정치체제의 차이, 지역차원의 경제협력의 상대적인 부진 등으로 인하여 유럽에 비해 지역협력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sup>165</sup> 北東アジア・グランドデザイン研究会編著, 『北東アジアのグランドデザイン』(東京: 日本經濟評論社, 2002).

따라서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포괄적 협력을 지향한 파트너십의 구축·강화를 위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의 정신인 ‘동아시아 의식’의 확산·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동아시아 의식을 바탕으로 국지경제권인 동북아 경제권, 화남경제권, 대메콩권, IMS-GT의 상호결합 및 확대·발전을 통한 ‘21세기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상에 따라 일본은 동남아와 동북아 경제의 첫 결합인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 ASEAN+한·중·일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확대 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sup>166</sup>.

그러나 일본의 동남아 경제권과의 협력은 비교적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중·일 경제의 상호의존의 증대에도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일 FTA도 상당 기간 연기기간을 가진 뒤, 협상에 들어갔지만, 양국 국내 사정으로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중·일경제관계도 일본의 대중투자자와 더불어 상호의존관계가 상당히 심화되었으나, 제II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의 증폭 때문에 동북아 경제권의 구축을 지향한 협력관계로는 아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본은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TKR과 TCR 및 TSR의 연계 등 간선동맥 및 교통망 정비, 극동 러시아의 사할린, 이르쿠츠크, 야쿠츠크 등의 천연가스전으로 부터 북한, 한국, 중국, 일본에 이르는 파이프 라인의 건설, 동북아 전력 네트워크

<sup>166</sup> 北東アジア・グランドデザイン 研究会編著, 『北東アジアのグランドデザイン』 (東京: 日本経済評論社, 2002).

워크의 구축, 동북아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구상·계획하고 있고, 아울러 국내 차원에서는 니이가타현, 도야마현, 이시가와현 등을 환태평양권의 동해측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의 동북 3성 및 극동 러시아와의 경제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아마가타현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이 자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시베리아 송유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sup>167</sup>.

요컨대, 일본은 동북아경제권이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고,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의 20%, 동아시아 경제의 90%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동북아의 경제권의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일본은 동북아 지역차원의 전략보다 중·일, 한·일, 러·일 등 양자간 차원의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현실적인 노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남아경제권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 2. 일본의 대북정책

### 가. 일본의 대북정책과 북·일관계의 변천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한국이 북방정책이 전향적 전개되어 한소수교, 한중수교 등이 이루어지면서, 그 영향으로 일본 역시 전후

<sup>167</sup> 김현진, “일본의 에너지 안보 정책,” 『협력과 갈등의 동북아 에너지 안보』 (세계지역학회·통일연구원 주최 2006년 추계학술회의, 2006. 9. 19).

처리를 위한 외교차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북 접근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그러나 대사급회담으로는 북핵문제, 일본인 피납 문제 등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정상외교가 시도되었다.

일본의 대북정책 및 북·일관계는 정상회담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따른 국내 여론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일 공조체제와 미·일동맹체제의 조율에 따른 속도 조절 등을 전략적으로 취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단행이후에는, 일본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박'의 기조 틀내에 미국과의 공조·역할 분담 등에 따라 압박에 역점을 두면서 전개되고 있다.

### (1) 북·일 정상회담 이전의 북·일관계

탈냉전기 북·일의 접근은 초기에는 국교정상화를 지향하여 전향적으로 전개되었으나, 북핵문제에 의한 미·북 갈등관계의 영향으로 좌절을 접하게 되고, 갈등 속의 접촉 또는 접촉 속의 갈등을 겪으면서 전개되어 갔다.

즉, 북·일 정상회담 이전의 북·일관계는 접촉과 갈등 속에 시기별 특징을 나타내면서 전개되었다.

#### (가) 제1기 :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의 전향적 접근

탈냉전시대의 도래라는 글로벌 수준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전향적인 북방정책은 북한과 일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으로 하여금 전후처리 외교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교정상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게 하였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일본과의 국교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자극하였다.

따라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직전 일본의 다케시다(竹下) 내각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였고, 나아가 일본의 가네마루(金丸信) 자민당 전 부총재는 1990년 9월 24~28일에 자민당과 사회당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였다<sup>168</sup>. 한·소수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북한을 방문한 가네마루는 관계개선을 위한 교섭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이에 북한은 전격적으로 국교정상화를 제의하였고, 그 결과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과 북한의 노동당 사이에는 동년 9월 28일 ‘3당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며, 북·일간에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었다.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면서 정치권보다는 외무성을 통한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져 갔다. 북·일간의 국교정상화회담은 1990년 11월 중국의 베이징에서 세 차례에 걸친 예비회담을 가진 뒤 본 회담에 들어갔다. 본회담은 1991년 1월 30~31일 제1차 회담을 평양에서 가진 뒤 제8차까지의 회담을 가졌다. 1992년 11월 5~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8차 회담에서는 일본측이 ‘이은혜 조사문제’와 ‘핵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추후일정을 결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담을 결렬시켰다.

---

<sup>168</sup>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북한방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田邊誠, “日朝新時代の幕あげ, アジアの平和と南北統一のために,” 『月刊社會黨』, 12月號 (1990) 참조.

이후, 북·일관계는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지만, 일본과 북한은 곧 수면 아래에서 국교정상화 교섭을 위한 비공개접촉을 베이징 등에서 가지면서 협상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갔다. 나아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설치 및 일본의 참여, 미·북간의 외교대표부 교환설치 합의 등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과 북한은 수교교섭의 재개를 위한 비공식·비공개적 접촉을 본격화하였다. 그와 같은 북·일간의 접촉은 일본이 대북한 국교정상화 교섭을 정당활동의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대화로 정착시키면서 주로 일본 외무성의 동북아과장과 북한 외교부의 일본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자 접촉으로 이루어졌다.

#### (나) 제2기: 정체상태의 북·일관계

1996년 9월에 발생한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북·일관계는 다소 제2차원인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았지만, 잠수함사건이 해결됨에 따라 북·일간의 주요 현안인 ① 일본의 대북한 쌀지원문제, ② 과거청산을 위한 배상금문제,<sup>169</sup> ③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재개 등이 또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북·일간 주요 현안들의 재거론과 더불어 1997년 1월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고위층 인사 상당수가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 시기에 북한의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귀국 길의 황장엽이 한국으로 망명함에 따라 일본은 대북한정책의 전개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당초의 예상

<sup>169</sup> 일본은 1996년 8월 28~29일 북경에서 개최된 북·일 실무자접촉에서 50억달러의 청구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50억 달러는 한국정부가 지난 1965년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5억 달러를 현재 물가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 하는 것이다.

과는 달리 황장엽의 망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는 비교적 순탄한 국면을 맞이하였지만<sup>170</sup>, 일본은 여전히 대북한정책의 전개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

특히,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안명진(安明進)이 1997년 3월 12일 일본의 『산케이신문(産經新聞)』과의 인터뷰에 응하여 1988년 10월 평양근교에 있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요코다 메구미를 목격한 상황 등을 증언함에 따라<sup>171</sup>, 일본정부는 대북한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악화, 야당 신진당(新進黨)의 대북한정책 비판 등을 의식하여 대북한정책의 전개에서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나아가, 일본은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현안인 식량지원문제에서도 신중하게 응할 것임을 재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1997년 4월 9일의 북한선적의 화물선 ‘지성 2호’의 각성제 밀수사건과 4월 11일의 『산케이신문(産經新聞)』과 NHK-TV의 노동 1호<sup>172</sup>의 배치 보도로 한층 신중해졌고, 또 1996년 가을에 배치작업이 중단되었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가 동해안에 재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함에 따라 더욱 신중해졌다.

요컨대, 북·일관계는 ①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

<sup>170</sup> 황장엽의 망명사건 직후 남북관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북한의 보복테러가 우려되었다. 그러나 황장엽이 망명을 요청한지 닷새후인 2월 17일 북한외교부 대변인은 “비겁자에 대해서는 갈테면 가라는 것이 공화국의 입장”이라고 발표하였다.

<sup>171</sup> 1997년 3월 13일자 『産經新聞』에서는 요코다 메구미를 비롯한 일본인 납치·유괴사건을 1면 톱기사로 크게 보도하였다.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사건은 요코다 메구미 사건을 포함하여 7건이 있다. 한편 북한은 1997년 3월 18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産經新聞』의 일본인 납치·유괴사건 보도에 대하여 “비열한 정치적 모략극”이라고 비난하였고 아울러 이 신문을 ‘정치적 시녀’, ‘쓰레기 언론’ 등으로 극렬히 비방하였다.

<sup>172</sup> 노동 1호는 일본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 1천 3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 『産經新聞』과 NHK-TV는 그와 같은 미사일이 최근 이동식 발사대와 함께 3기 재배치되었고 게다가 곧 추가로 7기가 배치된다고 보도하였다.

혹사건, ② 각성제 밀수사건, ③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의 동해 안배치 의혹사건 등으로 인하여 일본이 대북한정책의 전개에 신중을 기함에 따라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다) 제3기: 국교정상화의 환경정비를 위한 북·일의 접근

1) 북·일간의 현안과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

황장엽 사건후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혹사건, 각성제 밀수사건,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의 동해안 배치 의혹사건 등으로 북·일관계가 정체상태에 빠지게 될 때에도 일본과 북한은 1996년 3월이래 비공식 과장급 실무회담을 계속 가졌다. 그 결과 1997년 8월 21~22일 베이징에서 ‘심의관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에서는 일본인 납치사건, 식량지원 문제, 각성제 밀수위험 사건, 북송 일본인 처 방일문제, 국교수교 본회담 조기 개최 등을 다루었다. 그 결과, 북한이 부정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위험 사건은 ‘계속 협의’ 형태로 뒤로 미루어졌지만, 대북한 식량지원 문제, 각성제 밀수위험사건, 북송 일본인 처 방일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타결원칙이 마련되었고, 국교수교 본회담 조기 개최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2) 북한의 ‘북송 일본인 처 방일’과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 결정

가) 북송 일본인 처 방일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1997년 9월 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 적십자사 연락협의회에서는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을 실현키로 합의하였다. 현재 일본 국적의 북송 일본인 처는 1,831명

정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 1진 15명이 1997년 11월 8일 일본에 도착하였다.

일본 언론들은 오랜 현안이었던 북송 일본인 처 전원의 일본방문 실현을 위한 첫발이 내디디졌다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1진 15명의 대부분은 북한당국에 의해 사상 및 행동을 검증받은 ‘모범생·우등생’이라고 꼬집었고, 나아가 북한이 북송 일본인 처 사업을 외교카드로 이용하거나 중단시킨다면 북·일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북·일 양국 정부는 북송 일본인 처 제1진의 방일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에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후속 제2진의 방일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1997년 12월에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2차 적십자사 연락협의회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1998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제2진의 방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나)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

일본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짐에 따라 대북한 식량지원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일본정부는 앞서 언급한 1997년 8월의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개최, 동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 적십자사 연락협의회회의 북송 일본인 처 방일 합의 등을 계기로 대북한 식량지원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9월 중순부터 일본의 정부여당이 2,700만 달러의 대북 식량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동년 10월 9일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2,700만 달러의 대북한 식량지원을 결정하였다. 즉,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WFP

에 2,700만 달러를 기부하고, WFP가 이 자금으로 일본 재고미 6만 7,000톤을 구입하여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다) 연립 3여당 대표단의 방북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환경 정비  
‘연립 3여당 대표단의 방북문제’는 1997년 3월 이후 사민당이 북한의 식량사정 및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연립여당 공동으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대두되었다. 그리고 동년 8월에 들어오면서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개최,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합의 등을 계기로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문제가 결정되고, 북한은 이를 경직된 북·일관계가 다소 개선되기 시작하는 조짐으로 파악하여 사민당을 통해 자민당측에 방북단 파견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자민당의 모리(森喜朗) 총무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自民·社民·사키카게 연립 방북 대표단이 구성되고, 1997년 11월 11~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처럼, 1997년 중후반부터 1998년 3·4월까지의 북·일관계는 다소 진전되는 듯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라) 제4기: ‘갈등속의 접촉’, ‘접촉속의 갈등’상태의 북·일관계

북·일관계는 1998년 5·6월경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해명과 북송 일본인 처 제3진의 방일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시 냉각상태로 빠지기 시작하였다.

즉, 1998년 6월 북한 적십자사가 담화를 통하여 납치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일본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일본의 대북한 불신·반목은 한층 깊어지게 되었고, 아울러 북송 일본인 처 제3진의 방일이 중단되었다.

게다가 1998년 8월의 북한의 ‘광명성 1호’ 즉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을 계기로 하여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국내에서 대북한 강경론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식량지원 중단, 직항 전세기의 운항 중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협력의 일시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북한 당국 또한 일체의 대화창구를 폐쇄하였다. 즉, 북·일관계는 거의 단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극히 냉각된 북·일관계는 1999년 3월의 북한 공작선 영해 침투사건, 동년 6~8월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발사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지속되다가, 동년 9월 베를린 미·북 고위급회담 결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다소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북·일 양국 정부는 1999년 10월 18~20일에 싱가포르에서 재차 외교 당국자간 접촉을 가졌고<sup>173</sup>, 동년 11월 2일 일본정부는 북한-일본간의 전세기 운항 동결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국회의원단은 동년 12월 1~3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측과 ①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및 예비회담 연말 개최, ② 북·일 적십자사 및 정부수준에서 인도적 문제 협의, ③ 북·일간 교류와 왕래의 강화 등을 합의하였다<sup>174</sup>.

이로써 북·일관계는 1992년 11월의 제8차 회담 이후 중단된 국교정상화 교섭의 재개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일 양국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다소

<sup>173</sup> 일본 외무성의 우메모토 가즈요시(梅本和義) 동북아 과장과 북한의 외교부 송일호 일본과장, 당 외교 당국자 등 3명이 참석하는 비공식회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은 나타내지 못했다.

<sup>174</sup> 『동아일보』, 1999년 12월 3일, 12월 4일; 『朝日新聞』, 1999년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진통을 겪었지만, 1999년 12월 19~21일의 적십자 회담 및 21일의 국교정상화 제1차 예비회담을 베이징에서 가졌고, 이어 2000년 3월 13일에 제2차 예비회담을 베이징에서 가진 뒤, 동년 4월 4~8일 제9차 국교정상화회담을 평양에서 가졌다. 7년만에 재개된 제9차 국교정상화회담에는 다카노 고지로 북한 담당대사가 일본측 대표, 정태화 외교부 순회대사가 북한측 대표로 참석하여 북·일관계의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5월 하순에 도쿄(東京)에서 제10차 국교정상화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제10차 국교정상화회담은 북·일의 국내적 사정, 남북관계 등의 영향으로 다소 차질을 빚게 되었다. 즉, 제10차 국교정상화회담은 일본 여권의 6·25 총선 대비, 북한의 6월 12~14일의 남북정상회담 준비, 국교정상화회담을 둘러싼 북·일간의 상이한 이해관계 등으로 연기되었다.

따라서 북·일은 2000년 7월 15~17일 베이징(北京)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고, 이어 ‘아세안 지역포럼’(ARF) 기간중인 7월 26일에 외상회담을 갖은 뒤, 8월 21~25일에 제10차 국교정상화 회담을 도쿄(東京)에서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북·일의 접촉과 더불어 일본국내에서는 동년 7월 3일에 북·일 국교정상화 촉진활동을 위한 ‘북·일 국교촉진 국민협회’가 결성되기도 하였지만, 제10차 도쿄(東京) 국교정상화 회담 역시 북·일의 입장만 되풀이되었고, 쌍방의 접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계속한다는 합의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 및 미·북관계의 진전의 영향으로 일본과 북한은 대화재개 등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면아래’ 또는 ‘수면위’에서 계속해서 추구하였다. 그 결과, 2000년 10월 말에 개최되는

제11차 국교정상화 회담을 앞두고 제3차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이 9월 12~18에 이루어 졌고, 10월 6일에는 50만톤의 식량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이는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의 진전에 자극을 받은 일본 정치권이 북·일관계의 진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북·일간의 대화 분위기의 조성과 더불어 제11차 국교정상화 회담이 높은 관심 속에 10월 30~31일에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제11차 베이징 회담도 기대와는 달리, 차기 회담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이후 북·일관계는 국교정상화 회담을 열지 못하고, 제3국에서 대화 채널 유지수준의 비공식 접촉만을 하여야 했다.

게다가, 2001년 11월 일본 경찰이 1999년 5월에 파산한 ‘조선동경 신용조합(朝鮮東京信用組合)’의 비리 수사와 그와 관련된 조총련 중앙본부의 강제 수사를 단행하자, 북·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고, 아울러 동년 12월 17일 북한 적십자회가 ‘일본인 납치의혹 조사’ 사업의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한층 악화되었다.

## 나. 정상회담 이후의 북·일관계

### (1) 고이즈미 총리의 제1차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

냉각상태의 북·일관계는 2002년에 들어오면서 4월의 북일 적십자 회담, 7월의 브루나이 북일 외무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다소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은 대사급 회담으로서는 북·일 양측의 쟁점 현안에 대해 타협점을 찾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수뇌회담을 전략적으

로 추구하였다.

즉, 일본은 2002년 8월 18~19일의 적십자 회담 및 25~26일의 북·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 등에서 전후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시도하여 동년 9월 17일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다.

북·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김정일-고이즈미 북·일 정상회담은 9월 17일 아침에 납치 일본인들의 사망문제로 인하여 경직되고 긴장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오후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에 관해 시인 및 사과를 함에 따라 주요 현안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이 일괄적으로 타결되고,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9·17 평양 공동선언은 2002년 10월 중 국교정상화회담 재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반성과 대북 경협 제공, 북한의 피랍 일본인 문제 사과와 재발 방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에도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데(<표 IV-4> 참조), 일본 정부는 9·17 평양 공동선언을 매우 중요한 성과로서 강조하였다.

요컨대,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은 주요 현안의 일괄적 타개에 따른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평가되었다.

<표 IV-4> 북·일 정상회담의 의제별 합의사항 및 과제

의제	합의사항	향후과제
일본인 납치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피랍 11명 중 생존 5명, 사망 6명 생사 확인, 생존자 면담	○생존자 귀국, 사망자 사인 조사

의제	합의사항	향후과제
과거 청산· 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년 무라야마 담화(“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 답습</li> <li>○ 한·일 국교정상화 동일방식 보상</li> <li>○ 1945년 8월 15일 이전 재산 청구권 상호 포기</li> <li>○ ① 무상지급 ② 저금리 장기 차관 ③ 국제기구 통한 인도적 지원 등 3개항의 경제 협력방안 합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지원 및 차관 규모 문제</li> <li>○ 국제협력은행 통한 간접용자 및 신용공여 여부 검토</li> </ul>
핵· 미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2003년 이후 미사일 발사 실험 계속 유예</li> <li>○ 한반도 핵문제 포괄적 해결을 위해 국제협의(94년 제네바합의) 준수 및 관련국 대화 해결 원칙 합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사일 실험유예 구체적 시한 확정 문제</li> <li>○ 영변 핵시설 사찰 등 핵문제에 관한 구체적 합의 문제</li> <li>○ 북한 재래식무기 문제</li> </ul>
국교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 중 장관급 수교협상 재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일 조총련계 교포 지위 문제</li> <li>○ 문화재 반환 문제</li> </ul>

## (2) 제1차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이후의 북·일관계

제1차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측이 밝힌 피랍 일본인 11명 중 5명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국내에 전해지면서 일본 국민들은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언론의 북한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일본 국내의 비판적인 분위기를 완화하고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남북 일본인 생존자 5명의 일본 방문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말레이시아의 칼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은 납치·경협·핵문제 등 주요현안에 대해 상호

간의 입장 차이만을 재확인한 채 차기회담의 일정도 결정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이후,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대립에 의해 냉각상태로 빠져들었다.

특히, 일본을 일시 방문한 생존자 5명이 잔류의향의 표명과 더불어 정부 보조금을 받아 고향에 안착하고, 일본 정부가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 거주 가족(8명)의 영주귀국과 사망 및 행방불명자 8명에 대한 진상 재조사를 요구하게 되면서 북·일간에는 갈등이 한층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북한 핵문제로 북·미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고이즈미 총리와 부시대통령이 2003년 5월 23일의 크로포드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법과 관련하여 ‘강경조치(tougher measures)’를 취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정부의 압박에 비중을 둔 대북정책이 추진하게 되면서 북·일관계는 한층 더 악화되어 갔다.

일본정부는 대북한 ‘대화와 압박’의 병용정책을 전개하면서도, 핵·미사일 및 납치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였다. 일본정부는 2003년 8월 27~29일 베이징 제1차 6자회담에서도 대표연설을 통하여 북한 핵의 개발·보유·이전 불용, 국제적 합의 준수, 검증 가능한 방식에 의한 신속한 폐기 등을 언급하면서,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를 북·일 국교정상화 이전에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납치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시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 가와구치 외무장관은 동년 9월 20일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하여 “납치문제는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언급하면서 UN무대에서 최초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도 동년 10월 7~8일의 인도네시아 ASEAN+3정상회담과 10월 20~21일 방

록의 APEC 정상회담 기간중에 “납치문제는 북핵문제와 함께 해결해 간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차기 6자회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국제적으로는 납치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전략적으로 추구하면서 제2차 6자회담시의 주요의제로 상정하고자 노력하였고, 국내에서는 아베 자민당 간사장, 나카가와 경제산업장관 등 대북 강경파이 중심이 되어 북한 압박을 위한 대북 제재조치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04년 2월 정기국회에서는 대북 송금 중지 및 무역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 및 무역관리법 개정안’이 성립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북 압박정책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 북한은 납치문제는 2002년 9월의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므로 6자회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하였고, 연일 외교부 대변인 및 관영매체 등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기간 중 인권 유린 및 피해자·유족에 대한 사죄·보상을 주장하였으며, 조총련에 대한 테러행위의 중단 요구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요컨대, 북·일관계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에 의한 정상회담을 통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지만, 그 이후의 북·일관계는 북핵문제와 납치문제로 인하여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따라서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도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일 양국은 양자간의 주요현안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등 다자간회담의 틀 내에서 접촉을 갖거나, 수면아래의 양자 협상을 전개하였다.

### (3)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

#### (가) 배경

일본의 대북정책은 국내 상황,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어 왔다.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도 일본 국내 상황,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졌다.

먼저, 일본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국민연금 미납 문제가 일본정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후쿠다 관방장관의 사임, 제1야당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의 사임 등을 초래하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매우 어렵게 하였다. 게다가, 납치자 가족 및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따가운 비판을 가하면서 납치피해 가족 8명의 무조건 귀국 문제 및 ‘사망’ 또는 ‘입국 사실이 없음’이라고 발표한 납치피해자 10명의 재조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적 상황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국내의 정치적 공세를 상쇄시키면서 7월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한 국민지지율의 제고를 지향하여 전략적 승부수로서 평양방문을 단행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동북아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중국이 6자회담의 성사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역할을 전개하였으므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도 그와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할 수 있다. 즉, 미국이 이라크 문제 및 대통령 선거 등으로 북한문제에 깊게 간여할 여유가 적은 상태에서 북·미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북핵문제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한계를 부딪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정치적 상황,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양방문을 전략적으로 기획한 고이즈미 총리는 대체로 2004년 4월에 접어들면서 제2차 방북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 정지작업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2004년 4월 1일 아마자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 등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하여 대련(大連)에서 북한의 정태화 북·일교섭담당대사, 송일호 외무성 부국장 등과 접촉하였고, 아울러 북한의 용천역 열차폭파 사고 직후인 동년 4월 25일에 일본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10억 달러 상당의 의료품 지원을 결정함과 더불어 대북접촉을 전개하였으며, 외무성의 다나카 히토시 총괄심의관이 중심이 된 5월 4~5일 북경 정부간협의에서는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일정부분의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방문의 결행을 정한 뒤 5월 14일 평양방문을 발표한 직후, 먼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로 방북의 취지를 설명한 뒤, 그 다음날 부시 대통령에게 방북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는 일본 외교상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 (나) 제2차 평양회담의 합의 사항

일본 국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가 재방문하는 것에 대해 다소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① 9·17 평양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주요현안 및 핵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문제 등의 포괄

적 해결을 추구하고, 나아가 ② 북·일 국교정상화의 재개를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 방북을 결단하였음을 강조하면서, 5월 22일 약 1년 8개월 만에 평양 재방문을 단행하였다.

일본과 북한은 핵심현안인 핵·미사일문제 및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입장의 차이를 보여 왔는데, 제2차 김정일-고이즈미 평양 회담의 결과 <표 IV-5>와 같은 합의사항이 도출되었다. 즉, 북한은 납치문제에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나타내 왔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의 재조사 합의를 받아냄과 동시에 납치 피해자 가족 5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또,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양공동선언의 준수와 더불어 북한의 제4차 6자회담 참가 및 미사일 발사 동결 등의 재확인이 이루어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제2차 평양회담을 끝내고 동경에 도착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여 북한이 재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을 것을 역설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10인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부터 조기 재조사의 실시 약속을 받아내었다고 밝혔으며, 소가 히도미씨의 가족인 남편(미군 탈주병)과 2명의 딸 문제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만나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며 설득하였지만 함께 귀국이 어려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의로 제3국에서 면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표 IV-5> 제2차 평양회담의 핵심 합의 사항

- 9·17 평양선언의 이행 확인
- 인도적 관점에서 북한은 납치피해자 가족 5명의 귀국 동의 및 소가 히도 미씨의 가족 3인의 제3국에서의 조기 면회가 가능하도록 조정
- 북한은 사망·행방불명의 조사를 직접 착수하고, 여기에 일본도 참가
- 인도적 입장에서 일본은 국제기관을 통해 식량 25만톤 및 1,000만달러 상당의 의약품 지원
- 일본은 평양선언 중시의 입장에서 북한이 평양선언을 준수하는 한, 경제 제재를 발동하지 않음.
- 일본은 조총련계 한국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함.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쌍방이 함께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노력함.
- 미사일 발사 동결의 재확인

#### (다)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에 대한 평가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방문 및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북한의 주도권에 의한 1시간 30분의 짧은 회담,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요코다 메구미의 부모를 비롯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의 가족들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5만톤의 식량과 1,000만 달러의 의료품 지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대체로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방문 및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이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 이전인 5월 15~16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총리의 방북 지지율이 73%로 나타났고<sup>175</sup>, 아시히신문(朝日新聞)이 고이즈미총리의 평양방문 직후인 2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7%가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의 계기

<sup>175</sup> 『毎日新聞』, 2004년 5월 17일.

를 마련함과 더불어 납치 피해자 5명과 함께 귀국한 고이즈미 총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40%대로 하락하였던 내각지지율은 54%까지 상승하는 기록을 나타내었다<sup>176</sup>.

#### (4)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이후 북·일관계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이후의 일본 국내의 상황을 보면,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관계가 순탄하게만 진전될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 직후의 여론은 조기 국교 정상화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자민·공명·민주 3당은 2004년 5월 26일 회의를 갖고 북한 선박 등의 일본 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을 수정·합의한 뒤, 동년 6월 3일 중의원에서 가결하였다<sup>177</sup>.

이는 일본 정치권이 ‘대화과 압박’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변함없이 유지할 것임을 가시적으로 표명한 것인데,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교섭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평양선언의 준수에 따른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방문 후, 북·일간에는 공식 및 비공식 실무 수준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4년 7월 8일에는 소가 히도미씨의 가족인 남편(미군 탈주병)과 2명의 딸이 싱가포르를 거쳐 도쿄(東京)로 왔고, 이어 동년 8월 11~15일의 북·일 납치문제 제1차 실무자회의 및 9월 25~26일의 北京 북·일 납치문제

<sup>176</sup> 『朝日新聞』, 2004년 5월 24일.

<sup>177</sup> 『朝日新聞』, 2004년 6월 3일(夕刊).

제2차 실무자회의에서는 행방불명 10인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북·일 납치문제 제2차 실무자회의에서 행방불명 10인을 비롯한 일본인 납치자 의혹문제에 대한 재조사 결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동년 11월 9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일 납치문제 제3차 실무자회의에서 북한측으로부터 받아 온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로 밝혀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제2차 실무자회의 직후에 연내로 예정했던 대북 2차 경제지원을 보류하려 하였고<sup>178</sup>, 12월 8일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임을 발표함과 더불어 12월 9일에는 12만 5천톤의 식량지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sup>179</sup>. 아울러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대북 경제제재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자민당은 5단계로 구성된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sup>180</sup>.

요컨대, 북·일관계는 고이즈미 총리의 대화중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 및 가짜 유골문제 문제 등으로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의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 가족 연합회’는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해 대북 경제제재를 촉구하였고<sup>181</sup>, 북한 역시 2004년 11월 요코다 메구미의 가짜 유골 파동 이후 일본에 대해

---

<sup>178</sup> 일본 정부는 제2차 북·일정상회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25만톤의 식량과 1,000만 달러의 의료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중 식량 12만 5천톤과 700만 달러의 의료품은 10월 중순경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인 식량 12만 5천톤과 300만 달러의 의료품 지원은 보류한다는 것이다. 『東京新聞』, 2004년 10월 29일.

<sup>179</sup> 『日本經濟新聞』, 2004년 12월 9일.

<sup>180</sup> 『讀賣新聞』, 2004년 12월 9일.

<sup>181</sup>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 가족 연합회’ 요코다 시게루 회장은 2005년 8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9·11 중의원 총선 공약에 대북 경제제재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도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비판을 계속 가하였다.

이처럼 북·일관계는 한동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2005년 9월 1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의 타결에 따른 9·19 공동선명의 발표를 계기로 또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북한은 2004년 11월 요코다 메구미의 가짜 유골 파동 이후 일본에 대해 비판을 계속 가해왔고, 일본측과의 전화 대화를 전면 거부했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2005년 9월 13일 즉 6자회담 속개 하루 전인 13일 김정일에게 보내는 ‘북·일관계 정상화 교섭 재개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郎)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통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전달하였다. 제4차 6자회담의 타결에도 일본은 미국을 설득하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과 북한 양측 외무성간의 전화 핫라인이 복원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미, 북·일 간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2005년 11월 3~4일 북·일 정부간 대화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일본측은 국교정상화 교섭을 ① 납치문제, ② 과거사 청산, ③ 핵·미사일 문제 등 현안별로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측의 제안은 2005년 12월 24~25일의 베이징 북·일 정부간 대화에서 북한측에 받아들여졌다. 북한측은 경제지원, 미국과의 중재 등을 위한 일본과의 교섭 필요성 때문에 전략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따라서 2006년 2월 4일부터 제13차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3년 3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재개되었다<sup>182</sup>. 제13차 북·일 국교정상화

<sup>182</sup> 『朝日新聞』, 2006년 2월 5일.

회담은 첫날 개막 전체회의를 가진 뒤, 5~7일 사이에 ① 납치문제, ② 과거사 청산, ③ 핵·미사일 문제 등 주요 현안이 3개 분과위원회에서 차례로 논의되었다. 일본은 납치문제를 최우선시하면서 3개 분과위원회를 상호연계·연동시키는 전략아래 국교정상화 교섭에 임했고, 북한은 과거사 청산문제를 중시하면서 국교정상화 교섭에 역점을 두며 임했다.

그러나 북·일 양측은 과거청산 방식, 일본 납치 해결문제 등에서 이견만을 확인하였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

제13차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의 실패 직후, 일본 국내에서는 대북 협상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새로운 대북 전략의 모색·수립’ 주장·요구가 나타났다. 대화를 통한 협상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북·일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은 2006년 6월에 접어들면서 교착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 김영남의 언론 인터뷰를 비롯하여 요코다 메구미 무덤 및 생존 당시 거주지 공개, 요코다 메구미의 주변 인물들의 증언, 일본 언론인들의 평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의 활용을 시도하였지만, 대포동 2호의 조립·완료에 대한 미·일 양국의 경계<sup>183</sup>가 강화되면서 북·일관계는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이, 미·일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강한 경고와 더불어 경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2006년 7월 5일 새벽에 동해쪽으로 대포동을 포함한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일관계는 한층 냉각하게 되었다<sup>184</sup>.

7·5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사건으로 일본 열도의 안보 불안이 고

<sup>183</sup> 『讀賣新聞』, 2006년 6월 16일.

<sup>184</sup> 『讀賣新聞』, 2006년 7월 6일; 『毎日新聞』, 2006년 7월 6일.

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주창하였다. 즉, 일본은 2006년 7월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안은 제재 결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에 부딪혔다. 중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엔 의장 성명’을 제시하였고, 이에 일본은 ‘유엔헌장 7장’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일본의 수정안은 영국·프랑스의 안과 절충되어 공동제안으로 제출되었고, 2006년 7월 16일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즉,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미·일 양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대북한 비난 결의’를 채택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미국의 대북전략에 응하여 대북 압박정책을 추구하였고, 악화된 북·일관계는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 다. 아베 정권의 등장과 대북 정책노선

아베 신조가 2006년의 9·20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제21대 자민당 총재(임기 3년)로 선출<sup>185</sup>된 데 이어 동년 9월 26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90대 총리로 선출되었다<sup>186</sup>.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정치화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수정치인으로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급성장하였다. 또,

---

<sup>185</sup> 전체 703표 가운데 464표(66%)를 얻어 제21대 자민당 총재(임기 3년)로 선출되었다.

<sup>186</sup> 아베 신조는 26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총 475표(각각 339표, 136표)를 획득하여 251표를 얻은 제1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를 누르고 제90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는 동아시아 외교문제 등으로 후쿠다 야스히로 전 관방장관의 추격을 받는 중, 2006년 7월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으로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차기 총재·총리로서 등장할 가능성을 거의 굳히게 되었다. 이처럼, 아베 총리는 일본판 강한 북풍을 타고 정치지도자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중시하고, 대북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듯한 조치를 인사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즉,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 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직접 맡고<sup>187</sup>, 아울러, 최측근으로 내각의 제2인자인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으로 하여금 납치담당 특명장관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재무성 출신의 나카야마 교오코 내각참여(국장급)를 납치담당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이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겸 납치담당 특명장관의 지휘아래 나카야마 교오코 납치담당 총리보좌관, 내각부의 납치문제 담당 종합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들은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납치문제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한·일 양국의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대북 정책 그룹의 등장에 대해 ‘대북 강경론자의 전면 배치’라고 특징지어 언급하였다<sup>188</sup>.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총재로 선출되기 하루 전인 9월 19일, 일본 정부는 일본 내 북한 계좌를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이는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이 강경노선을 취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공조체제

---

<sup>187</sup> 『共同通信』, 2006년 9월 27일.

<sup>188</sup> 『조선일보』, 2006년 9월 27일; 『중앙일보』, 2006년 9월 27일.

를 중심으로 경제재제 등 압박에 비중을 둔 ‘대화와 압박’ 전략을 전략적으로 구사할 것이고, 압박의 강도는 미국의 대북 제재의 강도에 응해서 취해질 것이며, 아울러, 동아시아 외교 차원에서 한국, 중국과의 협조 노선도 취해 갈 것이다.

### 3.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입장과 대응

#### 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반응

북한의 외무성이 2006년 10월 3일 핵실험을 공식발표하자, 아베 총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아래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나아가, “미국과의 정보교환”을 하도록 긴급훈령을 내렸다<sup>189</sup>.

그리고 일본 정부는 10월 6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의 핵 실험 포기’ 촉구 의장 성명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아베 총리는 2006년 10월 8일 중·일 정상회담 및 10월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실험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2006년 10월 8일 아베-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도록 중국측에 북한을 압박하는 강력한 예방외교를 요청했다<sup>190</sup>.

<sup>189</sup> 『중앙일보』, 2006년 10월 4일; 『동아일보』, 2006년 10월 4일.

<sup>190</sup> 『朝日新聞』, 2006년 10월 9일; 『중앙일보』, 2006년 10월 9일; 『조선일보』, 2006년 10월 9일.

10월 9일 서울에 도착 직후, ‘북한의 핵 실험 감행’ 소식을 접한 아베 총리는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즉각 협의를 시작하도록 내각에 내렸다. 이어 아베 총리는 청와대에서 개최된 10월 9일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실험의 위협성과 그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점, 국제사회의 가일층 엄격한 조치, 한일양국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속한 조치의 채택을 위한 긴밀한 협력, 등의 인식을 노무현 대통령과 공유하였다. 아울러, 정상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2002년 평양선언과 작년 6자회담 공동성명, 지난 7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크게 배반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단호한 대처를 역설하였다.<sup>191</sup>

그러므로 아베 총리는 귀국 직후 10월 11일 중의원 답변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의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대북 제재의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일본 내각은 동일 즉각 관계 각료회의와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미사일과 함께 핵개발로 인해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배증했다는 인식아래 북한 선박의 입항·수입 전면 금지 등의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되는 특단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sup>192</sup>. 일본은 금융 제재에 이어 독자적인 대북 추구제재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의 핵 실험 포기 촉구 의장 성명’(10.6)의 적극 지지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10.15)하자, 적극적인 대북 제재

<sup>191</sup> 『중앙일보』, 2006년 10월 10일; 『조선일보』, 2006년 10월 10일; 『동아일보』, 2006년 10월 10일.

<sup>192</sup> 『讀賣新聞』, 2006년 10월 12일.

동참을 표명하였다.

요컨대, 일본은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강경 대북 제재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아울러 유엔 제재 결의에 실효를 부여하여 '북한의 조건 없이 '6자회담으로의 복귀'<sup>193</sup>를 압박하여야 주장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2006년 11월 1일 미·중·북 6자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합의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면서도, 단독제재 및 유엔 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의 이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일본은 미국과 함께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의 완전폐기가 명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이 단행되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이 핵실험 즉각 중단의 표명은 물론, 핵 포기의 일정, 검증 방식 등을 상세히 제시토록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94</sup>.

## 나. 대북 제재 조치

### (1) 독자적 조치

일본 정부는 10월 11일 밤, 총리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단행에 대한 북한 제재 조치의 발동을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 조치의 결정의 이유에 대해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 단행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sup>195</sup>. 그리고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

<sup>193</sup> 『연합뉴스』, 2006년 10월 31일.

<sup>194</sup> 『讀賣新聞』, 2006년 11월 2일.

<sup>195</sup> 『讀賣新聞』, 2006년 10월 12일; 『産經新聞』, 2006년 10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극히 중대한 사태이고,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명언했다.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는 <표 V-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모든 북한산 상품의 수입 전면 금지, 북한정부 관계자에 한정되었던 입국 금지 조치의 민간인에게도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같은 대북 제재조치는 13일에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북 제재조치의 시행과 더불어 일본은 일본항구에 정박 중이던 모든 북한 선박을 출항시켰고, 아울러 모든 북한산 상품의 수입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 상품이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수입업자의 철저한 보고, DNA 감정을 통한 원산지 판별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2006년 9월 19일 시행된 대북 금융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가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대일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과 한국에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북한이 결정적인 타격은 받지 않지만 손실은 적지 않다. 예컨대, 일본 재무성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월~7월까지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61억 3,900만 원이지만, 일본이 조총련계 교포들의 대북 송금의 제한 등을 비롯하여 북한으로의 비공식적 자금 유입까지 제재를 가할 경우 결코 타격은 무시될 수 없는 수준이다.

<표 IV-6>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

대북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li> <li>○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 금지</li> <li>○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금지</li> </ul>
국제사회와의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간의 긴밀한 연대</li> <li>○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엄격한 대응 조치를 촉구</li> <li>○ 6자 관련국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대</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한 수입금지 등에 관한 긴급대책회의의 설치</li> </ul>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이와 같은 대북 제재 추가조치를 독자적으로 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미국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 유엔헌장 7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북 제재안을 제출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중·러와의 조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은 중·러의 대북 제재로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속히 강력한 조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히 대북 제재 추가조치를 결행한 것이다. 즉,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7장을 근거로 하는 강력한 압박조치의 결의를 취하기 위해 조속히 합의를 모으는데 일조하기 위해, 먼저 강경한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이어 핵실험이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아베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전략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셋째,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금지 등을 통해 북한과 일본과의 밀수 라인을 완전히 차단하여 음지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수입원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함이다.

##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해 “최대의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10월 15일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발표하였다. 즉,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이 채택·발표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은 중·러의 반대로 군사조치(7장 42조)는 배제하였지만, 7장 41조에 근거하여 비군사적 제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의 이전 저지를 위해 선박 등의 화물 검사, 금융제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표명하였고, 특히,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 권력층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사치품 수출금지를 실행하기 위해 일본산 담배·술 등 기호품과 가전제품을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행 외환 거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의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sup>196</sup> 이와 같은 일본의 제재조치는 북한 권력층에 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sup>196</sup> 『讀賣新聞』, 2006년 10월 16일.

그리고 일본은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헌법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주변사태법 선박검사법에 따른 활동, 임검(臨檢) 등의 활동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미·일지위협정을 근거로 할 경우, 일본은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은 미군의 지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일본의 선박 검사 활동은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항만기지 및 비행장 제공, 미군 함선의 급유, 미군 시설의 경비 등의 미군의 선박 검사 활동에 대한 후방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도 미군에 한해 할 수 있는 것이고, 영국·호주 등의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은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북한 핵실험을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지역의 사태로 인정하여 주변사태법 선박검사법을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선박검사법에 근거한 활동은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고 상대 선박의 승낙이 필요하다. 즉, 상대 선박에 대한 요청·설득이 활동의 중심이고,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무기사용 권한에 문제가 있으므로, 예측불허의 돌발 사태의 대처에는 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민당 일각에서는 일본의 임검 실시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임검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교전권의 행사’에 연계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개헌 등을 통하여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에 미·일 전략적 분담을 통하여 적극 참가하고 있다. 즉, 미국이 동해와 서해 공해상을 맡고, 일본은 쓰시마(對馬) 해협과 오키나와(沖繩) 북서부 해역에서 북한 선박 검사를 실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은 주로 동해와 서해를 통해 북한 항구로 들어가는 북한 화물선이나, 동지나해로 나가려는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경계·감시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sup>197</sup>. 즉, 동해와 동지나해를 연결하는 쓰시마 해협을 경우, 나가사키(長崎) 현의 이키(壹崎) 섬과 쓰시마 사이의 동(東)수도와 쓰시마와 한반도 사이의 서(西)수도로 나누져 있는데<sup>198</sup>, 일본은 이 가운데 동수도 해역을 집중 경계, 감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키나와 북서부 해역에서도 동남아 해역에서 동해 외에 서해 쪽을 통해 북한의 항구로 향하는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경계활동이 전개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경보기(AWACS), E2C 조기 경계기 등을 동원하여 북한 전투기의 접근을 경계·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등을 쓰시마 해협과 오키나와 해역에 배치하여 수상한 선박이 발견될 경우에 추적함과 더불어 북한의 동서 양해역에서 감시중인 미군측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

<sup>197</sup> 『讀賣新聞』, 2006년 10월 22일.

<sup>198</sup>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하면, 2006년 시점 이 해역의 선박 교통량은 동수도가 50~70%, 서수도가 30~50%이다.



# V

##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대북전략



## 1. 중국의 동북아전략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체제 붕괴 그리고 천안문사건은 중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새롭게 재정립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내부적으로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덩샤오핑(鄧小平)은 “시국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국력을 배양한 후 필요할 경우 행동을 취할 것”(冷靜觀察, 穩住陣腳, 沈着應付, 韜光養晦, 有所作爲)을 중국의 외교안보전략 지침으로 주문하였다.<sup>199</sup> 덩샤오핑은 평화와 발전을 국제질서의 양대 특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국제질서관에 의거하여 당분간 중국이 국제분쟁에 휘말려들지 말고 경제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에 대해 타협하면서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국외교의 중점을 두어 왔던 것이다.

2002년 이래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도 기본적으로 덩샤오핑의 외교전략 지침에 입각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근대화 이래 가져왔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덩샤오핑과 장쩌민(江澤民) 시기까지 중국이 지역 강대국의 모습을 보였다면, 후진타오-원자바오체제 하의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세계적 차원의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평화발전’(和平發展) 외교전략 지침 아래 세계 패권국인 미국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sup>199</sup> 鄧小平, “改革開放政策穩定, 中國大有希望,” 『鄧小平文選』, 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p. 320~321.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 가. 안보분야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중국은 인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2005년 중국은 국내 생산 총액 기준으로 세계 4대 경제국이 되었으며, 일본을 추월하여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고,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sup>200</sup> 중국의 경제성장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지에서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하고 있다.<sup>201</sup>

중국은 1971년 이래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정치대국 지위를 향유해 왔고,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인민폐 가치를 절하하지 않는 등 동아시아 국가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국제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최근 태국 등 동남아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요한 협력 상대로 간주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미국의 동아시아지역 동맹국인 한국과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 등까지도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무조건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정치민주화 없

---

<sup>200</sup> 章祈, “中國GDP超過英國成全球第4經濟大國” <[http://www5.chinesenewsnet.com/MainNews/Sinonews/Mainland/2006\\_1\\_26\\_2\\_2\\_9\\_786.html](http://www5.chinesenewsnet.com/MainNews/Sinonews/Mainland/2006_1_26_2_2_9_786.html)> (검색일: 2006. 1.27).

<sup>201</sup> 조영남, “중국의 연성권력론Ⅱ: 베이징 컨센서스” <[http://www.kifs.org/new/Dbview.html?sec\\_sort=7&no=1877](http://www.kifs.org/new/Dbview.html?sec_sort=7&no=1877)> (검색일: 2006.10.5); Joshua Cooper Ramo, “The Beijing Consensus” <<http://www.fpc.org.uk>> (검색일: 2006.5.5).

이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있는 중국의 모델이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큰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경제력 강화가 결국에는 군사대국화를 유도하게 할 것으로 보고, ‘중국위협론’을 제기하고 있다.<sup>202</sup> 현재는 중국이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걷고 있지만, 중국이 더 경제력을 발전시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독일과 일본 그리고 냉전시기 미국의 패권지위에 도전 하였던 소련과 유사한 길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평화론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신봉하는 정치이념과 가치관이 상이 하기 때문에 양국 간에는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부시 미국 행정부 집권 1기 초 럽스펠드를 비롯한 네오콘 세력들과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는 부상하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적 외교안보정책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기 중국을 ‘건설적 협력상대’로 보지 않고 ‘전략적 경쟁국’ 심지어는 ‘잠재적 적대국’으로까지 간주하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대외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부시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군사교류를 중단하는 대중 강경정책을 채택하였다. 9·11사태 발생으로 반테러전 수행이 더 절박한 과제로 부각됨으로써, 미국은 중국을 건설적 협력상대로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미 간 외교안보적 갈등은 완화되게 된다.

특히 2005년 8월 중·미간 전략대화 개최 이후 쥘릭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에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stakeholder)가 되기를 주문한 후,<sup>203</sup> 중국은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을 중국이 지

---

<sup>202</sup> 대표적인 논조로는 John J. Mearsheimer,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Vol. 105, No. 690 (April 2006), pp. 160~162 참조.

향해야 할 세계전략의 목표로 삼고 있다. 경제발전 추진과정에서 대미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이란 핵문제 그리고 인민폐 평가절상 등에 있어 제한적이거나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국제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현상유지 나아가 국제 평화와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은 주변국과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위협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소프트파워’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외교노력은 이라크전 등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행태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매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확대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아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동북아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살펴보자. 중국의 지도자들과 안보문제 전략가들은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질서가 중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데 근본적 장애를 미치지 않는다고 있지만, 불안정 요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204</sup> 중국은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심화가 국제질서 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정책과 국제테러, 민족·종교

<sup>203</sup> Robert B. Zoellick,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http://www.state.gov/s/d/rem/53682.html>> (검색일: 2005.10.5).

<sup>204</sup>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 “2004年中國的國防白皮書” <[http://www.chinamil.com.cn/site1/misc/2004-12/27/content\\_97680.htm](http://www.chinamil.com.cn/site1/misc/2004-12/27/content_97680.htm)> (검색일: 2005.4.18); 李景治, “戰略機遇期和我國的國際戰略,” 『中國外交』, 第11期 (2003. 11), pp. 2~7.

갈등,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국제질서 불안 정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역국들이 경제발전을 최우선시 하고 있고 역내에서 경제적 활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동북아지역의 정세악화 방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중국은 보고 있으며, 상하이협력기구와 아세안+3, 아세안지역 포럼, 북핵 6자회담 등 다자안보기구들이 지역분쟁 예방외교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205</sup> 특히 중국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와 아세안+3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다자안보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이들 다자안보기구를 역내에서 미국의 양자 동맹외교를 약화·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지역 안보환경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의 반테러전 이후 중·미관계가 현저하게 개선되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 견제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sup>206</sup> 미·일동맹 강화와 역내 미군의 재배치 및 기동군으로의 역할전환은 다분히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의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이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5년 2월 미·일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간 2+2회담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사태를 공동전략 목표로 설정한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해협 사태에 주일 미군이 직접 개입하고 일본이 이를 지원하는 상황이 가능해지게 됨으로써 대만의 분리 독립주의자들을 자극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

<sup>205</sup> 王毅, “加強互信合作, 促進共同安全,” 『中國外交』, 第3期 (2004. 3), pp. 2~4.

<sup>206</sup> 劉延棠, “國際變革: 世界與中國的戰略互動,” 『瞭望』, 第9期 (2005. 2), p. 31.

고 있다.<sup>207</sup> 또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핵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일본정부의 정치·군사대국화 움직임과 일본 정치의 보수 우익화 경향이 동북아질서의 또 다른 핵심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이미 미국의 반테러전 지원을 구실로 인도양과 중동지역에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하였고,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2004년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444.7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등 군사대국으로 부상한지 오래되었다. 중국은 아직 보유하지 못한 이지스급 구축함도 일본은 4척이나 가지고 있다.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2004년 『신방위계획대강』과 2005년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명시하였다. 중국이 특히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으로의 부상을 우려하는 이유는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인하여 중국과 일본 간에는 2001년 이래 정상 간 교환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을 신뢰할만한 상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일 간에는 과거사문제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질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 그리고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이해대립 때문에 긴밀한 경제교류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적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정부가 우익의 입장을 대변한 역사교과서를 검정

---

<sup>207</sup> 阮宗澤, “當前國際形勢的四個看點,” 『瞭望』, 第10期 (2005. 3), p. 54; 何德功, “日本熱衷臺灣問題的用心,” 『瞭望』, 第9期 (2005. 2), pp. 55~56; Wenran Jiang, “Japan Dips its Toe in the Taiwan Straits,” <<http://yaleglobal.yale.edu/article.print?id=5362>> (검색일: 2005.3.20).

해 주고 민간인에게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일 간 갈등은 역사문제 뿐만 아니라 영토문제와 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원유를 비롯한 자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와 조어도와 동중국해에 대한 일본정부의 영유권과 관할권 주장은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sup>208</sup> 최근 일부 중국의 안보전략가들은 동북아질서가 기존의 미국에 의한 패권질서에서 중·일에 의한 2강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중·일간 대립구도가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209</sup>

셋째,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북·일간 대립과 갈등도 동북아의 중요한 안보위협이라고 본다. 북한체제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보위협에서 기인하고 있고 보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우려를 해소해 주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210</sup>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구실로 작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대만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2003년 1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였을 때에도, 장쩌민 주석은 북한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시 미 대통령에

<sup>208</sup> 馮昭奎, “中日走向強強對抗?” <<http://world.people.com.cn/GB/42032/3305686.html>> (검색일: 2005.4.12).

<sup>209</sup> 張鋒, “東亞迎來二強時代,” 『環球時報』 (2005.2.28).

<sup>210</sup> 孫承, “第二次朝鮮核危機,” 『國際問題研究』, 第3期 (2003. 5), p. 19.

게 분명하게 전달한 바 있다. 북한 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핵 문제가 경제제재나 군사적 압박 수단 등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북 압박정책은 북한의 체제안정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대내 경제건설과 정치·사회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넷째, 대만 천수이볜 정권의 독립 지향적 정책과 미·일의 대만문제 개입정책도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부터 중국은 대내 경제건설과 반패권주의와 함께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3대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해 왔다. 신강과 서장지역에서 분리독립운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대만 천수이볜 정부의 독립 프로그램을 용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무기 판매와 『대만관계법』 등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은 다분히 대만을 중국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미국이 역내 주둔 미군의 기동군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도 대만해협 사태에 투입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sup>211</sup>

21세기 중국의 국가전략의 핵심 목표는 대내 경제발전을 통해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 중국 지도부는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중국의 국력증강을 통해 중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전면적 소강사회’는 중국 국민의 소득수준을 2,000~3,000달러 정도로 향상시키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내

<sup>211</sup> 王傳劍, “駐韓美軍重新部署之意義,” 『當代亞太』, 第5期 (2004. 5), pp. 37~43.

안정도 중요하지만 평화적인 주변 환경 유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sup>212</sup> 동북아에서 중국의 외교안보전략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지역질서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적어도 2020년까지는 경제발전에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면서 패권국인 미국과 관계악화를 방지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지역 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하며, 지역 다자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분쟁 가능성을 예방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보정세 인식에 기초하여, 동북아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한 중국의 지역 외교안보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대미관계를 대외관계의 핵심이라고 보고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행태를 비판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악화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 수출상품의 30% 가까이를 미국시장이 소화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관계강화가 중국의 경제발전에 불가피하며, 중국은 경제발전에 국력을 집중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중·미관계가 대립구도로 변화되면 중국은 군사 부문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하고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 이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 군사력을 배치하여 중국을 서부와 남부로부터 위협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테러전에 협력함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sup>213</sup>

<sup>212</sup> 馮昭奎, “中國與亞洲: 和平崛起與外交新思維,” 『中國外交』, 第5期 (2004. 5), pp. 31~32; Evans S. Medeiros and M. Taylor Fravel, “China’s New Diplomacy,” *Foreign Affairs*, Vol. 82, No. 6 (November/December 2003), pp. 22~35.

미국의 이라크전에 대해서도 중국은 내심으로는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미국의 군사행동을 공개적으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중국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이들 동맹이 지역 안정유지 기능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 양자간 관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한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sup>214</sup> 중국은 역내에서 미국의 지위를 부정하는 현상태파 세력으로 비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3년 이후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3자회담과 6자회담에 북한을 참여하도록 대북 설득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대만관계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다. 다자회담 구도를 제시하여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것은 한반도 안정유지와 중국의 지역 안보역할 강화를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중재요청을 수용하는 대가로 중국은 미국에게 대만의 독립을 저지해 주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에게 협력함으로써 대만독립 저지에 대한 중·미간 공감대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sup>215</sup>

둘째,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선린우호협력 정책을 전개하여 역내 국가들과 관계개선에 힘쓰고 있다.<sup>216</sup> 2002년 16차 당대회 정치보고

<sup>213</sup> 중국의 대미 반테러전 협력과 이에 따른 중·미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孫晋忠, “反恐合作與中美關係” 『國際問題研究』, 第2期 (2005. 3), pp. 15~18 참조.

<sup>214</sup> 이에 대해서는 David Shambaugh, “China Engages Chin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Winter 2004/05), p. 91; Robert Sutter, “China’s Rise in Asia: Bumps in the Road and Unanswered Questions,” *Pacnet*, No. 12 (March 17, 2005) 참조.

<sup>215</sup>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을 대만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Willy Lam, “U.S.-Japan Security Declaration Causes China to Reconsider Stance on North Korea,” *China Brief*, Vol. 5, No. 5 (March 1, 2005)을 참조.

<sup>216</sup> 溫家寶, “政府工作報告,” 『文匯報』, 2005年 3月 6日.

에서 인접국과 ‘선린외교, 동반자관계 강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는데, 이는 주변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주변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고 중국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위협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또 다른 목적은 중국의 주변국들이 미국의 반중국 봉쇄망에 편입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up>217</sup>

중국은 동북아지역을 중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전략지대로 간주하고 있는데,<sup>218</sup> 이 중 일본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강대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주요한 안보전략 상대다. 현재 중·일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조어도(센카쿠열도) 영유권문제와 동중국해 자원개발문제 및 일본의 대만 해협 사태개입 입장 표명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대일관계가 파국으로 발전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일본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일본기업은 중국시장에 666억 달러나 되는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등 중·일간 경제관계는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발전 기초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일관계 악화 일변도의 정책을 지속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중국은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는 위치에 있지만, 안보전략 면에서도 일본과 관계 악화가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본다. 미·일이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과 대결을 벌이는 전략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과 안보대화를 전개하여 불신완화 노력을 추

<sup>217</sup> 중국의 주변지역 외교전략에 대해서는 時殷弘, “國家大戰略理論與中國的大戰略實踐,” 『現代國際關係研究』, 第3期 (2004. 3), p. 42; 高子川, “中國周邊安全環境基本態勢解析,” 『當代亞太』, 第1期 (2004. 1), pp. 4~6; 唐世平, 張蘊嶺, “中國的地區戰略,” 『世界經濟與政治』, 第6期 (2004. 6), pp. 8~13 참조.

<sup>218</sup> 朱聽昌 主編, 『中國周邊安全環境與安全戰略』, 第3章 (北京: 時事出版社, 2002).

구할 것이다.<sup>219</sup>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일동맹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강화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중·러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공유하고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주장하고 있다.<sup>220</sup> 2003년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에 취임한 후 최초의 순방지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도 중국이 그만큼 러시아가 가진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중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와 원자재 확보 필요성 때문이다. 앙가르스크 유전의 송유관 부설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은 일본과 사활적인 경쟁을 벌여 승리를 쟁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11월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의 방중 시 중·러 총리회담의 핵심 의제 중의 하나도 앙가르스크-다칭을 잇는 송유관 부설문제였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한 중국의 대러 외교공세는 지속될 것이다.<sup>221</sup>

---

<sup>219</sup> 중국 내 반일 시위가 과격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의 지도부는 중국 국민들에게 이성적 자세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대일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中宣部等六部委舉行形勢報告會，李肇星作中日關係形勢報告” <<http://world.people.com.cn/GB/8212/14450/46162/3334196.html>> (검색일: 2005.4.20); 吳建民, “維護國家的根本利益才是算愛國,” 『人民日報』, 2005年 4月 21日 <<http://world.people.com.cn/GB/8212/46170/46173/3337265.html>> (검색일: 2005.4.21).

<sup>220</sup> Zheng Fu,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China Strategy*, Vol. 3 (July 20, 2004), pp. 25~27.

<sup>221</sup> 신상진, “중국의 외교안보전략: 21세기 국가안보 위협인식 변화와 전략조정,” 이 승철 외, 『21세기 동북아국제관계와 한국』 (서울: 나남출판, 2004), p. 203; “中俄總理第10次會晤，溫家寶提合作七大建議”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5-11/03/content\\_3727596.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5-11/03/content_3727596.htm)> (검색일: 2005.11.4).

중국은 주변국 외교를 추진하면서 특히 동남아와 한반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2002년 10월 동남아국가들과 ‘남중국해 행동선언’을 채택하여 남사군도 영유권분쟁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데 합의하였으며, 2003년에는 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 비동남아국가로서 최초로 가입하는 등 동남아국가연합과 정치·안보적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5년 동남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하는데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였다.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을 토대로 하여 동아시아 통합노력을 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앞서 동남아국가연합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합의하는 등 아세안+1과 아세안+3 외교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동아시아 통합을 주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sup>222</sup>

한반도 역시 중국에게 중요한 전략지대로 간주되고 있는데,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영향력 강화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한반도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통해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고 중국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만, 북한의 붕괴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의 위협을 완화시켜주는 전략적 완충지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에게 전략물자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변화와 한·미관계 재조정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논의에 진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이 자국에게 유리하

<sup>222</sup> 신상진, “중국의 외교안보전략: 21세기 국가안보 위협인식 변화와 전략조정,” pp. 205~206; David Shambaugh, “China Engages Chin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pp. 75~76.

게 전개되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은 지역 다자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신안보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과 같은 양자 동맹을 통한 안보를 냉전시기의 안보개념으로 폄하하고 유엔과 지역 다자안보기구 등을 통한 협력안보를 탈냉전기의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강조한다. 1994년 이래 중국은 아세안지역포럼, 상하이 협력기구(당시에는 상하이 5개국회의) 그리고 아세안+3 등 지역 다자안보대화를 통해 지역국 간 정치·안보적 신뢰를 강화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223</sup> 중국은 북핵 6자회담도 지역분쟁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협력안보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이 지역 다자안보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 인민폐 가치를 평가절하 하지 않고 태국을 비롯한 위기를 겪고 있었던 나라에게 차관을 공여해 주는 등 책임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 창출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위협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발전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 안보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평화정착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과거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신흥 강대국과는 달리 평화적인 방식으로 발전을 추구한다는 ‘평화굴기’ 또는 ‘평화발전’ 전략을 주창하고 있다.<sup>224</sup>

---

<sup>223</sup> David Shambaugh,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pp. 73~78.

<sup>224</sup> 중국의 ‘和平崛起論’에 대해서는 Robert L. Suettinger, “The Rise and Descent of Peaceful Ris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12 (Fall 2004), pp. 1~10; 閻學通, “和平崛起與保障和平,” 『國際問題研究』, 第3期 (2004. 3), pp. 12~16; 郭震遠, “和平崛起: 中國的必然選擇,” 『中國評論』, 3月號 (2004. 3), pp. 6~9; 高木 誠一郎, “中國和平崛起論の現段階,” 『國際問題』, No. 540

중국의 경제력 증강과 평화지향 정책은 지역국들에게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헤샤쓰섬 영유권문제를 타결지음으로써 러시아와의 영토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2005년 4월 원자바오 총리의 인도방문 시 국경문제 해결에 관한 정치지도원칙에 합의하는 등 중국이 접경국들과 영토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위협인식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이용하여 주변지역 국가들을 중국경제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이들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편입시키고 있다.<sup>225</sup> 동남아와 한국에서 특히 중국에 대한 이미지와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경제분야

2006년 중국 전인대는 ‘국민경제사회발전 11차 5개년 계획’을 통과시켜 2010년까지 달성할 국가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연평균 7.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2010년 국내 생산총액(GDP)을 26조 1천억 인민폐로 증액시킨다는 것이다.<sup>226</sup> 만약 중국이 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면 2010년 중국경제 규모는 2000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게 되고, 세계경제에서 중국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도 그만큼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정치·외교적 발언권도 강화될 것이다.

---

(2005. 3), pp. 31~45 등을 참조.

<sup>225</sup> Ashley J. Tellis, “China’s Grand Strategy: A Kinder, Gentler Turn,” *IJSS Strategic Comments*, Vol. 10, No. 9 (November 2004), pp. 1~2.

<sup>226</sup>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 『新華月報』, 4月號 (2006. 4), p. 26.

그런데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만 하는 도전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의 먼홍화(門洪華)는 부정부패, 빈부격차, 실업, 생태환경 파괴, 대만, 신강, 티벳독립, 잠재적 영토분쟁,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대가 그리고 석유와 철강 등 에너지와 원자재 확보문제를 제시하고 있다.<sup>227</sup> 특히 9·11사태 이후에는 중동지역 정세불안정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등이 중국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는 경제발전을 담보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필수불가결한 전략자원이다. 중국의 에너지 수요에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자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sup>228</sup> 그런데 중국은 1993년 이래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중국의 연평균 석유 소비증가율이 7%에 달하여 전 세계 석유 소비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다칭유전 등 중국 내 유전들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경제가 9%를 넘는 급진성장을 거듭하게 됨에 따라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국가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5년 현재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석유를 소비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대 석유 수입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내 석유 탐사를 적극화하여 대외 원유 의존도

<sup>227</sup> 門洪華, 『構建中國大戰略的框架』(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pp. 120~123, 146~157.

<sup>228</sup> 후진타오가 중국의 신지도부로 등장하였던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66%를 상회하였고, 석유와 천연가스의 비중은 각각 23.4%와 2.7%에 불과하였다. 中國 國家統計局 編, 『中國統計年鑑 2003』(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03).

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강화하는 한편, 원유 수입선 다원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원유 수입의 약 5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라크전 이후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미국의 대중동 영향력이 강화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중동 원유를 확보하기가 곤란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의 주요 원유 수입국 유전지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등 전 세계에 대한 원유 확보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3년 국가주석 취임 직후 후진타오가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몽골 등을 첫 번째 방문지로 선택하였던 것도 원유와 천연가스 등 지속성장을 위한 에너지 확보에 주목적이 있었다. 중국은 러시아 바이칼호 북부지역 양가르스크에서 다칭을 잇는 송유관을 부설하기로 러시아측과 합의하였으며,<sup>229</sup> 2006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중 시에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중국 신강을 연결하는 2개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로 약속하여 5년 후부터 매년 8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계획으로 있다.<sup>230</sup> 이외에도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도 에너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말 완공된 아타수-아라산쿠우 송유관을 통해 이미 카자흐스탄의 원유를 도입하고 있고, 중국 국영석유공사(CNPC)가 페트로카자흐스탄사를 41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여 카자흐스탄 내 유전의 원유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sup>231</sup>

<sup>229</sup> 이후 러시아는 일본의 집요한 공세와 전략적인 이유로 인하여 양가르스크에서 나호트카를 잇는 송유관을 부설하고, 대신 중국의 다칭으로 지선을 연결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up>230</sup> 裴敏欣, “華盛頓眼中的中俄戰略伙伴關係” <<http://www.carnegieendowment.org/programs/china/chinese/Research/USChinaRelations/sinorussia.cfm>> (검색일: 2006.3.30).

중국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지역으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원유 도입선의 다원화정책 때문만이 아니다. 중·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해상 수송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해군이 중국 유조선의 항해를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한 측면도 있다. 중국은 해외 원유도입의 80% 가까이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원유를 페르시아만-인도양-말라카해협을 거쳐 수송하고 있다. 유조선을 호위할 수 있는 원양해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한 중국은 육로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원유와 철강, 구리, 우라늄 등 전략자원 소비 대국이 되었고, 급속한 경제성장세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촉발시키는 위협적인 국가다. 미국은 남미지역과 아프리카 등지에까지 중국이 원유와 원자재 확보를 위해 진출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중·미간 에너지 전략대화 개최 필요성이 중·미에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그리고 중·일 간에도 러시아산 자원 확보경쟁 및 동중국해 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1941년 미국의 대일 석유 금수조치가 일본으로 하여금 진주만 공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듯이, 지속적 경제성장 도모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에너지 확보정책이 세계적 차원의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

<sup>231</sup> Christopher Pala, "China Pays Dearly for Kazakhstan Oil" <[http://www.nytimes.com/2006/03/17/business/worldbusiness/17kazakh.html?\\_r=1&oref=slogin](http://www.nytimes.com/2006/03/17/business/worldbusiness/17kazakh.html?_r=1&oref=slogin)> (검색일: 2006.3.17).

## 2. 중국의 대북전략과 북중관계의 변천

### 가. 중국의 대북전략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북한정권의 안정과 한반도 긴장완화 등 평화와 안정유지 그리고 한국과의 정치·안보관계 확대를 통한 영향력 강화에 있다. 중국과 한반도는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붕괴와 같은 한반도의 불안정 상황은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거나 권력투쟁이 일어나 정치·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면 수많은 난민들이 중국 영내로 유입될 수 있다. 적자 상태에 있는 국유기업의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몰려들게 되면 중국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북한의 혼란은 중국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게 일정량의 전략물자를 제공해 줌으로써 북한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북한은 중국의 잠재적 경쟁국인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의 압력을 막아 주는 완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미국,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편입되게 되면, 중국은 안보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함으로써 대미, 대일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대한민국 관계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일성과 덩샤오핑 등 혁명 1세대 지도부의 사망 이후 양국 지도부간 인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다.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각종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북한의 벼랑 끝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초래하게 될 부작용을 우려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2006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포동 2호 등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도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북한의 위기고조정책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일차적 이유도 무력이나 제재정책을 사용했을 때 예상되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고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안정을 한반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반도 안보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2개의 한국정책을 통해 남북한 모두에 대해 발언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6자회담 구도를 마련하여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관리하는 조정자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남북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평가를 받고자 한다.

북한의 붕괴 방지정책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관계를 회복·강화시키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후진타오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

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위협론’을 잠재우고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대북 관계에 소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전략은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고려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긍정적 이미지(形象) 강화라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중·미관계가 강화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편입될수록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 보다는 책임 강대국에 부합되는 방향의 외교정책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 나. 북·중관계의 변천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 붕괴 이후 북·중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양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크게 ① 소원기, ② 회복기, ③ 일반 국가관계로의 전환기 등 3개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들 시기별 북·중관계의 특징들을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 보기로 한다.

### (1) 한·중 수교와 북·중관계의 소원화(1992년~1998년)

냉전체제 붕괴 이후 북·중관계는 중국의 경제발전 중시정책과 한·중 수교로 인해 결정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북한은 이념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사회주의권 붕괴는 북한으로 하여금 이념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국제 지지기반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시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가 차지하였던 비중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들 사회주의국가들이 해체되면서 북한경제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북한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 형제국’인 중국을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이처럼 엄중한 대내외적 상황 하에서 중국은 동맹국인 북한의 입장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국의 경제발전, 대만문제 해결 그리고 유리한 외교환경 조성이라는 더 중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중국이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결정한 이유는 개혁·개방정책 추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탈냉전기 동아시아 질서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데에 있었다.<sup>232</sup>

1990년대 초 중국 내에서는 보수파들이 베이징의 정치무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덩샤오핑은 1992년 봄 상하이와 선전 등 개혁·개방 시범지역을 시찰하면서 개혁·개방정책만이 살길이라는 점을 역설하였고, 그해 가을에 개최된 14차 당 대회가 추구하였던 핵심 담론도 개혁·개방의 가속화로 결정되었다. 이를 위해 덩샤오핑은 권위주의 통치 하에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한국을 매력 있는 나라로 인식하여 한국과 수교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1989년 6·4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 경제대국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다는 점도 북한과 사회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보다 상당한 경제적 실력을 가진 한국과 수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국은 중국

---

<sup>232</sup>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신상진, 『중·북관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1997), pp. 5~10을 참조.

동북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의 대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한국을 활용하고자 한 측면도 있었다. 한·중 수교를 통해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일본기업의 중국진출을 촉진시키고 일본정부의 대 중국 경제제재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도록 자극하려는 의도도 있었다.<sup>233</sup> 아울러 중국은 1991년 이래 진행되고 있었던 북·일 수교교섭에 의해서도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과 수교를 서두른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34</sup>

중국이 북한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수교를 서두른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일국양제’ 구상을 현실화 하려는데 있었다. 당시 사회주의권 붕괴 추세 하에서 대만은 라트비아와 니제르 등과 수교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었다. 이에 중국은 당시 대만의 최대 수교국이었던 한국과 국교 정상화를 통해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였다.<sup>235</sup>

1990년대 초 경제개혁·개방정책 가속화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던 덩샤오핑은 소련과 동유럽 파고(蘇東波) 속에서 북한과 이념적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 보다 한국과 수교를 선택하는 실리를 취했다. 중국은 이미 북한을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기보다 자국의 경제발전과 대외 전략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더 많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sup>233</sup> Hong Liu, “The Sino-South Korean Normalization,” *Asian Survey*, Vol. 33, No. 11 (November 1993), p. 1091; 신상진, 『중·북관계 전망』, pp. 7~8.

<sup>234</sup>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1998), p. 11.

<sup>235</sup> Parris H. Chang, “Deng’s Last Stand on China’s Reform Movement,”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V, No. 1 (Summer 1992), p. 124.

양국 지도부간 인적 유대관계의 단절과 정책노선의 현격한 괴리가 북·중관계를 소원하게 했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등 항일전과 한국전에 관여하였던 혁명 1세대 지도자들이 양국의 정치를 영도하였을 당시에는 북·중 간에 긴밀한 정책공조가 이루어졌다. 1962년 북·중 변경조약 체결 당시에도 저우언라이와 김일성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1970년대 미·중관계 정상화 과정에서도 중국은 북한측에게 사전·사후 통보조치를 통해 마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베이징의 권력 핵심이 장쩌민과 주룽지 등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들로 교체되고, 북한에서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북·중간 정치적 신뢰관계가 약화되었다.

1992년부터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당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했던 반면, 북한은 개혁·개방 대신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어 가는 위기국면 속에서 주체사상을 강조하여 외부 사조의 침투를 막기 위한 사상의 방벽을 쌓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북한에게 비쳐진 중국의 모습은 우호적인 이웃이라기 보다는 배신자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던 것이다. 이에 북한은 중국의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정책을 “현대 수정주의자의 반사회주의 책동”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였으며,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 시에는 중국을 “제국주의자에 굴복한 배신자·변절자”로까지 매도하였다.<sup>236</sup> 북한은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에 대해서도 수정주의적 정책이라면서 비판하는 등 중국과 북한 간에는 정책노선을 둘러싸고

<sup>236</sup> 『중앙방송』 (평양), 1992년 9월 27일; 신상진, 『중·북관계 전망』, p. 17.

노골적인 마찰이 노출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 북한과 중국관계가 근본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북·중 양국의 대내외적 필요성 때문에 양국관계가 일방적으로 악화의 길로 치닫지는 않았다. 북·중간에는 당·정·군 고위지도자 교류가 지속되었으며, 북·중은 계속 상대방을 혈맹으로 규정하였다.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북한을 배려할 필요가 있었으며,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엄중한 환경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파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 참전 40주년을 기념하여 1993년 정치국상무위원이었던 후진타오가 대표단을 대동하고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김정일 등 북한 지도부에게 북·중 우호관계 지속을 강조하였으나, 북·중 지도부간 상호 교류와 접촉의 레벨은 이전 시기에 비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북·중관계의 소원화 속에서 양국 최고 지도자의 교환방문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중요한 정책결정 시 사전·사후 통보 및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 1차 북핵 위기와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는데, 이들 문제 해결과정에서도 북·중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후,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을 채택하여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조성된 위기를 압력이나 제재 수단을 통해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을 배려하였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정책을 반대하였다. 또한 중국은 미국 주도로 상정되었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구 수정만을 요구하였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서방측과 북한측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립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익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행사를 반대함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 천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보장받으려 하였다. 특히,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줌으로써 천안문사건 이후 악화되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통해서도 북·중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휴전체제 무력화 기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평화체제 전환 시까지 휴전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휴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서 남북한 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해서 평화체제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휴전체제가 파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에서 휴전체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개입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지지하는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sup>237</sup> 더욱이 북한은 한반도 정전체제 무력화를 기도하면서 판문점 군사정전위 중국측 대표단 철수를 요구하였고, 중국은 불가피하게 대표단을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중국측 대표단 철수를 요구하였던 것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논의하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1997년 덩샤오핑 사망 시에는 북한이 애도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김정일이 중국의 지도자들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게 되었

<sup>237</sup> 『文匯報』, 1994년 9월 2일.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4년 중국이 김일성 사망 이후 12일간 애도기간을 설정하였다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었다. 이는 한국과 수교를 결정한 덩샤오핑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불만의 표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시기 북·중관계가 정치·외교적으로는 적지 않게 소원해졌지만, 경제·군사적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긴밀하게 유지되었다. 한·중 수교 이후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곧 30% 정도를 차지하여,<sup>238</sup> 중국은 북한이 생존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동유럽과 소련 붕괴로 인하여 북한의 대외고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이다. 중국과 북한 간 경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중국의 대북 에너지·식량지원이었다. 1993년부터 원유를 해외에서 의존하기 시작할 정도로 에너지 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매년 5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우호가격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북한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북·중간 군사관계에서도 한·중 수교 이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중 수교 이후 북·중간 군사교류의 수준이나 빈도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김일철 북한 해군대장, 허평페이(賀鵬飛) 중국 군 총장비부장, 전재선 북한군 부총참모장, 류즈촨(劉智傳) 중국 공군사령관 최광 북한군 총참모장, 왕커(王克) 중국 심양군구사령관, 오용방 북한군 대장, 왕지잉(王繼英) 중국 북해함대 사령관, 김광진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의 상호 교환방문이 이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아울러 중국은 한·중 수교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sup>238</sup> 이에 대해서는 신상진, 『중·북관계 전망』, p. 29 참조.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군사동맹조약)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중 수교 직후 우젠민(吳建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중 사이에 서명된 모든 조약과 협정의 효력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치엔치천(錢其琛) 외교부장도 한·중 수교로 인해 중국과 북한관계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공표하였다.<sup>239</sup> 북한의 로동당 중앙위원회도 13차 중국공산당대회 개최 축하전문을 통해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계속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sup>240</sup> 1994년 6월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제재 가능성이 고조되었을 때에도 중국지도부는 당시 베이징을 방문 하였던 최광 북한군 총참모장에게 핵 포기 대가로 북한의 안보를 지원할 것이라고까지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41</sup> 1996년 7월 북·중 군사동맹조약 체결 35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의 북해함대 소속 함정이 북한 남포항을 방문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도 북·중간 군사협력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중·미관계의 경색과 북·중관계의 회복(1999년~2001년)

20세기에서 21세기로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아 동북아 국제체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절대적 힘의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구조가 수면 아래에서 형성되어 가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군 재배치 구상(GPR)에 따

<sup>239</sup> 『文匯報』, 1992년 8월 25일.

<sup>240</sup>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1992. 10. 11~17), p. 5.

<sup>241</sup> 朱建榮, “북한·중국관계의 특수성,” 『극동문제』, 4월호 (1997), p. 46.

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재조정하여 세계 어떤 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현대화·첨단화된 무기장비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하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 무역대국으로서 과학과 기술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78년 이래 연간 9% 이상의 초고속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증강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하는 핵심 세력이 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여 세계경제 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화시켜 왔으며,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경제기구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다.<sup>242</sup>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 시에도 중국은 인민폐 가치를 유지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연간 500억 달러를 넘는 외국자본이 중국에 투자되고 있는 등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sup>243</sup>

소련 붕괴이후 미국의 유일 패권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해 온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였다.<sup>244</sup>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sup>242</sup> 2001년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중국의 기여금이 8위로 상승하여 중국의 의결권이 기존의 2.2%에서 3%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게 되었다. 戴相龍, 「戴相龍:曲折的歷程有效的合作,」 『人民日報』, 2001년 2월 19일.

<sup>243</sup> 현재 동아시아국가 전체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중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85%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초에 24%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중국경제가 동아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David Hale and Lyric Hughes Hale, "China Takes Off," *Foreign Affairs*, Vol. 82, No. 6 (November/December 2003), p. 46.

<sup>244</sup> '중국 위협론'에 대한 미국 내 논의에 대해서는 Gary Klintworth, "China: Status Quo Power or Regional Threat,"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12,

도 불구하고 미·중간 교역불균형이 심화되었고,<sup>245</sup> 미·일동맹 강화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수면 위로 표출되었다. 특히 1999년 미국의 폭격기가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을 폭격한 후, 클린턴 집권말기 개선 움직임을 보였던 미·중관계는 다시 관계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미·중간에 진행되어 왔던 인권대화가 중단되었으며, 중국 내에서는 반미 여론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제기되고 미국 조야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블루 팀’(blue team)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사건에 따른 미·중관계 경색국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중국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공화당의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나아가 ‘잠재적 적대국’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중간 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다. 2001년 4월 중국 해남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사건도 미·중관계가 극도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미·중관계가 대만독립 문제로 양안관계가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준수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만의 천수이벤

---

No. 2 (Summer/Fall, 1998), pp. 364~383; Thomas J. Christensen, “Posing Problems without Catching Up: China’s Rise and Challenges for U.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4 (Spring 2001), pp. 5~40 등 참조. 9·11사건 이후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도 미국은 지역강대국 등장 견제를 중요한 안보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www.whitehouse.gov/nsc/nss.pdf>> (검색일: 2004.1.14).

<sup>245</sup> 2001년 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에도 중·미간 무역역조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미국측 통계에 의하면, 2002년 미·중간 교역규모가 1,473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중 중국의 대미 수출은 1,252억 달러, 미국의 대중 수출은 221억 달러로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1,031억 달러나 적자를 보았다. 陳鳳英, “客觀看待中美經貿失衡現象,” 『瞭望』, 第47期 (2003. 11. 24), p. 49.

에게 독립노선을 강화하도록 자극하였고, 이로 인해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처럼 미·중관계가 악화되자 북·중관계 회복 움직임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미국이 동쪽에서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고, 서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동유럽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정책을 전개하자, 중국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선린 우호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대내 경제난과 국제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한·중 수교 이후 악화되었던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원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내부 권력기반을 공고히 다진 후 우선적으로 대중관계 복원에 외교력을 집중하였다. 1999년 6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리펑, 주룽지 등 중국 최고지도자들과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중국방문으로 북·중간 전통우호관계 복원을 의미하는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데 중국과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1998년 8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문제로 인한 미국의 압력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김영남의 방중으로 북·중 지도부간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5만 톤의 식량과 40만 톤의 코크스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어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에게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북한은 이를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발전노선의 차이가 양국관계 발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게 되었다.<sup>246</sup> 북·중

<sup>246</sup> 『人民日報』, 1999년 6월 5일.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대중관계 복원에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였다. 3월 군부 지도자들을 대거 대동하고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중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5월 말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보름 앞두고 베이징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위원장이 전권을 장악한 후 최초의 해외 순방이었다. 북한은 중국에게 북한 내 정치·경제 상황을 통보함으로써 양국 간 중대 사항 상호 통보 전통을 복원하였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이 올바른 정책이었으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sup>247</sup> 무엇보다도 김정일이 남북 정상회담 직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개최하였다는 점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미·일에게 자신의 뒤에는 중국이 든든한 지지 세력으로 버티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1년에도 중국에 대한 북한의 관계복원 노력은 지속되었다.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식 직전 김정일은 상하이와 베이징을 방문하였는데, 김정일은 이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개방의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대외고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부시 행정부 하에서 대미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 중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북한과 중국 간 전통우호관계는 2001년 9월 장쩌민 주석의 평양방문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북한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지하고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을 지지함으로써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입장을 천명하였다.<sup>248</sup>

---

<sup>247</sup> 『文匯報』, 2000년 6월 2일.

<sup>248</sup> <<http://www.fmprc.gov.cn/chn/17518.html>> (검색일: 2001.9.4).

한·중 수교 이후 단절되었던 북·중간 최고 지도자 교환 방문이 이 시기에 다시 재개되었다.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필요성이 상대방과의 전통우호협력관계를 복원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 (3) 중미관계의 회복과 북·중 우호협력관계(2001년 이후)

9·11사건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었다. 역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가 외부세력의 무력공격을 받은 것으로서, 부시 행정부는 테러 근절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게 되었다. 집권 초기 중국을 미국의 잠재적 적대국으로까지 설정하고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데 외교안보정책의 중점을 두었는데, 알카에다의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사건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 부상 견제정책 보다는 반테러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이슬람세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반테러전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건설적 협력 상대’로 간주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대중 인식 변화는 미·중관계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반테러전과 미·중관계의 개선은 북·중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대내 경제난과 국제고립 국면 속에서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북한은 자신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던 장쩌민 지도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미국과 역내 정치·군사대국화를 기도하는 일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완충지인 북한을 끌어안아야만 했

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 주변 환경이 필요하고 미국의 협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감싸주기 어려웠다. 이와 같이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중관계에서 특수성(동맹적 요소)은 점차 약화되고 일반 국가간 관계의 모습을 띠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시기 북·중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지도부간 눈에 띄는 정도로 빈번한 교류와 접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견이 노출되었다.

북·중은 상대방의 대외 정책과 신의주 특구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보였다. 북한은 한반도 종단철도 부설을 고려하면서 중국철도와 연결하기 보다는 러시아 철도와 연결하는 방안에 더 비중을 두었으며, 2002년 8월말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외교도 중국에게는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었다. 김정일-푸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날짜가 8월 23일 이었는데, 이는 중국이 한국과 수교한지 10주년(8월 24일)이 되는 바로 하루 전날이었다.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외교는 중국과 한국관계 발전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중국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북한은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7월 『아세안지역포럼』에서 이루어진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8월 25일 일본과 평양에서 국장급회담을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북한방문을 수용하였다. 고이즈미의 방북은 북·일 관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본총리의 북한방문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고이즈미의 방북과 북·일 관계개선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정세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sup>249</sup> 내심으로는 고이즈미의 방북이 미·일간 공조 하에 일본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일본과 수교협상을 타결지어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보상금을 받게 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은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일본의 대북 적극정책이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sup>250</sup>

더욱이 북한이 고이즈미의 방북과 관련한 정보를 중국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국에게 불쾌하게 여겨졌을 것이다.<sup>251</sup> 2000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2주일 앞두고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의 지도자들과 한반도문제를 사전 협의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가 약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신의주 특구 설치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대응도 북·중 관계가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단순한 우호협력관계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2002년 9월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과 기술의 도입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특구)로 지정하고,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기본법)을 공포하였다. 기본법은 특구에 외교·국방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sup>249</sup> 『人民日報』, 2002년 9월 18일.

<sup>250</sup> 고이즈미 방북결과 발표된 ‘평양선언’에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동북아 지역문제 논의과정에서 일본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도 중국에게는 우려할만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新聞分析:小泉出牌金正日,賭什麼?” 『人民日報』, 2002년 9월 18일.

<sup>251</sup> Willy Wo-Lap Lam, “Beijing nervous after Japan-N. Korea talks” <<http://asia.cnn.com/2002/WORLD/asiapcf/east/09/17/china.koizumi/index.html>> (검색일: 2002.9.23).

이를 50년 동안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특구에 토지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토지 임대기간을 2052년 12월 까지 보장한다는 점을 약속하였다. 북한은 특구를 국제금융, 무역,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9월 24일에는 네덜란드 국적의 중국계 기업인 양빈을 특구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북한의 신의주 특구 지정과 양빈 장관 임명에 대해 중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특구 설립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중국의 발전모델이 다른 나라에 반드시 부합되지는 않는다”면서 북한의 신의주 특구 지정을 적극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252</sup>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경제가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북한이 경제개방·개혁정책을 채택하기를 바라왔다는 점에서,<sup>253</sup>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신의주 특구 지정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그리고 신의주 특구 개발은 2002년 말 16차 당대회 이후 강조하고 있는 중국 동북3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 신의주 특구 지정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북한의 대중정책에 대한 불만 그리고 중국의 대내 정치·사회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북한이 중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신의주 특구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신의주 특구를 설치하면서 이를 중국과

<sup>252</sup> <<http://www.fmprc.gov.cn/chn/35130.html>> (검색일: 2002.9.24).

<sup>253</sup> 중국은 타국의 경제발전 방식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천명하고 있으나,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김정일 위원장 방중 시에도 북한에게 경제개혁·개방을 권유한 바 있다. 중국은 김정일이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을 시찰하도록 하였으며,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상하이 푸둥지역을 시찰하도록 하였다.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국 공안당국이 양빈 장관을 연행한 이후 중국을 방문한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목적이 리펑과 후진타오 등 중국 지도부에게 북한의 대내 정치·경제 상황과 대외관계 진전 상황을 통보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sup>254</sup>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외무장관 회담(7월), 러시아와 정상회담(8월), 일본과 정상회담(9월) 등 중대한 외교행보를 취하면서 이를 중국에게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신의주 특구 지정과 양빈 장관 임명 과정에서 중국측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자 이를 더욱이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북·중간 전통우호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를 국가 중대 사항에 대한 상호 사전 협의 사후 통보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특구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하겠다.

둘째, 중국의 대내 정치·사회 안정에 미칠 영향 때문이었다. 북한이 신의주를 관광·오락단지로 중점 육성하게 되면,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 신의주가 국제도박장, 마약거래처로 변화되면 단동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불법 자금 세탁장소, 범죄사범 피난처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sup>255</sup>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업자문제로서위가 빈발하고 있는 동북3성지역 사회안정에 커다란 문제를 초래

<sup>254</sup> “胡錦濤會見朝鮮國家代表團祝賀朝鮮取得的新成果” <<http://www.chinanews.com.cn/2002-10-16/26/232819.html>> (검색일: 2002.10.17).

<sup>255</sup> “楊斌啓港版安籠疑雲,” 『星島日報』, 2002년 10월 9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는 북한의 신의주 특구 설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중국은 신의주 특구 설치가 장기적으로 탈북자들의 중국 유입을 확대하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 특구에 장벽을 설치하여 북한 주민의 특구 진입을 통제한다고는 하였지만, 과거 홍콩 특구에 적지 않은 중국대륙 주민들이 유입된 사례가 있었듯이 북한 주민들이 대거 신의주 특구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장기적으로 중국으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중국과 접경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남한과 가까운 곳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선전, 선토우, 주하이, 샤먼, 하이난도 등 중국의 경제특구도 대만과 인접한 지역들이다. 즉,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 경제특구모델을 따르는 것이 북한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리적으로 남한과 가까운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sup>256</sup>

셋째,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의 개인적인 문제점도 북한 신의주 특구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인식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양빈은 탈세, 주식불법거래, 토지 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다.<sup>257</sup> 장쩌민 주석의 16차 당대회 정치보고서에서도 중국이 부정부패 척결을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업이라고 밝힐 정도로 중국이 부정부패 척결을

<sup>256</sup> 전직 중국 관리와의 인터뷰 (베이징, 2002. 10. 24).

<sup>257</sup> 양빈은 2003년 9월 중심 판결에서 농업용지 불법전용, 사기, 뇌물제공, 수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230만 元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楊斌案終審維持原判：有期徒刑18年 罰金230万” <<http://www.chinanews.com.cn/n/2003-09-07/26/43782.html>> (검색일: 2003.9.7).

강조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양빈을 특구장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중국정부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측에 양빈을 특구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보기관에서는 양빈이 1989년 천안문사건 발생 직후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인물로써 반체제 인사들과 연계되어 있었고, 파룬궁 조직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람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sup>258</sup> 따라서 중국은 양빈이 신의주 특구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신의주가 중국의 반체제인사들과 파룬궁 조직의 활동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신의주 특구 구상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통해서도 북·중관계의 새로운 단면이 드러났다. 당시 미국을 방문하였던 장쩌민 주석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중간 중대 사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일관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되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는 것을 막는데 일차적 중요성을 두었으며, 관련국들을 설득하여 3자회담과 6자회담 구도를 창설하여 이를 주도해 왔다. 북한의 정책을 두둔하기 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중국의 국익에 미칠 심각한 해악을 우려하여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

<sup>258</sup> 전직 중국 관리와의 인터뷰 (베이징, 2002. 10. 24).

교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이 미국편을 들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였을 정도였고,<sup>259</sup> 6자회담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중국은 2003년 8월 이래 북한을 6자회담에 참여시키기 위해 지루하고도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2005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6자회담에 북한을 참여토록 하기 위해 중국은 원유와 식량 등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6자회담 내에서 북·미간 양자접촉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을 설득해야만 했다.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을 주도함으로써 대미 관계를 개선시키는 등 동북아에서 외교적 발언권을 신장하고 평화 애호국으로서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중국의 대내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재무장 구실을 제공하는 등 근본적으로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sup>260</sup>

중국 내 탈북자문제 처리과정에서도 북·중관계가 일반 국가 간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해 주기로 한다는 비밀 합의서가 있지만,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중국 내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 주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과의 관계를 더 이상 특수한 관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 내 일부 탈북자들이 주중 외교시설에 진입하면서 국제문제로

---

<sup>259</sup> 북한 핵문제가 재 부각된 후,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주재 북한대사는 “조선반도의 안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나라들이 있다면 그들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침묵하는 것이 좋다”라면서 중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sup>260</sup>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국가전략』, 제11권 2호 (2005), pp. 29~54.

비화되고 있다. 미국 의회와 국제 인권단체들이 중국 내 탈북자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 2003년 9월 기존의 국경 수비 임무를 무장 경찰에서 인민해방군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를 일반 국가 간의 관계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시기 북·중간 정치·외교관계는 신의주 특구문제와 북핵 문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지만,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와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추진 그리고 중국자본의 북한 진출 확대로 인하여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더 심화되었다.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이후 북한은 제한적으로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무역 부문의 교류를 한층 확대하였으며, 중국의 경험과 발전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2년 10월 김정기 북한 무역성 부상이 무역대표단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2003년 10월에는 박봉주 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우방귀 상무위원장과 경제무역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개혁·개방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발전상을 전수받았다. 2004년에는 중국의 투자로 대안유리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2005년 완공하였다. 4월 김정일의 중국방문이 성사되어 무상 경제원조 제공과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이 시기 북·중 경제관계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중국이 동북진흥계획을 추진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저렴하게 원자재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자원개발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신지도부는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을 국가정책의 새로운 담론으로 채택하고 서부 대개발과 더불어 동북지역 경제발전에

관심을 기울였다.<sup>261</sup> 중국이 ‘동북진흥계획’ 하에 북한·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등 동북3성의 경제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일차적인 이유는 이들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과 통합을 유지하는 데에 있으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을 주도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무역·투자정책은 이러한 중국정부의 구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투자들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의 경제 일체화를 도모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이미 라진항 3호 부두 사용·경영권을 50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확보하였고, 중국과 북한은 이를 위해 중·조 나선 국제물류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원정리-라진항을 연결하는 50여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 일대에 공업단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중국은 2005년 9월 우이 부총리 방중 시 50년 동안 무산광산 개발권을 북한 측으로부터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62</sup> 이러한 중국의 대북 투자들은 양국의 도로와 항만지역 일체화 및 북한의 원자재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들이다.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 중국정부가 해외 원유와 원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동아시아협력 추진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

<sup>261</sup> 덩샤오핑과 장쩌민시기 연해지역 중심의 비균형적 발전전략으로부터 지역 간 불균형 발전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가 구성된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동북진흥계획’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되게 되었고, 2003년 10월 당 중앙과 국무원이 『동북지역 노후공업지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을 공식 문건으로 채택·공표하게 됨으로써 ‘동북진흥계획’이 추진되게 되었다.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振興東北戰略決策提出的背景和重大意義” <[http://chinaeast.xinhuanet.com/2006-04/13/content\\_6649222.htm](http://chinaeast.xinhuanet.com/2006-04/13/content_6649222.htm)> (검색일: 2006.4.15)을 참조.

<sup>262</sup> 『조선일보』, 2006년 3월 27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sup>263</sup>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지원과 투자확대 정책은 장기적 차원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 3.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북한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에는 핵 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이 끊임없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려는 데에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양자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어 가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이들 문제가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의 군사력 증강, 미·일 동맹 강화, 북·미 및 북·일관계 악화 요인이 되고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킬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보이자, 6자회담 중국측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이

---

<sup>263</sup> 동아시아 협력과정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Daniel Sneider, “Asia’s Polite Reception To Bush Masks Declining US Influence,” *YaleGlobal* (November 17, 2005) <<http://yaleglobal.yale.edu/display.article?id=6531>> (검색일: 2005.11.19); Philip Bowring, “An Asian Union? Not Ye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cember 17~18, 2005) 을 참조.

비공식 6자회담을 제의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관련국에 대해 외교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하워드 호주 총리와의 회담 시(6.28)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나서서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사태가 발생했는바, 북한 미사일 사태는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김정일에 대해 불쾌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한반도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 통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과거 외부세계가 평가해 온 긴밀한 북·중 동맹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사태 발생 이후 중국은 무엇보다도 사태 악화를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와 우다웨이 부부장을 평양에 파견하여 김영남과 김계관 등 북한 지도부에게 미사일 추가 발사를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6자회담에 조기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까지 나서서 북·중 동맹 조약 체결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에게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에게는 후진타오-부시, 리자오싱(李肇星)-라이스 간 전화통화를 통해 중국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함으로써 북한 미사일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일본이 주도하여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초안은 너무 과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밝힘으로써 강경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

되지 않도록 하였다. 북한정권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영국 등이 제출한 결의안초안에서 유엔 헌장 7장을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여 대북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둘째, 중국은 기존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보고, 북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에서는 설득과 보상책만으로는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북한 김정일의 벼랑 끝 정책을 중단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중국 내에 이러한 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명확하고도 효과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미·일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되었다. 이에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법적 구속력과 제재 위협 없는 의장성명초안을 안보리에 제출(7.10)하여 북한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국에게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회피하도록 촉구하였다.

우다웨이-김계관 사이의 1차 평양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난 후에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일본안에 비해 훨씬 강도가 낮은 결의안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7.12)하였다. 중국측이 제출한 결의안초안의 중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를 강력 촉구하고, 외교와 대화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을 희망하며, 북한에게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에게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부품, 물질, 상품, 기술 제공을 방지하도록 유의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회원국에게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 물질, 기술을 구입하지 말도록 촉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가 심장하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일차적 목적은 실제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이 제출한 강력한 제재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중 동맹조약 체결 45주년 기념일 바로 다음날 유엔 안보리에 중국이 직접 대북 결의안초안을 상정하였다는 점은 북한의 위기악화 행동에 대해 중국까지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이 중국 대표단과의 회견마저도 거부하고 우다웨이의 대북 설득노력이 완전 실패하자, 중국은 더 이상 미·일에게 대북 결의안 상정을 유보하도록 요청할 명분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중국은 일본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유엔 헌장 7장 삭제와 대북 압박의 강도 완화를 주장하여 당초의 중국안과 유사한 대북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하였다.

셋째, 중국은 대북한 영향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북한을 배려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중국은 북한과의 기존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원조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대북 발언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요청을 전면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후 북·중 군사동맹조약 체결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후이량위 부총리의 방북,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의 방중 행사를 예정대로 거행하여 북한과의 지도부 접촉통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김정일이 중국대표단과의 접촉을 거부한 것과 달리, 중국 권력서열 1, 2위인 후진타오 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양형섭을 접견한 것은 북한에 대한 발언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교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식량제공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의 대북 압박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실전에 배치하는 데에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역내 경쟁국인 일본에게 핵무기 개발 등 군사 대국화의 명분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sup>264</sup>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주변 사태법에 근거하여 한반도 사태와 대만문제 등에 직접 개입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한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미·일동맹 강화에 대한 우려도 중국으로 하여금 북 핵 실험에 반대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미사일 방어망 구축문제에서 미·일의 협력이 적극화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도 북한의 핵 위협 하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중 안보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동북아에서 한·미·일간 군사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안보적으로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아울러 대만까지도 핵 보유의 유혹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이렇게

---

<sup>264</sup> Jing Huang, "Pyongyang's Nuclear Ambitions: China Must Act as a Responsible Stakeholder" <<http://www.brookings.edu/views/op-ed/fellows/huang20061013.htm>> (검색일: 2006.10.15).

된다면 대만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는 중국에게도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의 정치 중심지인 베이징은 북한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북·중관계가 악화된다면, 북한 핵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 체제상의 혼란이 발생하여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 내 테러단체인 동투르키스탄 분리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은 안보적으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경우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10월 3일 북한이 핵 실험 실시 계획을 밝힌 후 핵 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였다.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찬성하여, 북한에게 핵 실험 계획 취소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였다. 핵 실험을 실시할 경우 유엔안보리가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데에도 찬성함으로써 북한의 핵 실험을 막고자 하였다.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하기 직전에 개최된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고까지 무시하고 핵 실험을 실시한데 극도로 불쾌감을 느꼈다. 특히 중국이 16기 6중전회를 개최(10.8~11)하여 후진타오의 집권이념을 논의하고 있었던 시기인 10월 9일을 택하여 핵 실험을 실시한데 대해서도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핵 실험 실시 계획을 러시아에는 2시간 전에 통보한 반면, 중국에게는 불과 20분 전에 알려주었다는 점도 북·중관계가 특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의 지도부는 북한이 맹방이 아니라 중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트리플 메이커로 인식하게 되었고,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감싸주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 한 후, 중국은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과 미국에게 협상과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북한과 미국 등 관련국에게 추가 핵 실험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군사적 타격 등 강력한 제재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1718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중국은 유엔 헌장 7조는 원용하되 42조에 규정한 군사적 제재조치에는 반대하였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데 동조함으로써 더 이상의 벼랑 끝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제재의 길을 열어 놓게 되면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이 가능해지게 되고,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제재는 하되 군사 행동을 취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개선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 손상을 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2008년 하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이다.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미국의 협력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후진타오 지도부가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평화 애호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외교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국제규범과 합의

에 도전하는 북한의 정책을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sup>265</sup>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한적인 제재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은행들이 대북 송금 중단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북한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에 대해서도 중국은 검색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실시하면 원유 제공도 감축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시사함으로써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압박하고 있다.<sup>266</sup>

북·중 동맹조약 수정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점도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 실험 저지를 위한 또 다른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학자들은 북·중 동맹조약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하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베이징대학의 왕용 교수는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하여 군사적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북·중관계가 동맹관계에 있지 않고 정상적 국가간의 관계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중국의 교부는 공식 비망록을 통해 북한이 핵 실험으로 제3국의 침략을 받게 되면 중국은 동맹조약 규정에 따라 군사적 개입을 할 의무가 없다고

---

<sup>265</sup> 10월 20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중국 방문 시 북핵 문제와 수단 다르푸르문제 등 중요한 외교문제에서 중국이 점차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Glenn Kessler, "Rice Sees Bright Spot In China's New Role Since N. Korean Test"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6/10/21/AR2006102100296\\_pf.html](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6/10/21/AR2006102100296_pf.html)> (검색일: 2006.10.23).

<sup>266</sup> "劉建超, 六方會談仍是解決朝核問題的有效途徑" <<http://www.people.com.cn/GB/8212/9491/57325/4901978.html>> (검색일: 2006.10.11); Joseph Kahn, "Beijing Weighs Reducing Oil Shipment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ctober 20, 2006).

밝혔다는 것이다.<sup>267</sup>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게 되면 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향해 끊임없이 사태를 악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둘째, 대북 제재는 지지하지만, 북한 김정일 정권붕괴는 바라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을 견제하고자 하는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따라서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북 식량과 원유 제공을 인도주의적 원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붕괴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원조는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sup>268</sup>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해상 화물 검색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를 원치 않는 이유는 북한의 급격한 변화가 중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이다. 수백만 명의 북한 난민들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후진타오 지도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 계획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게 될 경우에도 영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중국을 괴롭힐 우려가 있다. 북한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북한에서 반드시 친중 정권이 탄생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중국이 북한 정권

<sup>267</sup> 이에 대해서는 중국계 홍콩지인 『文匯報』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中朝條約, 今朝如何解套?” <[http://www.wenweipo.com/news.phtml?cat=001YO&news\\_id=YO0610230006](http://www.wenweipo.com/news.phtml?cat=001YO&news_id=YO0610230006)> (검색일: 2006.10.23).

<sup>268</sup> “外交部發言人劉建超在例行記者會見上答記者問” <<http://www.fmprc.cn/chn/xwfw/fyrth/t276826.htm>> (검색일: 2006.10.20).

붕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미·중관계가 진정한 이해상관자(stakeholder)로 발전해야 하고, 한·중 간 신뢰가 강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6자 회담 재개 등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대북 제재조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북한에게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도록 자극하게 될 것이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고려에서 중국은 10월 31일 미국과 북한의 6자회담 대표 간 비밀접촉을 주선하여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하였다. 제재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 시킴으로써 중국외교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국이 제재 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여전히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중국의 경제발전과 역내 발언권 행사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수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정세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더 많은 자원을 안보 불안 해소에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은 수세에 몰리게 된다.

6자회담 과정을 주도해 온 중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6자회담이 2005년 11월 이후 중단됨으로써 일부 중국의 학자들 사이에서마저도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되고는 있지만,<sup>269</sup> 중국정부는 여전히

<sup>269</sup> 張璉瑰, “擔心伊朗模式加身朝鮮的真實意圖,” 『中國評論』, 9月號 (2006), pp. 7

6자회담의 효용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다자안보협력체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자신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지역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

4~76; 張璉瑰, “六方會談已經患疾?” <<http://www.beijingreview.com.cn/06-CN/06-01/w1.htm>> (검색일: 2006.10.23).



# VI

## 러시아의 동북아전략과 대북전략



## 1. 러시아의 동북아전략

‘강한 러시아’ 건설을 주창하여 2000년 3월 대통령에 공식 선출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시켜 2004년 3월 재선되었다. 그는 5월 7일 집권 2기이며 제4대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 때 향후 4년간 목표를 축적된 잠재력을 새로운 발전 에너지로 전환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실질적이고 확실한 복지 향상을 이루는데 두었다. 그리고 그는 정치안정과 경제발전 및 강하면서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를 강조하였다.<sup>270</sup>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친여당 의석이 약 72%에 달하는 여대야소의 연방하원(국가두마)과 러시아 수출품의 약 64%를 차지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높은 국제가격은 러시아 정치안정과 신속한 경제회복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2003년 7.3%, 2004년 7.2%, 2005년 6.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05년 11월 말까지 러시아의 수출은 2,206억 달러(2004년 동기 대비 34.6% 증가), 수입은 1,111억 달러(2004년 동기 대비 28.9% 증가)로서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1,095억 달러(2004년 878억 달러)에 달한다.<sup>271</sup> 이러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러시아 정부는 교육, 보건, 농업, 주택건설 등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주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안정과 경제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

<sup>270</sup>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Remarks by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t Presidential Inauguration Ceremony The Kremlin” (Moscow: May 7, 2004) <<http://www.In.mid.ru>> (검색일: 2004.05.07), p. 2.

<sup>271</sup> “러시아 경제동향(2005년)” <<http://www.mofat.go.kr>> (검색일: 2006.2.14).

고 푸틴 대통령은 현재 모스크바로의 권력집중과 언론 제한 등 때문에 ‘권위주의로의 복귀’라는 대외적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연 10% 이상의 인플레이션과 극심한 빈부 격차, 관료 부패, 사회범죄, 법체제 미비 등의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제정세와 관련, 러시아는 세계가 신속히 변하고 있고 테러, WMD 확산, 분쟁지역의 증가 및 구소련공화국으로의 확산, 군비경쟁, 핵무기의 우주 배치, 소용량 핵물질의 제조와 확산 등 다수의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이전 보다 덜 예측적이고 위협의 정도를 완전히 측정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테러 위협은 매우 실질적이고, WMD가 테러주의자들 손에 들어가면 그 결과는 매우 재앙적인 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세계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는 대내적으로는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에 기초된 비확산 레짐의 강화를 지지하면서 핵무기와 군사적·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강력한 지렛대를 보유한 세계의 강대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sup>272</sup>

상기와 같은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기초로 현재 푸틴 대통령은 실용주의, 예측성, 국제법의 우위라는 세 가지의 대외정책 원칙을 가지고 전방위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개혁 작업에 큰 이해를 갖고 있으며 구성국들과의 동반자관계 강화, CIS내 지역분쟁의 봉쇄를 위한 적극 참여, 평화유지 활동 지속, 생산적인 경제협력, 집단안보조약기구 창설을 위한 기초 마련 등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

---

<sup>272</sup> “President of Russia: Annual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http://www.president.kremlin.ru>> (검색일: 2006.5.10), pp. 7~8.

성되고 있는 세계화의 시대에 유엔은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국제포럼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며 세계질서의 중추로 계속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기구의 기초는 냉전시대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은 ① 개혁이 유엔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되도록 하고, ② 회원국들 다수의 폭 넓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가장 큰 파트너인 EU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관계와 과학, 문화, 교육 및 기타 분야의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미국, 중국, 인도, 신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국가들과 협력 분야를 확대할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고, 세계 및 지역 안보에서 협력을 증대하며, 상호 무역과 투자를 발전시키고 문화와 교육 관계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sup>273</sup> 푸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전략은 정치·안보 면에서 대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강화, 대미 비대결적 관계 유지, 대일 우호관계 확대와 군사대국화 견제, 대한민국 포괄적 동반자관계 확대 및 대북한 선린 우호관계 발전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제 면에서는 역내국가들과 교역 확대, 국내경제 발전 및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시베리아 에너지 자원의 외교적 활용 등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들을 2절에서 상세히 다루어질 북한을 제외하고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sup>273</sup> “President of Russia: Annual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pp. 10~11.

## 가. 정치·안보 분야

### (1) 대중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푸틴 대통령은 대중국 관계에서 우호협력 강화, 안보협력과 군사무기 판매 확대, 경제협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러시아의 대중 관계는 1949년 10월 중국과의 수교이후 최고조에 달해있다.

1990년대 러시아는 정상 및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 등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이는 냉전시대에 약 30년 간을 끌었던 중소분쟁이 1980년대 말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옐친 대통령과 장쩌민 국가주석이 1996년 4월 베이징에서 양국관계를 ‘21세기를 대비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sup>274</sup>로 발전시킬 것을 표방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이 가능했던 것은 국경선 주둔 병력 감축협상,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에 대한 대비책 마련, NATO 확대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지지 등 때문이었다.

2000년 이후에도 러시아는 중국과 정례 정상회담 개최, 고위인사 상호방문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향후 20년간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sup>275</sup>이 모스크바에서 2001년 7월 체결되었고, 양국은 2002년 12월, 2004년 10월, 2006년 3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과 2003년 5월, 2005년 7월 후진타오

---

<sup>274</sup> “Joint Statement Issued on ‘Strategic Partnership,’” FBIS-CHI-96-081, pp. 1~2.

<sup>275</sup> 총 24조로 구성된 이 조약은 전략협력 동반자관계의 장기적·전면적 발전(제1조), 핵무기 선제불사용과 전략핵탄두 상호 불겨냥(제2조), 러시아의 영토보존 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대만의 독립 반대에 대한 러시아의 재확인(제4조~제5조), 변경지역에서 군사적 신뢰 강화와 상호 군사력 감축(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Xinhua: Text of Sino-Russian Treaty,” FBIS-CHI-2001-0716, pp. 1~5.

국가주석의 방러 등을 통해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일련의 회담에서 세계질서 다극화를 위한 협력의 지속, 유엔안보리의 권위 유지와 국제법 원칙 준수를 위한 노력,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체첸의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대응, 「상하이협력기구」(SCO)<sup>276</sup> 역할과 기능의 확대·발전, 미국 주도의 반테러 국제전쟁에 대한 동참 등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회담 이외에 러시아는 양국 총리와 부총리, 외무장관의 상호 초청·방문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전략협력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르강과 아르군강에 있는 3개(볼쇼이우스리스크, 타라바로프, 볼쇼이) 섬에 대한 통제권 문제도 2004년 10월 양국 국경협정에서 완전 해결되었다.<sup>277</sup>

이와 같이 양국 관계가 긴밀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2006년 3월 베이징을 공식 방문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중·러 공동성명」<sup>278</sup>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은 1996년부터 유지해온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켜 수교 57년 만에 최고의 밀월시대를 맞게 되었다. 2006년 중국은 ‘러시아의 해’를, 2007년 러시아는 ‘중국의 해’를 각각 기념하기로 합의하였다.

안보면에서, 1990년대 러시아의 대중국 안보관계는 확대되었다. 러

<sup>276</sup> 1996년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은 상하이에서 열린 5개국 회담에서 회원국 상호간 신뢰와 우호 증진, 각 분야의 협력 관계 구축, 역내 평화·안보·안정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에 합의하였다.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으로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다가 2001년 6월 14~15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6차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을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고 SCO로 정식 출범하였다.

<sup>277</sup> 중국은 타라바로프 섬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고, 양국은 볼쇼이 섬과 볼쇼이우스리스크 섬을 분할지배하기로 합의하였다.

<sup>278</sup> 공동성명은 전문과 9장 및 29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ull Text’ of Sino-Russian Joint Statement Signed by Hu Jintao, Putin” <<http://toolkit.dialog.com>> (검색일: 2006.3.23).

시아는 중국과 군사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무기수출을 통한 경제이익을 도모하였으며,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소련 붕괴이후 동북아에서 생긴 힘의 공백을 메우려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1996년 4월 17일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직후 중·러 양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4월 25일 확립하고 안보·군사 협력관계를 심화하였다. 특히 1999년 양국은 코소보 사태와 미·일의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계획, 체첸문제, NATO에 의한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 문제 등과 관련하여 상호입장을 긴밀히 조율하면서 미국의 패권정책에 공동 대처하였다.

2000년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정례 정상회담 개최, 안보관련 고위인사 상호방문, 군사교류·협력을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계획과 국제안보질서 주도에 반대하고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지향하고 있다. 2000년 중·러 양국은 제55차 유엔총회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 준수 결의안’을 통과시켜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와 TMD체제 구축 계획을 견제하고, 대만을 TMD 체제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러시아가 적극 지지하였다. 2001년 7월 16일 양국은 동맹조약을 폐기한지 21년 만에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군사협력 강화, ABM조약의 유지 등을 선언하였다. 2005년 러시아는 중국과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의기구를 창설하였고, ‘평화의 사명 2005’로 명명된 최초의 양국간 합동군사훈련을 8월 18~25일 블라디보스톡과 산둥반도 및 황해에서 약 1만 명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현재 중·러 양국은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기초로 북핵 등 동북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테러 등 세계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유

엔과 SCO 등 지역안보 기구들에서 공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무기 판매와 관련, 푸틴 대통령의 적극 정책으로 러시아는 무기판매에서 2001년 이후 세계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0~2004년 러시아의 무기판매 총액 269억 2,500만 달러 중 중국은 111억 1,200만 달러(41%)를 차지하고 있다.<sup>279</sup>

## (2) 대미 비대결적 관계 유지

러시아는 현재 유일 초강국 미국과 비대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WMD 확산과 테러 및 마약 방지, PSI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협력하는 한편, 이라크와 이란, 북한 문제 등 자신의 이해가 중대한 지역에서는 미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직후 체제개혁을 추진하면서 1992년 약 1년간 경제난 극복을 위해 친서방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옐친 대통령은 (아버지)부시 미 대통령과 1992년 2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가 잠재적 적국이 아닌 동반자관계임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서방의 경제지원이나 투자가 러시아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러시아는 NATO의 동구확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1992년 말과 1993년 초, 즉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미정책을 재평가하고 이후 구소련공화국과 동구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유라시아정책을 수행하였다. 특히 1996년 4월 미·일 신안보체제와 이에 대응하는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은 동북아 안보질서를 미·일 대 중·러간 대립구도로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러시아는 같은 해 여름 옐친 대통령

<sup>279</sup>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420.

이 재선된 것을 계기로 강대국 지위 유지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여건 조성을 위해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유라시아외교를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전방위외교로 전환시켰다.

2000년 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전방위외교를 계승하면서 실용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자 클린턴 미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통해 러시아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을 요청하였다. 이후 ABM조약 개정과 NMD체제 구축 문제, 체첸 사태 등으로 미·러간 갈등이 노정되었으나, 2001년 9·11 사태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공조합의 등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관계가 재정립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정례적인 정상회담이나 외무장관 회담 등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간 및 세계적 차원의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WTO 가입이나 교역 등 경제문제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권위주의로의 복귀, 인권, 구소련공화국들의 친서방화, 이란 원전건설 문제 등은 양국 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민주주의 상태와 에너지 자원의 정치적 목적 이용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비판이 이란문제를 포함한 국제현안에 대한 양국 간 공동업무를 촉진하지 못할 것이고 모스크바와 워싱턴 관계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280</sup>

안보면에서, 냉전종식에 따라서 쿠나제 외무차관은 1992년 4월 13~15일 워싱턴에서 솔로몬 미 국무부 아·태 지역담당 차관보와 가진 양국간 첫 협의에서 핵무기기술 비확산과 군사데탕트 문제 등을 논

---

<sup>280</sup>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Making thinks rough: Article by Yuri V. Ushakov" (Russian Ambassador to Washington, published: May 19, 2006) <<http://www.In.mid.ru>> (검색일: 2006.5.19).

의하였다. 또한 협상 결과 1993년 1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 체결, 1994년 1월 『핵무기 상호겨냥 중지협정』 체결, 6월 러시아와 NATO간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 계획』(PFP) 서명, 9월 러시아 영토 내에서 최초의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이 있었다. 그러나 NATO의 동구확대로 양국간 대립과 갈등이 부분적으로 표출되었다. 엘친 대통령은 1996년 4월 미·일 신안보체제에 대응하는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러시아의 안보를 공고히 하였다. 엘친 대통령의 재집권이후 추진된 전방위외교에 따라서 대미관계가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미·일의 TMD 계획에 의해 다시 갈등을 빚었다.

2000년 집권한 푸틴 대통령도 미국과 우호관계의 발전을 모색하였으나, ABM 조약 개정과 NMD체제 구축 문제, 체첸, 이라크 사태 등으로 양국간 갈등이 노정되었다. 푸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양국관계에 신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2005년 2월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 정상회담이었다. 양국 정상은 핵무기의 비확산, 대테러 전쟁 등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이란, 북한, 중동, 구소련 공화국 문제 등 지역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러시아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2003년 6월 창설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2004년부터 참여하고 있고, 2006년 7월에는 북한이나 이란이 테러 세력에 핵 물질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핵테러방지구상』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냉전시기에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형성되었던 군사동맹들이 탈냉전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일이 적극 추진 중인 MD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이 프로그램의 행동권에 러시아 극동 지역의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면서 중국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3) 대일 우호관계 확대와 군사대국화 견제

러시아는 일본과 고위인사 교환방문, 군인사 교류 등을 통해 정치, 안보·군사,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나 북방영토와 MD 문제가 관계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초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회복 및 동북아 정세안정을 위하여 일본과의 우호관계 발전을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평화조약 체결과 북방영토 문제 논의에 적극성을 보였다. 옐친 대통령은 1993년 10월 방일, 평화조약 체결시 북방영토 2개 도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1956년 10월 『일·소 공동선언』등 “기존 협정들에 입각하여 처리한다”는 『도쿄선언』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의 ‘선 경협, 후 영토협상’ 입장과 일본의 ‘정경불가분의 원칙’ 입장 대립으로 답보 상태가 계속되었다. 또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모색과 관련하여, 옐친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개혁문제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일본과 정상회담, 고위인사 교환방문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였으나 북방영토, 유엔안보리 개혁, 일본의 TMD 구축 문제 등은 양국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과 4월 모리 일본 총리의 취임이후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국회의원 회담 등을 통해 양국은 정상관계를 유지하면서 북방영토와 평화조약 문제 등 현안 해결을 모색하였다. 2003년 1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러시 양국은 21세기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6개 행동계획’<sup>281</sup>도 채택하였다.

<sup>281</sup> 6개 행동계획은 ① 정치대화 확대 조치, ② 평화조약 회담, ③ 국제무대에서 협력, ④ 교역 및 경제협력, ⑤ 군사 및 법 이행 분야에서 광범한 접촉, ⑥ 양 국민 간

그러나 2004년 11월 산티아고 APEC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2개 도서 반환과 2개 도서 평화협정 체결후 추가 협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대규모 경협을 내세워 4개 도서 모두 반환 이후 평화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이견이 노정되는 가운데 2004년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을 담당해온 제2아시아국을 폐지하고 중국 및 한반도를 관할하는 제1아시아국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일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불쾌함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는 2개 도서만을 일본측에 반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일본이 거부할 경우 반환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sup>282</sup> 푸틴 대통령은 일·러 통상조약 150주년 기념일을 맞아 2005년 2월 방일할 예정이었으나 북방영토 문제로 11월로 연기 되었다.

안보면에서, 러시아는 1993년 군사독트린에서 ‘적대국가’ 부재를 선언하였고, 일본도 1994년 ‘방위백서’에서 러시아를 자국에 대한 최대 위협국에서 제외시켰다. 양국은 동해상에서 합동수색 구조훈련을 1994년 9월 최초로 실시하였다. 우스이 방위청 장관이 전후 최초로 1996년 4월 러시아를 방문하고 대규모 군사훈련 상호통보, 국방정책 공표, 고위 국방당국자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체체바토프 러시아 극동군 사령관도 최초로 5월 방일하였다. 1999년 8월에는 국방장관 상호 교환방문과 합동훈련 지속 실시 등의 「방위교류 각서」가 체결되었다.

2000년 이후 푸틴 대통령은 대일 안보·군사협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북방영토, MD 문제 등으로 통상적인 군인사 교류와 초보

문화적 접촉과 교류의 확대이다. “Moscow, Tokyo to set up hotline” <<http://toolkit.dialog.com/intranet/cgi/present>> (검색일: 2003.1.10).

<sup>282</sup>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terview of Russian Ambassador to Japan Alexander Losyukov,” Published in the Newspaper *Vremya Novostei* (January 26, 2005) <<http://www.In.mid>> (검색일: 2005.1.26).

적 수준의 군사협력 및 러시아의 노후 핵잠수함 41척 폐기를 위한 일본의 지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9월 푸틴 대통령은 도쿄에서 모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정보 교환, 군고위급 접촉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일의 TMD 체제와 미국의 NMD 체제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의 노후 핵잠수함 해체와 폐 플루토늄의 안전한 제거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2년 6월 2일 러시아 외무부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후쿠다 일본 관방장관 발언에 우려를 표명하였다.<sup>283</sup>

2003년 1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러시아를 방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방위교류 등에 합의하고 북한 NPT 탈퇴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sup>284</sup> 상호방위교류의 일환으로 8월 러시아의 나훗카 앞바다에서 실시된 러시아의 테러대책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초로 참가하였고, 2004년 8월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일본 군항을 친선 방문하였다. 10월 러시아의 퇴역 핵잠수함 1척이 일본정부 지원으로 최초로 해체되었으며 2005년에도 추가해체 문제가 논의되었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이후 일·러 양국은 긴밀한 협력 하에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sup>283</sup> “러, 일 ‘핵무기 보유 가능’ 발언에 우려,” 『연합뉴스』, 2002년 6월 4일.

<sup>284</sup> “Russia’s Putin hails positive relations with Japan”  
 <<http://toolkit.dialog.com/intranet/cgi/present>> (검색일: 2003.1.10).

#### (4) 대한민국 포괄적 동반자관계 발전

푸틴 대통령이 2000년 6월 승인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sup>285</sup>에 의하면,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을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사안으로 지적하고 첫째, 한반도문제에 대해 동등한 참여를 확보하며, 둘째, 남북한과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러시아 정부는 정치면에서 한반도 안정, 경제면에서 남북한과 경제관계 발전, 안보·군사면에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면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점진적 통일을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한민국 정책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9월 30일 한·수 수교와 1991년 말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체제전환으로 인한 정국 불안과 극심한 경제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의 정치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에 큰 이해를 가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열린 대통령이 방한하여 양국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한·러 기본관계조약」<sup>286</sup>을 1992년 11월 체결하였고, 양국관계는 ‘우호협력관계’로 특징 지워졌다. 이후 양국 정치관계가 발전되는 가운데 1994년 6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sup>287</sup>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규모 지원이나 투자의 부재, 1993~1994년의 제1차 북핵위기 해결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에서 러시아의 소외, 1998년 7월 정보외교관 상호 추방사건 등으로 한·러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는 1999년 5월 28일 열린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관계를 회복하였다.

<sup>285</sup>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mid.ru/mid/eng/econcept.htm>>.

<sup>286</sup> 외무부, 『러시아연방개황』 (1995. 9), pp. 203~216.

<sup>287</sup> 외무부, “한·러 공동선언,” 『러시아연방개황』 (1995. 9), p. 217.

실용주의에 기초한 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여 2001년 2월 27일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대표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와 양국간 경협에 관해 집중 협의하였다. 러시아는 군사무기 판매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사업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2004년 한·러 양국은 「조·러 수호통상조약」 체결 120주년 및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맞이하여 외무장관의 상호방문 및 9월 푸틴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sup>288</sup>로 격상시켰다. 양국 간에는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정부와 의회 및 언론사 고위인사들 간의 상호방문이 활성화되고 있다.

안보면에서, 1990년대 한·러 안보·군사관계는 군 고위인사 교류, 정상회담, 제1차 북핵 위기시 협력 등을 통해 방산협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양국간 군 고위인사 교류는 1992년 송용섭 합참 제1차장의 7월 방러와 코코쉬 러시아 국방부 제1차관의 10월 방한으로 시작되었다. 옐친 대통령은 11월 방한하여 다자안보협의체 형성, 국제적 무력분쟁 조정기구와 지역전략 연구센터의 설립을 제의하였다. 양국은 WMD 감축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지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재확인, 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화 전환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지원 등을 「한·러 공동성명」<sup>289</sup>에서 밝혔다. 러시아는 제1차 핵위기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대북 직접 압력과 미국 등 서방과 공조를 통해 이 문제들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였다. 상기와 같은 안보·군사 관계를 기초로 1997년 11월 양국 정부간 「군사기술·

<sup>288</sup> “한·러 공동선언(모스크바, 2004. 9. 21)” <<http://www.mofat.go.kr>> 참조.

<sup>289</sup> 외무부, “한·러 공동성명,” 『러시아연방개황』 (1995. 9), pp. 189~202.

방산·군수 협력 협정』, 1998년 5월 양국 국방차관 간 『상호교환방문 합의각서』가 각각 체결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러·한 양국간 군사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었고 방산·군수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러시아 정부는 제2차 북핵위기와 핵실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11월에는 제1차 『한·러 군사기술·방산·군수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군사기술·방산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푸틴 대통령이 2001년 2월 27일 방한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다자대화의 실현, CTBT조약의 조기발효, ABM조약의 보존강화 등에 합의하였다.<sup>290</sup>

2003년 4월 이바노프 국방장관의 방한, 제2차 『한·러 군사기술·방산·군수 공동위』의 모스크바 개최 등을 통해 양국간 군사적 신뢰증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가 발전되었다. 2005년 4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한·러간 무기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방산협력 양해각서』의 체결에 합의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sup>290</sup> 여인근,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참조.

## 나. 경제 분야

### (1) 역내국가와 교역·투자의 확대

러시아의 대중 교역은 1995년 42억 3,600만 달러에서 2004년 148억 5,100만 달러로 대폭 증가(251%) 추세에 있다. 수출은 33억 7,100만 달러에서 101억 300만 달러로 200%, 수입은 8억 6,500만 달러에서 47억 4,800만 달러로 449%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교역수지는 25억 600만 달러에서 53억 5,500만 달러로 114% 증가하였다(<표 VI-1> 참조).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대중 교역구조가 원자재 수출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5년 말까지 중국으로부터 약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표 VI-1> 러시아의 대중 교역추이

(단위: 100만 달러)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	3,371	5,248	5,596	6,837	8,252	10,103
수입	865	949	1,646	2,401	3,295	4,748
교역액 (교역수지)	4,236 (2,506)	6,197 (4,299)	7,242 (3,950)	9,238 (4,436)	11,547 (4,957)	14,851 (5,355)

출처: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http://www.gks.ru>>.

러시아의 대미 교역은 1995~2001년 시기에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2002년에는 1995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교역액은 1995년 69억 6,300만 달러에서 2004년 97억 8,300만 달러로 40% 증가하였다. 수출은 43억 1,500만 달러에서 65억 8,600만 달러로 53%, 수입은 26억 4,800만 달러에서 31억 9,700만 달러로 21%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대미 교역수지도 16억 6,700만

달러에서 33억 8,900만 달러로 103% 증가하였다(<표 VI-2> 참조). 러시아는 2003년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약 1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표 VI-2> 러시아 대미 교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	4,315	4,644	4,198	3,989	4,206	6,586
수입	2,648	2,694	3,253	2,980	2,959	3,197
교역액 (교역수지)	6,963 (1,667)	7,338 (1,950)	7,451 (945)	6,969 (1,009)	7,165 (1,247)	9,783 (3,389)

출처: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http://www.gks.ru>>.

러시아의 대미 경제관계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WTO 가입 문제이다. 러시아는 2006년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및 콜롬비아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미국은 외국의 은행지점들이 러시아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이 경우 러시아 내에서 금융흐름을 러시아 정부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291</sup>

러시아의 대미 교역액은 1995년 39억 3,600만 달러에서 2002년 27억 8,300만 달러까지 감소했다가 2004년 73억 6,400만 달러로 1995년 대비 87% 증가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교역이 감소했다가 2000년 이후 경제회복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

<sup>291</sup>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 major press conference given by President Vladimir Putin for the Russian and foreign media has taken place at the Kremlin" (Moscow: January 31, 2006) <<http://www.In.mid.ru>> (검색일: 2006.2.3), p. 5.

된다. 수출도 1995년 31억 7,300만 달러에서 2002년 18억 300만 달러로 감소되었다 2004년 34억 2,300만 달러로 1995년 대비 8% 증가하였다. 수입은 1995년 7억 6,300만 달러에서 2004년 39억 4,100만 달러로 417%의 대폭 증가세를 보였다. 교역수지는 1995년 24억 1,000만 달러에서 2004년 -5억 1,800만 달러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표 VI-3> 참조). 러시아는 2003년 말까지 일본으로부터 약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표 VI-3> 러시아 대일 교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	3,173	2,764	2,427	1,803	2,420	3,423
수입	763	572	871	980	1,876	3,941
교역액 (교역수지)	3,936 (2,410)	3,336 (2,192)	3,298 (1,556)	2,783 (823)	4,296 (544)	7,364 (-518)

출처: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http://www.gks.ru>>.

러시아의 대한민국 교역은 1995년 12억 4,900만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39억 8,600만 달러로써 219% 증가하였다. 수출은 7억 4,700만 달러에서 19억 6,100만 달러로 163% 증가하였고, 수입은 5억 200만 달러에서 20억 2,500만 달러로 303% 증가하였다. 교역수지는 1995년 2억 4,500만 달러에서 2000년 6억 1,3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가 이후에는 수입의 증가로 흑자가 감소하여 2003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어 2004년 -6,400만 달러이다(<표 VI-4> 참조). 러시아는 2005년 8월 말까지 한국으로부터 약 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표 VI-4> 러시아의 대한민국 교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	747	972	1,108	1,271	1,322	1,961
수입	502	359	726	930	1,328	2,025
교역액 (교역수지)	1,249 (245)	1,331 (613)	1,834 (382)	2,201 (341)	2,650 (-6)	3,986 (-64)

출처: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http://www.gks.ru>>.

## (2) 에너지 자원의 외교적 활용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은 세계 육지면적의 1/10을 점유하고 있는 광활한 지역으로 에너지 자원과 각종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유 생산 및 수출국(하루 950만 배럴 생산, 650만 배럴 수출)이고,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국(연 5,900억 m<sup>3</sup> 생산)인데 이러한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대부분 시베리아·극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sup>292</sup> 러시아의 수출품 중 원유·천연가스가 64%를 차지하고 있고 1999년부터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러시아 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세계는 현재 자원전쟁에 돌입하였고, 러시아 정부는 이를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 중·일은 이 노선을 자국과 연결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왔다. 2003년 5월 푸틴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시베리아에서 생산될 원유를 중국에

<sup>292</sup>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중만,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경제의 미래,” 정여천 편, 『한·러 경제교류 10년의 평가와 러시아 경제의 미래』(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pp. 293~294.

최우선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파이프라인 건설에 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자, 러시아 정부는 2006년 2월 말 이르쿠츠크 지역 타이셰트(Taishet) → 아무르 지역 스코보로디노(Skovorodino) → 태평양 페레보즈나야(Perevoznaya) 만까지 총 4,100km의 동시베리아-태평양 원유 파이프라인(일본 라인)을 최종 승인하였다(<그림 VI-1> 참조).<sup>293</sup>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우선 1단계로 타이셰트 → 스코보로디노 지역까지만 건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2단계로 추후에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미·일 동맹 강화에 직면한 러시아 정부가 에너지 자원을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림 VI-1> 러시아의 동시베리아-태평양 원유파이프라인 건설계획



출처: “ESiberia-Pacific Ocean Pipeline Construction” (August 23, 2006) <<http://www.yakutiatoday.com>>.

2006년 3월 베이징 정상회담 시 푸틴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러시아가 향후 5년 내 중국에 연간 300~400억m<sup>3</sup> 천연가스의 수

<sup>293</sup> “The Sino-Russian romance” (March 21, 2006) <<http://www.atimes.com>>

송을 위한 2개의 가스관(동시베리아 파이프라인, 서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2011년부터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sup>294</sup> 그러나 중국이 희망하는 시베리아 원유 수송을 위한 별도의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은 타당성 검토가 끝난 이후에나 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도 동시베리아 원유 파이프라인의 2단계 건설(아무르 지역 스코보로디노 → 태평양 페레보즈나야만)과 관련된 중·일간의 경쟁을 외교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 2. 러시아의 대북전략과 북·러관계의 변천

### 가. 러시아의 대북전략

러시아의 대북전략은 정치, 군사·안보, 경제 면에서 전통적 선린관계 유지, 대량살상무기 개발 방지, 교역 확대와 다자간 경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중요한 목표는 안보를 확보하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우호적인 대외적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과의 전통적 선린관계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sup>294</sup> “Meeting with Russian Journalists Following the Ceremonial Signing of Russian-Chinese Documents” (March 21, 2006) <<http://www.president.kremlin.ru>>.

러시아는 남북한 통일을 먼 장래의 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시까지는 남북한이 대화의 증진을 통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이나 북한에서 돌발사태의 발생은 동북아 세력균형을 변화시키고 이는 러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sup>295</sup>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 정부는 한국과는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과는 전통적 선린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1992년 12월 1일 발표한 「러시아 대외정책문서」<sup>296</sup>에 의하면 러시아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2000년 6월 28일 승인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sup>297</sup>에 의하면 러시아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21세기 세계안보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의 대북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1993년~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뿐만 아니라,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 이후 6자회담 등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의 1998년 8월 31일과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으로 러시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교역 확대와 다자간 경험 등 경제관

---

<sup>295</sup> 여인곤 외, 『대북포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변 안보·외교환경 조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144~145 참조.

<sup>296</sup> “Foreign Ministry Document Outlines Foreign Policy,” FBIS-SOV-92-232, pp. 3~5.

<sup>297</sup>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mid.ru/mid/eng/econcept.htm>>, pp. 3~4.

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한 교역액은 1995년 8,540만 달러이었으나 2000년~2002년 시기에는 이에 미치지 못하다가 2003년에 1억 1,390만 달러, 2004년 2억 980만 달러로 1995년 대비 146%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역액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이 러시아의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은 1995년 7,100만 달러에서 2004년 2억 500만 달러로 192% 증가하였고, 수입은 1억 5,300만 달러에서 480만 달러로 69% 축소되었다. 러시아의 대북한 교역수지는 1995년 5,480만 달러에서 2004년 2억 20만 달러로 265% 증가하였다(<표 VI-5> 참조).

<표 VI-5>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	70.1	38.4	61.8	68.7	111	205
수입	15.3	7.7	16.7	11.0	2.9	4.8
교역액 (교역수지)	85.4 (54.8)	46.1 (30.7)	78.5 (45.1)	79.7 (57.7)	113.9 (108.1)	209.8 (200.2)

출처: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http://www.gks.ru>>.

또한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 및 이 지역의 아·태경제권 편입 차원에서 TSR-TKR 연결과 원유·천연가스 공급, 한반도와 도로 연결 등에 이해를 갖고 있다. 2001년 7~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시 열차에 동행했던 폴리코프스키 전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에 의하면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남북한·중·일 등과의 다자간 경제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 사할린 대륙붕의 원유·가스 개발 프로젝트

- 남아쿠티야-사할린-일본, 연해주-북한-남한을 연결하는 전력 공급망 프로젝트
- 중국·몽골·북한과의 국경무역 발전 프로젝트
- 북한의 선봉 정유공장 복구 및 정유품 일부의 러시아 극동지역 공급
- 수산물 가공생산 및 어업분야의 남북한·일본간 합작사업
- 치타-하바로프스크-나호트카 구간과 바이칼-아무르 철도 주변의 자동차 도로 건설 및 서울·평양 도로와의 연결 등<sup>298</sup>

## 나. 북·러관계의 변천

1991년 말 러시아연방의 출범이후 북·러 관계는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2000년 1월 푸틴 대통령의 집권을 기준으로 관계 악화기, 관계 회복기, 보편적 국가관계 정립기라는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 (1) 관계 악화기(1991년 12월~1994년 7월)

러시아가 출범한 1991년 말부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 7월 까지 북·러 관계는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 정부는 “제 분야에서 결속되어온 모스크바와 평양이 이념적 차이로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것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목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은 과거에 이룩한 긍정적인 성과와 선린관계를 강화·발전시켜야 한다”<sup>299</sup>는 입장을 취하

<sup>298</sup>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동방특급열차: 김정일과 함께한 24일간의 러시아 여행” (서울: 도서출판 중심, 2003), pp. 81~85.

<sup>299</sup> Alexander Z. Zhebin,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였다. 옐친 대통령은 1992년 1월 로가초프 특사를 평양에 파견해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모색하였고, 독립국가연합(CIS)의 군사대표단은 3월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군사대표단과 『CIS군과 북한군간 92~93년도 군사교류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93년 1월 평양을 방문한 쿠나제 외무차관은 북한과의 친선관계 강화에 합의하였고,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북한 경제대표단이 8월 6~16일 최초로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양국은 이를 통하여 민간 차원의 무역협회 창설과 북한의 나진항을 한국, 일본, 동남아로 연결하는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는 등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북·러 간에는 어업분야에서의 협력도 활발히 전개되었다.<sup>300</sup>

그러나 이 시기에 전반적인 북·러 양국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다. 이는 러시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함에 따라서 양국 간 사회주의 연대성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점,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였다는 점, 러시아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한국 중심의 경협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이념면에서 구소련과 북한의 관계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으나,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탈이념적 외교정책을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서 대북한 관계도 과거의 이념적, 군사적 특수관계를 배제한 우호관계를 모색하였다. 즉 러시아는 동북아질서 재편과 대한국 관계의 진전을

---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October 13~14, 1992), p. 29.

<sup>300</sup> Yakubovsky, 『러시아-북한간의 경제협력: 문제점과 전망』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 학술세미나, 1995. 5. 3), p. 3; 『내외통신』 종합판(50) (1993. 10. 1~12. 31), pp. 134~135.

고려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북한 관계를 이념에 기반을 두지 않고 국익을 기초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1996년 9월 10일까지 유효한 1961년 체결된 동맹조약, 즉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조약」<sup>301</sup>을 계속 유지하되 제1조 자동군사개입 규정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러시아는 “북한에 의하여 도발되지 않는 침략의 경우 동 조항에 의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 이행의 의무가 있다”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sup>302</sup> 공수동맹의 성격을 가졌던 북·소 동맹조약이 방어적 군사동맹으로 약화된 것은 북·러간 사회주의 연대성의 단절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접경국가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것을 국익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소 수교에 자극되어 핵개발을 본격화하였고,<sup>303</sup> 이를 저지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이 시기에 북·러 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경우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sup>304</sup>

<sup>301</sup> 북·소 동맹조약 제1조는 “체약국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국은 지체없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물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nstitut Vostokovedeniya Akademii Nauk SSSR, *Otnosheniya Sovetskogo Soyuzs s narodnoy Koreey 1945~1980, Dokumenty i Materialy* (Moskva: Izdatelstvo Nauka, 1981), pp. 196~198.

<sup>302</sup>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March 4, 1992), p. 26; *Izvestiya* (1992. 8. 13).

<sup>303</sup> 1990년 9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이 평양을 방문하여 한·소 수교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을 때, 김영남 외교부장은 고르바초프가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평양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다는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zvestiya* (1994. 6. 15).

<sup>304</sup> 트카첸코, 『러시아-북한관계의 변화와 양한관계 영향』 (한양대 중소기업연구소 세미나, 1993. 5. 24); 연합통신사, 『주요자료 전문집』, 1993년 6월 1일, p. 104.

따라서 러시아는 1992년 말 모스크바 공항에서 북한으로 탈출하여 핵기술을 이전하려던 30명 이상의 러시아 과학자들을 제지하는 등 자국 핵과학자와 핵연료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이 IAEA의 사찰과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수락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양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한·미·일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이 결과 러시아 정부는 북핵문제가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시기 북·러 관계 악화 원인중 하나는 러시아의 대북한 경제관계 소원과 한국 중심 경협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부터의 전면적 경화결제에 따라서 북·러간 무역량이 계속 감소하였고(<표 VI-6> 참조), 북한이 전체량중 약 1/3을 구소련에 의존하고 있던 원유,<sup>305</sup> 석유제품, 석탄, 괴탄 등 연료와 에너지 수입도 1/10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전력과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북·러 간의 시베리아 산림개발 합작사업도 별목 노동자와 전문가들의 부족에 기인한 북한 측의 계약 불이행 및 인권침해로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sup>306</sup> 반면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이 증가하고, 러시아 시장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진출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양국 간 무역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1993년 양국 무역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한국 중심 경협정책에 따른 이와 같은 한·러 경협의 점진적 확대는 북·러 경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sup>305</sup> 『러시아 경제학 연구소』의 평가에 의하면 북한의 원유 수입은 1990년 50만 톤, 1991년 42만 톤, 1992년 2만 5천 톤으로 각각 감소되었다. Yakubovsky, 『러시아-북한간의 경제협력: 문제점과 전망』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학술세미나, 1995. 5. 3), p. 1.

<sup>306</sup> 『내외통신』, 종합판(47) (1993. 1. 1~3. 31), pp. 111~112.

<표 VI-6>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교역실적  
(단위: 백만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대 북 한	수출	701.5	193.7	227.1	169.0	51.4	70.1	35.8	73.5	66.9
	수입	440.5	171.0	65.2	54.0	43.7	15.3	29.0	17.2	17.0
	계	1,142.0	364.7	292.3	223.0	95.1	85.4	64.8	90.7	83.9

주 : 1990년과 1991년은 구소련의 북한에 대한 교역실적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와 『구주경제』; ロシア東歐貿易會, 『ロシア東歐貿易 調査月報』.

## (2) 관계 회복기(1994년 7월~1999년 12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급사를 계기로 정치면에서 러시아 정부는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면서 악화되었던 북·러 관계의 회복을 모색하였다. 안보·군사면에서는 1961년 동맹조약을 폐기하고 신조약에 대해 협상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려하였다. 경제면에서는 북한과 교역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러시아는 친서방 외교노선 및 한국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와 경제 지원에 대한 기대 때문에 1990년 9월 한·소 수교이후 한국 중심의 한반도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유라시아 외교노선으로의 전환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투자, 수교 당시 약속된 30억 달러 중 14억 7,000만 달러만 집행된 상태에서 1993년 8월 한국의 경협차관 제공 중단, 제1차 북핵위기 해결과정에서의 소외 등으로 러시아 정부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남북한에 대한 균형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즉, 대북한 관계의 회복을 모색하였다.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4년 7월 10일 옐친 대통령은 깊은 조의를

표명하였고,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 지도부의 교체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양국간 선린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sup>307</sup>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동북아 세력균형이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경우 자국의 국내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는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이라는 러시아의 동북아전략에 상응하는 입장이었다.

9월 20~24일 평양에서는 열친 대통령 특사 파노프 외무차관과 이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간의 회담이 개최되어 양국관계 강화방안이 모색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는 김정일에 대한 열친 대통령의 구두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북한 측도 정치·사회적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러 관계를 증진시킬 의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sup>308</sup>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서 대안 없는 후계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을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하였다.<sup>309</sup> 이와 같이 양국 관계가 발전됨에 따라서 북한 『중앙통신』은 10월 18일 보도를 통해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옛 소련 시대의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힌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의 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러시아의 이같은 입장이 “시대의 흐름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하였다.<sup>310</sup> 이후 1996년 5월 셀레즈노프 연방하원 의장이 방북하여 국제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의회관계 증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1997년 4월 루킨 연방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이 방북하여

<sup>307</sup> 『모스크바 방송』, 1994년 7월 10일.

<sup>308</sup>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September 23, 1994), p. 14.

<sup>309</sup> *Izvestiya* (1994. 9. 28).

<sup>310</sup> 『내외통신』, 종합판(54) (1994. 10. 1~12. 31), p. 175~176.

북·러 의회 간 회담을 개최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의 돌발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던 1961년의 동맹조약을 1996년 9월 10일 폐기하고 군사동맹이 배제된 신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북한과 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100억 달러 이상을 소비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으로 다소 동결되었으나 북한은 이미 1~2개 핵폭탄 제조를 위한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sup>311</sup>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하였을 때 러시아의 핵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시적으로 동결된 핵개발 계획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아직까지 핵폭탄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제네바 기본합의문」에도 불구하고 핵 연구와 개발을 완전히 은폐한 가운데 속도만 늦추면서 지속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sup>312</sup>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금창리에 지하 핵시설을 건설중일지 모른다는 1998년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핵계획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다단식 「대포동 I」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그 발사체가 러시아의 배타적인 경제수역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하면서 북한에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웃

<sup>311</sup> “Reaction in Russia to Hwang Jang-yop’s Statements” <[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6.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6.txt)> (검색일: 1999.12.13).

<sup>312</sup> “The South Asian Test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2.txt](http://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2.txt)> (검색일: 1999.12.13).

국가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북아의 공동 안보 및 안전 시스템 구축과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간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313</sup>

한편, 러시아 정부는 한·소 수교이후 악화되었던 관계의 회복과 노동력 이용 차원에서 북한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46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채무문제 미해결, 양측의 만성적인 외환부족, 북한 무역회사들의 빈번한 계약 불이행 및 러시아의 철도운송료 인상 등으로 북·러 간 교역 및 경협은 대체적으로 부진하였다. 단지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간에 부분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졌다.

북·러 양국의 경제난으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양국은 1994년 10월 평양에서 소련 붕괴 이후 최초로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역 및 경협 관계를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북·러 간에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었다. 북한은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아무르주와 「투자보장협정」과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경제·무역협정」등을 체결하는 한편, 11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 경공업, 조선, 석탄채굴, 주택건설 등과 관련된 양국 합영회사의 설립과 활동을 관리할 정무원 대표부를 설치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중앙정부의 지원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 호응하였다.

투자분야와 관련, 1994년 8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자본금 1억 루블 규모의 북·러 양국 간 최초의 합영기업인 「조·러 상업센터 주식회사」가 창설되었다. 새로운 입업협정이 1995년 2월 24일 평

<sup>313</sup> 『러시아 방송』, 1998년 9월 1일, 9월 4일.

양에서 정식 조인되어 러시아는 북한과의 임업협력으로 연간 약 5,700만 달러의 이윤을 얻게 되었으며, 총 7,000명의 북한 벌목공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sup>314</sup> 1996년 10월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 5년 기한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협정」을 체결하였고, 1997년 4월 「과학기술협력 의정서」와 9월 「이중과세 방지협정」도 체결되었다. 1998년에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수산물 가공 지원사업이 본격화되었고,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쿠릴열도에서의 어로를 허용하는 등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지속되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북한 금속공업부와 러시아 석탄수출회사 「머큐리」(Mercuri)사는 김책 제철소에 대한 코크스탄 공급계약을 4월 체결하였고, 평양시의 주된 전력 공급원인 평양 화력발전소 재건설에 러시아 기술진이 참여하였다. 러시아 극동의 기술자들이 작업에 착수하여 신포의 콩치 통조림 공장이 1999년 후반기에 재가동되었다.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러시아 연방하원인 국가두마는 1998년 3월 식량, 연료, 의약품 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연해주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 모은 식량 등 원조물자 60여 톤을 북한측에 4월 말에 전달하였다. 또한 박의춘 주러시아 북한대사가 1999년 초에 노보시비르스크 주를 방문하여 주 정부에 식량과 씨감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sup>314</sup> 『내외통신』, 종합판(55) (1995. 1. 3~3. 31), p. 137~138.

### (3) 보편적 국가관계 정립기(2000년 1월~2006년 말 현재)

2000년 1월 푸틴 대통령의 집권 이후 러시아의 대북 관계는 1961년 동맹조약을 대체하고 양국간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신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소 수교이후 약 10년 만에 냉각기를 청산하고 보편적인 국가간 관계로 재정립되었다. 현재 북·러 관계의 특징은 신조약에 기초된 선린관계의 유지, 안보관계의 유지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방지, 경제협력의 증진 모색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가) 신조약에 기초된 선린관계 유지

가조인 상태에 있던 신조약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의 공식 조인을 위해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990년 세바르드나 제 소련 외무장관의 방북 이후 10년 만인 2000년 2월 9~10일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는 한반도의 긴장 지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쌍무관계 강화와 정치적 대화 수준 제고에 대한 신조약의 기여 가능성, 협상을 통한 한반도문제의 해결과 한민족의 평화통일 노력 지지,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상황 개선과 동북아 평화·안전의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주변국들과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정일 에 대한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sup>315</sup>의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sup>316</sup>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외국대표단을 접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담은 없었다.

이바노프 외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상 간에 2월 9일 공식 조인된

<sup>315</sup> 1999년 12월 31일 옐친 대통령의 전격 사임으로 푸틴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다가 3월 26일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식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sup>316</sup> "Ivanov Gives Putin Message to North Korean Leader," FBIS-SOV (2000. 2. 9), p. 1.

신조약은 전문과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10년간의 전반적인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문서이다. 신조약은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동등권 및 국제법 원칙을 기초로 우호관계 발전(제1조), 쌍방중 일방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의 즉각 접촉(제2조), 상호 이해가 관계되는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 협의(제3조),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 따른 한반도 통일 지지(제4조), 통상, 경제,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발전을 위한 적극 노력(제5조), 양국 의회와 다른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간 관계 심화(제6조), 양국 도시, 기업, 단체 및 양측 인사간 접촉 등 다양한 수준에서 다방면의 접촉 활성화(제7조), 10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12개월 내에 조약의 연장불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연장(제12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317</sup>

러시아측 대표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백남순 외무상 등 북한 고위관리와 양국 인사들의 교환방문을 비롯한 정치·경제적 협력 증진, 미·일의 TMD 체제에 대한 공동 대처, 한반도 정세, 북한 무기체제와 구소련 시대 건설된 공장들의 노후화에 따른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양국은 조약의 체결이 “두 국가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으로 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바노프는 출국직전 기자회견에서 “1990년대 러·북간에 직면했던 냉각기가 극복되었다”<sup>318</sup>고 밝혔다.

<sup>317</sup> “북-러 신조약 전문” <www3.yonhapnews.co.kr> (검색일: 2000.11.3). 신조약을 북한은 2000년 4월 6일, 러시아 연방하원인 국가두마는 7월 19일, 연방상원인 연방의회는 7월 27일 각각 비준하였고, 10월 30일 발효되었다.

<sup>318</sup> “Ivanov Says ‘Chill’ in Russian-DPRK Relations Overcome,” FBIS- EAS (2000. 2. 10), p. 1.

북한은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2월 16일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바노프의 방북을 계기로 이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19</sup>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어 회담의 준비와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했으며 이 회담을 획기적인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지하며 크게 만족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되는 G8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최초로 7월 19~20일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의 방북 목적은 미·일의 TMD 계획과 남북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 견제, 러·북간 군사협력 문제 협의, 향후 자신의 방한을 약속한 상황에서 남북한에 대한 균형관계 유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경제실익 확보 등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과 두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경협 문제를 논의하고 전통적인 선린관계 유지, 안보위협 상황 발생시 지체없는 상호 접촉,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지지,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 등 11개항의 「조·러 공동선언」<sup>320</sup>을 7월 19일 채택하였다. 아태지역 방위관계자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이었던 이바쇼프 러시아 국방부 대외협력국장은 10월 18일 “우리는 남북한 두 나라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북한과도 역시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계획”<sup>321</sup>이라고 말함으로써 러시아 정부가 남북한에 균형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시켰다.

2001년 러시아는 북한과 2000년 체결된 신조약과 푸틴 대통령의

---

<sup>319</sup> *Izvestiya* (2002. 2. 17).

<sup>320</sup> 통일부, 『북한동향』, 제496호 (2000. 7. 15~7. 21), pp. 45~48.

<sup>321</sup> “Russia to develop military cooperation with DPRK,” FBIS-SOV (2000. 10. 18), p. 1.

방북시 채택된 『조·러 공동선언』을 기초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였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를 통해 양국관계가 강화되었다. 2월 9일 북·러 신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해 양국은 모스크바와 평양 대사관 및 청진의 러시아 총영사관에서 각각 기념식을 갖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다짐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기념논설을 통해 미국의 MD 체제 구축 반대 등 북한과 러시아가 대미 견제에 있어 같은 입장에 있음을 지적하고 “조·러 친선관계 발전은 새 세기의 시대적 흐름과 국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sup>322</sup>고 강조했다.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시 초청에 의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 차원에서 2001년 7월 26일~8월 18일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그의 방문 목적은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대남정책에 대한 속도와 폭의 조율 문제 협의, 러시아 군사무기 구매와 부품의 장기적 확보, 교역 확대·구소련 시대 건설된 공장들의 재가동·철도의 현대화·원유의 장기적 확보 등 경협문제 논의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부시 미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중·러·북한 3각 연합전선의 형성, 북한 카드를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유지의 지렛대로 사용, 중단된 남북대화의 중개자로 나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 TSR-TKR 연결 등 남북한·러시아 3각경협을 통한 경제실익 확보, 대북 군사무기 판매를 통한 경제이익 증대 및 한국에 대한 북한 카드의 활용 등에 정상회담의 목적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8월 4일 정상회담 직후 8개항으로 구성된 『모스크바 공동선언』<sup>323</sup>

<sup>322</sup> 『노동신문』, 2001년 2월 9일.

<sup>323</sup> 『노동신문』, 2001년 8월 5일.

이 발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미국의 MD 계획 반대와 ABM 조약의 유지 불가피성 등 국제안보 문제(제1항~제2항), 제반 분야 협력 확대와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기업소들의 지원 및 철도연결 등 북·러관계(제3항~제6항), 남북대화 지속 지지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 표명 등 한반도문제(제7항~제8항)에 관한 것이었다. 정상회담은 북·러 양국관계가 정치, 안보·군사, 경제 등 제 분야에서 한 단계 더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10월 19일 『평양방송』은 북·러 수교 53주년을 즈음한 『러시아의 소리』 논평원 글을 인용하여 양국 사이에는 최근 2년 동안에 다방면적인 접촉과 상호 협조관계가 가속화되는 등 양국 관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도하였다.

2002년에도 북·러 관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전개되었다. 1월 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북한 러시아대사관을 전격 방문하여 양국간 협력관계 발전을 도모하였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한 직후인 2월 10~12일 푸틴 대통령은 폴리코프스키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였다. 북한 외무장관으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백남순 외상이 5월 20~24일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방북하여 7월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남북대화, 양국 및 동북아 현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러시아 극동·연해주 지방을 8월 20~24일 비공식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2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001년 ‘모스크바 선언’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극동지역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북·미 대화, 북·일 수교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입장을 조정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 8월 30일 북·일 정상회담 계획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이를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24</sup>

2003년에 들어 외빈과 전혀 면담을 하지 않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푸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로슈코프 외무차관을 최초의 외빈으로 1월 20일 접견하였다. 이는 푸틴 대통령과 쌓아진 돈독한 친선관계 때문이었다. 로슈코프 차관은 방북 이후 김정일이 국가 전체에 걸쳐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종교활동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다지기 위해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 6월 평양에 첫 러시아 정교회인 ‘정백사원’ 건설공사를 시작하였다. 북한의 9·9절을 맞아 폴리코프스키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9월 8~11일 방북하여 푸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전달하고 김정일 등을 면담하였다. 양측은 북핵문제, 전력과 해양 분야 자원 협력, 철도·항만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10월 12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러 간 외교수립 55주년 기념연회에서 카를로프 주북한 러시아 대사와 백남순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2002년 상호방문이 양국간 친선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전통적인 북·러 친선을 새로운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2000~2002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북·러 양국은 2004년에도 정상간 친서교환과 외무장관 회담 등으로 선린협조관계를 강화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월 15일 재선된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고 전통적인 친선관계의 확대를 표명하였으며 폴리코프스키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에게도 4월

---

<sup>324</sup>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2~2003』, 연례정보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66~68.

2일 유임 축하편지를 보냈다.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내무성협주단의 6월 11일 평양 공연시김정일 위원장은 단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조선의 관계는 절정에 달해 있다”<sup>325</sup>고 말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서울 방문에 이어 방북,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7월 4일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다. 양자는 양국 지도자들 간의 3차례 회담으로 고위급 관계가 발전되고 있는 점에 만족을 표시하고 양국간 친선협조관계 강화, 국제문제와 핵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북한 외무성과 러시아연방 외무부 사이의 ‘2005~2006년도 교류계획서’가 조인되었다. 또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7월 5일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양국간 협력과 지역안보 문제를 논의하지는 내용의 푸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 논의를 위한 남북한·러 3국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하였다.<sup>326</sup> 미로노프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의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청으로 9월 12~14일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중요한 양국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로노프 의장은 김일성 대학 연설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북·러 양국의 각 분야 협력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sup>327</sup>고 밝혔다.

북·러 양국은 2005년에도 정상간 친서전달이나 특사 파견,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기존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드레이 카를로프 주북한 러시아대사의 요청으로 3월 8일 대사관을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이 보낸 제2차 세계대전 승리 60주년 기념

<sup>325</sup> 『연합뉴스』, 2004년 6월 13일.

<sup>326</sup> “푸틴, 북한에 협력·지역안보 논의 제의,” 『연합뉴스』, 2004년 7월 5일; “러, 남·북·러 3국 외무장관 회담 제안(종합),” 『연합뉴스』, 2004년 7월 5일.

<sup>327</sup> “러 상원의장, ‘북·러 협력관계 탄력 얻어,’” 『연합뉴스』, 2004년 9월 14일.

메달을 받았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2002년 이후 4번째 러시아 대사관 방문이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해주길 희망하는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나 북한은 리종산 북한군 차수와 김옥순 위원을 참석시켰다.<sup>328</sup> 8·15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박의춘 주러 북한 대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를 8월 11일 푸틴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은 8월 15일 축하메시지를 김정일 위원장에 각각 전달하였다.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푸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평양을 각각 방문하였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 극동간의 무역 및 경제 확대, 6자회담, 한반도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과 친분으로 그동안 러시아의 대북 창구역할을 해왔으나 개혁성 부족 등으로 11월 14일 전격 해임되고 후임에는 전 카잔시장인 카밀 이스하코프가 임명되었다.<sup>329</sup>

2006년 북·러 관계는 정치문제 보다는 핵과 미사일 등 주로 안보·군사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정치면에서는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방북하여 7월 22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동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6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통과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우려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일 것으로 추측되었다.<sup>330</sup>

<sup>328</sup> “북한군 리종산 차수, 러시아 전송행사 참석” <<http://www.unirusssia.com>> (검색일: 2005.5.4).

<sup>329</sup> “러 폴리코프스키 해임은 개혁성 부족 때문”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5.11.15).

<sup>330</sup> “푸틴, 김정일에 친서 전달,” 『연합뉴스』, 2006년 7월 22일.

2003년 6월 북한에 착공된 최초의 러시아 정교회인 ‘정백사원’(성삼 위일체성당)이 완공되어 2006년 8월 13일 개원하였다. 양국은 이 정교회가 북·러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년 동안 활동하였던 박의춘 주러 북한대사 후임으로 김영재 무역성 부상이 9월 14일 임명되었다. 그는 2002년부터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주로 중국 및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를 상대로 무역교섭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에서 경제교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분석되었다.<sup>331</sup> 또한 카를로프 주북한 러시아 대사 후임에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발레리 수히닌 주한 러시아 대사관 공사가 내정되어 연말 경 부임할 예정이다.

#### (나) 안보관계 유지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방지

2000년 2월 9일 북·러 간에 공식 조인된 신조약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에서는 1961년 동맹조약의 주요 내용이었던 이념적 연대 조항과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안보위협 발생시 즉각 접촉’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제한적 군사협력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양국이 『한·러 기본관계조약』 제2조 규정보다는 더욱 긴밀한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이다. 북한측이 러시아의 신군사독트린에 입각하여 북한을 러시아의 핵우산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신 미사일 및 미사일기술 비확산 국제협상에서 북한을 러시아의 완전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sup>332</sup> 또한 푸틴 대통령은 7월 19~20일 방북

<sup>331</sup> 『중앙일보』, 2006년 9월 5일; “北, 러시아 대사에 김영재 임명,” 『연합뉴스』, 2006년 9월 14일.

<sup>332</sup> *Izvestiya* (2000. 2. 17).

시 미·일의 TMD 계획, 남북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 북·러 간 군사협력 문제 등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협의하였다. 그리고 안보위협 상황 발생시 지체없는 상호 접촉,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러 공동선언」을 7월 19일 채택하였다. 상기와 같은 러시아의 대북 안보관계 유지는 북한에서의 급변사태 발생이 러시아의 경제발전과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도 또한 러시아와의 안보관계 유지를 통해 체제를 존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태지역 방위관계자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이었던 이바쇼프 러시아 국방부 대외협력국장은 10월 18일 “러시아가 한반도 군사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sup>333</sup>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을 계기로 북한은 한반도 군사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구소련 시대에 제한된 수준에서 제공받아온 위성사진의 무상제공을 2001년 초에 러시아 측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인공위성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북한측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sup>334</sup> 푸틴 대통령은 2월 23일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 등에 대량파괴무기 관련 기술 및 부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난을 부인하면서도, 러시아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엄격한 수출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sup>335</sup>

부시 행정부의 NMD 체제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가 2000년

<sup>333</sup> “Russia to develop military cooperation with DPRK,” FBIS-SOV (2000. 10. 18), p. 1.

<sup>334</sup> 『연합뉴스』, 2001년 2월 7일.

<sup>335</sup> 『연합뉴스』, 2001년 2월 23일.

창립한 ‘세계 미사일기술 통제체제(GCS)’ 2차 회의가 2001년 2월 15~16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남북한 등 71개국과 유엔 등의 대표 약 120명이 참석하였다. 1차 회의에 불참했던 북한은 참가하였으나 미국은 불참하였다. 마메도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3월 1일 박의춘 주러 북한대사에게 푸틴 대통령의 방한 결과를 설명하는 회동에서 박의춘은 북한이 ABM조약 유지와 강화, 전략공격무기 감축 등에 관한 모스크바의 새로운 제안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sup>336</sup> 클레바노프 러시아 부총리는 방한시 2월 28일 『이타르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존의 협상과 한반도내 정치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것, 북·러간 군사기술 협력이 북한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으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구소련 무기에 대한 수리와 복원에 관련된 것이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밝혔다.<sup>337</sup> 그러나 4월 27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방러 시 북·러 양국은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협력 협정』과 『2001년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북한의 러시아 군사무기 구매 문제가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NMD 체제를 구축하는 사태를 우려하여 북한과의 미사일 개발기술 협력을 중국과 함께 동결하였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6월 18일 크렘린궁에서 미국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기술수준 문제 때문에 “북한 미사일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그는 7월 16일 이태리 한 신문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sup>336</sup> “Russia: North Korea expresses support for strategic arms reductions,” INTERFAX (March 1, 2001) <<http://toolkit.dialogue.com>>.

<sup>337</sup> 『연합뉴스』, 2001년 3월 1일.

미국의 MD 체제 구축의 근거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sup>338</sup> 북한은 7월 19일 「조·러 공동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조선중앙방송」등에 일제히 기념논설을 게재하고 러시아의 ABM조약 유지와 MD체제 구축 반대 입장을 적극 옹호하였다.

8월 4일 모스크바 정상회담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구소련의 해체 이후 중단된 군사위성 및 정찰 사진의 정기적 제공과 S-300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단거리 방공시스템 및 신형 T-90 전차 구입, 미그-27 전투기 조립생산 등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시 채택된 「모스크바 공동선언」에 명시된 군사분야의 쌍무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군사대표단의 규모와 구체적인 방북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북·러 양국간 안보·군사 협력은 2002년 후반기에도 지속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월 20~24일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시 군수분야 핵심 인물들을 대거 수행하여 양국간의 군사협력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였던 것으로 관측된다. 오금철 북한 공군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군대표단이 10월 26~29일, 리명수 북한군 작전국장 겸 총참모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10월 28일 러시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10월 17일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관련,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는 미국의 주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성명을 10월 26일 발표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는 KEDO가 북한 핵개발 의혹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을 중단한데 대해 11월 15일 유감을 표시하였다.<sup>339</sup>

<sup>338</sup> 『연합뉴스』, 2001년 6월 20일, 7월 16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로슈코프 외무차관이 푸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03년 1월 18~21일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대가로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제안하였다.<sup>340</sup> IAEA가 2월 12일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공식 회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러시아는 기권을 하였다. 북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러시아는 유엔안보리로의 이관이 당시 상황에서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 3자회담이 4월 23일 개최된 직후 러시아는 북·미가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러시아가 위기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sup>341</sup> 북한의 강력한 요구로 8월 27~29일 베이징 제1차 6자회담에 참가하게 된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안전보장, 북·미 양국의 우려사항 동시 해소, 대화기조 유지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체제에 대한 미국의 보장이 미흡할 경우 중국과 함께 보증할 수도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이 거부하였다.<sup>342</sup>

또한 북한이 2월 25일 동해상에서 사거리 300km 내외의 지대함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때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를 통상적인 행위이

<sup>339</sup>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2~2003』, 연례정세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69.

<sup>340</sup> “북한관리, 김정일 메시지 푸틴에 전달” <<http://www.yonhapnews.net>> (검색일: 2003.1.31).

<sup>341</sup> “북 핵보유 시인 파장/주요국가 반응,” 『한겨레신문』, 2003년 4월 26일 <<http://www.kinds.or.kr>>.

<sup>342</sup>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troduction Remarks by Russian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exander Losyukov at the Opening of the Six-Way Talks in Beijing” (August 27, 2003) <<http://www.in.mid.ru>> (검색일: 2003.8.28); “본회담 6자 6색-러시아”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3.8.27) 참조.

며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에 관한 어떠한 국제협정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sup>343</sup> 또한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이용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만 5,040km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미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9월 13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돕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44</sup>

2004년 북·러 양국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두만강 지역의 국경선 획정에 합의하고 2월 9일 국경조약 의정서에 서명하였다.<sup>345</sup> 6월 5일 도쿄에서 열린 20여 개국 아·태 연안국가 국방장관 회담에서 트루브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일본이 여러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현재 약 200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말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위협은 과장된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sup>346</sup> 6월 23~26일 제3차 6자회담에 러시아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알렉세예프 본부대사는 북한핵 계획과 관련, 동결대상과 검증 및 보상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3개월 내 핵 프로그램 동결 시한은 적절치 않다고 7월 14일 『이타르-타스 통신』과 회견에서 밝혔다.<sup>347</sup>

북핵문제와 관련 중국 및 북한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던 러시

<sup>343</sup> “러 국방, ‘북한 미사일 발사는 통상적 행위’”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3.2.27).

<sup>344</sup> “러 외무, 북 미사일 개발 지원설 일축” <<http://www.yonhaonews.co.kr>> (검색일: 2003.9.13).

<sup>345</sup> 1990년 9월 소·북한은 국경조약에 합의했지만 두만강 하구와 동해안에 이르는 40.3km 구간에 대한 접경선 획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고, 1998년 중·러·북한은 두만강 중간선을 경계로 국경선을 획정하기로 했지만 매년 강의 모습이 변화돼 국경선을 획정하지 못했었다.

<sup>346</sup> 『연합뉴스』, 2004년 6월 6일.

<sup>347</sup> 『연합뉴스』, 2004년 7월 14일.

아 정부는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북한의 안보우려에 대해 이해를 하는 한편, 6자회담을 북핵문제 해결의 최선방안으로 간주하였다.<sup>348</sup> 또한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과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한 6자회담의 향후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sup>349</sup>는 공식 성명을 같은 날 발표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NPT 복귀시 러시아형 경수로 지원을 희망하였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2004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 구상에 따라 두 차례 북한의 미사일 부품 수출 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이란에 수출하는 미사일 부품을 러시아 영토를 거쳐 운반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차단을 시도했으나 단속계획의 누설로 미사일 부품을 발견하지는 못했다.<sup>350</sup>

2006년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더 이상의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6월 경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이 알래스카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외무부는 박의춘 주러 북한대사를 소환해 “우리는 지역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바람직

---

<sup>348</sup>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Statement by Alexander Yakovenko, the Spokesman of Russi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garding DPRK’s Decision to Suspend Its Participation in Six-Party Talks Indefinitely” (February 10, 2005) <<http://www.in.mid.ru>>.

<sup>349</sup> “『북핵타결』 러 외무부 ‘한반도 비핵화 전기마련’”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5.9.19).

<sup>350</sup>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7, 2005.

하지 않다”<sup>351</sup>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7월 5일 대포동-2 장거리미사일 1기와 구소련제 Scud 미사일을 개조한 중거리 미사일 6기를 발사하고 이를 국가주권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러시아 외무부는 박의춘 북한대사를 소환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를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6자회담 국가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 외무부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태평양에서 선박항행을 위협하고 미사일 발사의 사전경고라는 보편적 관행을 위반하였다. … 러시아는 이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 이는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와 노력에 반하고 한반도 핵위기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다”<sup>352</sup>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6자회담 관련국 정부 및 주러 대사들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러시아의 안보문제 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북한의 위상을 높이고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에서 양보를 얻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sup>353</sup>

주유엔 일본대사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개최함에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대북 제재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sup>354</sup> 유엔안보리 결의안 보다는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것이 충분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sup>355</sup> 특히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sup>351</sup> “Russian ministry summons N.Korea envoy over missile reports” <<http://en.rian.ru/world/20060622/49909637-print.html>> (검색일: 2006.6.22).

<sup>352</sup>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Statement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Regarding DPRK’s Missile Launches” (July 5, 2006) <<http://www.In.mid.ru>>.

<sup>353</sup> “Korea missile tests aim for concessions at 6-nation talks-expert” (July 5, 2006) <<http://en.rian.ru/world/20060705/50946351-print.html>>.

<sup>354</sup> “Wrap: Russia blasts N.Korea over missile tests, balks at sanctions” (July 5, 2006) <<http://en.rian.ru/world/20060705/50958299-print.html>>.

<sup>355</sup> “UN Security Council discusses N.Korea missile tests” (July 5, 2006) <<http://en.rian.ru/world/20060705/50958366-print.html>>.

은 7월 12일 관련 국가들이 “각기의 다른 입장을 존중하고 위협과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외교와 대화의 길을 따라야 한다”<sup>356</sup>고 주장하였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경제 제재나 군사제재가 대북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는 7월 16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는 한편, 북한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결의안<sup>357</sup>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핵실험이 국제적 핵비확산 과정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였다.<sup>358</sup> 러시아 정부는 중국 정부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였으나 이미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부과된 제한된 국제 제재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대북 군사제재는 물론 경제제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결과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보유국으로 즉각 복귀하도록 하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데 목적을 둔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sup>359</sup>이 10월 14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러

<sup>356</sup> “Russian foreign minister blasts UN draft resolution on N.Korea-1” (July 12, 2006) <<http://en.rian.ru/world/20060712/51251456-print.html>>.

<sup>357</sup>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전문에 대해서는 “Security Council SC/8778” (July 15, 2006) <<http://www.un.org/News/Press/docs/2006/sc8778.doc.htm>>.

<sup>358</sup>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Statement by Mikhail Kamynin, the Spokesman of Russi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garding the Nuclear Test in the DPRK” (October 9, 2006) <<http://www.In.mid.ru>>.

<sup>359</sup>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2006)” (October 14, 2006).

시아 정부는 이를 ‘비편파적이고 균형잡힌’(unbiased and balanced) 결의안으로 평가하였다.<sup>360</sup> 이후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NPT와 6자 회담 복귀, 추가적인 핵실험 방지 등을 위해 북한정부와 직접 접촉하는 한편, 한·미·일·중 등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였다. 10월 31일 북·미·중 베이징 3자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되자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이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다) 경제협력의 증진 모색

2000년 러시아는 국내경제 호전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한간의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한·러시아 간의 3각 경협을 적극 모색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한과의 정상적인 경제관계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신조약 체결을 위한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2월 9~10일 방북시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 공장들의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포함한 경협증진 방안이 논의되었다.<sup>361</sup>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4월 10일 발표되자 러시아 정부는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에 대한 공동참여 의사를 한국 정부에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7월 19~20일 방북시 구소련의 기술로 건설된 산업시설들의 복구, 남북한과 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TSR 사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구체적인 경제문제들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한 철도 연결과

<sup>360</sup> “UN resolution on N.Korea unbiased-Russian MP” (October 15, 2006) <<http://en.rian.ru/russia/20061015/54824565-print.html>> (검색일: 2006.10.15).

<sup>361</sup> “Russian’s DPRK Visit Said To Open New Era of Relations,” *The Korea Times*, February 9, 2000.

철도망 정비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모리 일본 총리에게 전달해 주도록 일본을 방문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임업상 및 채취공업상과도 회담을 갖고 극동 지역의 수산업, 광물채취 부문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회담을 가졌다.<sup>362</sup>

필리포프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이 10월 17~20일 평양을 방문하여 강정모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측 대표단과 제3차 『북·러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양측에서 무역, 금융, 과학기술, 노동, 운수 등 다양한 경제부문 실무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 북한 노동력의 러시아 진출 문제, 석탄산업과 운송부문 협력 문제, TKR의 TSR 연결을 포함한 남북한·러시아간 3각 경험 문제 등이 협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가장 주요한 의제가 북한의 대러 부채 상환 재조정 문제이었다. 러시아측은 그동안 북한이 채무의 1/3을 상환할 것과 나머지 부분의 상환방법 모색을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양측은 정확한 부채규모, 부채상환 단계와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sup>363</sup> 러시아 정부는 TKR과 TSR의 연결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첼코 러시아 철도부 제1차관이 10월 30일 평양을 방문하여 양국 철도 연결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북·러 양국은 제14차 어업공동위원회 회의를 12월 20일 개최하고 러시아가 조업한 생선을 북한 신포에서 가공하기로 하는 등 『수산업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sup>362</sup> 『연합뉴스』, 2000년 7월 21일; 『동아일보』, 2000년 7월 19일.

<sup>363</sup> “Russia: Education Minister sees possibility of expanded cooperation with DPRK,” *ITAR-TASS* (October 17, 2000) <<http://toolkit.dialogue.com>>; 『매일경제』, 2000년 10월 22일.

2001년 러시아 연해주 기업소들이 소련 붕괴이후 조업이 부진한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승리석유화학공장」설비를 이용해 원유를 가공하는 방안을 1월 초 검토하였다. 또한 연해주 측이 벼, 콩, 채소, 돼지를 공동으로 재배·사육 판매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함으로써 농업과 양돈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북한은 2001년 러시아에 1만 8천톤의 어획쿼터를 할당함에 따라 5년만에 처음으로 러시아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게 되었다. 북한도 러시아측 수역에서 명태를 잡게되는 등 양국간 수산협력도 이루어졌다.

푸틴 대통령은 2월 26~28일 방한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철도 연계사업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인도적으로 중요하고 많은 이득이 나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러시아는 이를 위해 북한 철도복원에 수 억달러의 투자를 할 준비도 갖추고 있다”<sup>364</sup>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톨로랴야 제1아시아국 부국장은 2월 26일 NHK와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TSR-TKR 사업에 10억 달러까지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연해주는 TSR-TKR 연결공사의 일환으로 1950년대 말에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길이 1,000여 m의 ‘친선다리’를 보수하였다.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이 4월 초 나진을 방문, 함경북도 당국과 회담을 갖고 나진항에 러시아의 「극동해운공사」대표사무소를 복원하는 한편, 이 사무소가 연해주 대표사무소 역할도 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TSR-TKR 연결 경우, 나진항이 한국과 북한, 러시아, 중국 등 4개국을 위한 주요 화물항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러시아가 감안하였기 때문이었다.<sup>365</sup>

<sup>364</sup> “Putin says Russia may invest millions in North Korean railways,” *ITAR-TASS* (February 26, 2001) <<http://tulkit.dialogue.com>>.

<sup>365</sup> 『연합뉴스』, 2001년 4월 4일.

6월 북한은 1960년대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 최초의 화력 발전소인 평양 화력발전 연합기업소의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채무상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체르누히 러시아 재무차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측과 부채검증증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채무규모 확정, 채무 상환일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문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양측이 검증증서를 통해 합의한 정확한 채무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러시아 차관은 “현재로서는 양측이 상환일정 재조정 방식에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7월 14일 밝혔다.<sup>366</sup> 러시아 철도부 대표단이 3월 북한의 철도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방북한데 이어 김용삼 철도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철도성 대표단이 7월 말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북한은 10월 30일 하바로프스크 등 일부 지역에서 초과 생산된 전력을 북한에 유상 공급하려는 러시아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다.<sup>367</sup> KEDO의 대북 경수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면서 북·러간 전력협력이 북한 전력난 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북·러 양국은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 특히 철도연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러시아의 철도기술 실무대표단이 TSR-TKR 연결사업과 관련한 북한 철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월 12일 방북하였다. 조창덕 부총리 등 북한 경제대표단이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아무르 등 러시아 극동지역을 4월 4~12일 방문하였다. 특히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가 4월 24일 방북하여 북한과 극동지역 간 경협문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고위층 인사들과 논의하였다. 북한은 TSR-TKR 연결사업을 촉진시키

<sup>366</sup> 『연합뉴스』, 2001년 7월 14일.

<sup>367</sup> 『연합뉴스』, 2001년 10월 31일.

기 위해 남북한·러시아간 철도장관 회담을 9월 18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서 남북한·러시아 3국의 고위 철도관리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TSR-TKR 연결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북·러 양국은 평양에서 11월 1일 동해선 철도 복원 및 현대화 작업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sup>368</sup>

2003년 북·러 양국은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54주년을 맞아 3월 17일 상대국 대사관에서 연회를 개최하고 친선증진과 협력강화를 강조하였다. 러시아는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지원을 북한에 하였고 이 결과 남북한간 철도궤도 연결행사가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 6월 14일 개최될 수 있었다. 북한 정권 수립 5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9월 8~11일 방북한 풀리코프스키 대통령 전권대표는 9·9절 기념식 참가 이후 공동 어획과 생산 가공, 수산물 양식 분야에서 연해주와 북한 수산기업간 협력,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주가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목재 증산, 전력분야에서 협력, 러시아 수출화물의 북한항구 이용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TSR-TKR 연결을 위해서는 남북한·러시아간 3자 협정이 필수적임을 밝혔다.<sup>369</sup>

2003년에는 북한과 연해주 간의 경협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북한과 연해주간의 교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2001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 2003년 연해주 회사들의 대북 상품수출액이 400여만 달러에 이르며 양측간 상품유통은 거의 두배로 증가하였다.

<sup>368</sup>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2~2003』, 연례정보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68~69.

<sup>369</sup> “Russia’s Pulikovskiy To Discuss Economic Cooperation with Kim Chong-il,” ITAR-TASS (September 8, 2003) <<http://toolkit.dialogue.com>>; 북·러, ‘9·9절 외교’ 내용은,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3.9.16).

양측 간의 주요 경제협력 분야는 목재가공과 건설, 농업, 광업, 보건, 통신, 경공업 분야 등이며 현재 연해주에는 북한이 100% 투자한 3개의 기업소와 합영·합작기업소들이 운영되고 있다. 북한과 연해주는 7월 경공업 분야 협력의정서를 체결하고 북한이 동남아에서 수입하던 경공업 원료를 이 지역에서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sup>370</sup> 또한 함경북도 대표단이 연해주 지역을 방문하여 10월 2일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을 갖고 연안어업 및 해산물 가공분야 등의 경제협력과 사회, 문화, 교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르킨 연해주 지사가 김정일의 초청으로 11월 2~4일 평양을 방문하여 리광근 무역상 등 북한 고위관리들과 임업, 농업, 수산, 건설, 채취, 무역, 원유가스 생산,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sup>371</sup> 북한은 연해주 지역 회사들이 나진항을 석유와 석유관련 제품의 운송지로 이용해 줄 것을 러시아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 약 1만 명이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350달러의 저렴한 월급을 받고 건설, 농업, 벌목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 북한 노동자 할당분이 2003년보다 500명 증가된 2,500명이 되었다. 북한은 아무르 지역에 1,500여 명의 벌목공을 파견하고 있는데 북·러 양국은 4월 28일 목재산업에 대한 정부간 협력협정을 5년 연장하는 한편, 아무르 지역에서 향후 2년 간 목재 조달량에 대한 의정서에도 서명하였다.<sup>372</sup> 4월 룡천 폭발사고 직후 러시아 비상대책부

<sup>370</sup> “북-연해주간 경제협력 성과 가시화”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3.10.5).

<sup>371</sup> 위의 글.

<sup>372</sup> 『연합뉴스』, 2004년 1월 23일; “북-러, 목재산업에 대한 협력협정 연장”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4.4.29).

는 항공기를 통해 비상식량과 의약품, 텐트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 러시아 극동 연해주 당국은 6월 중순 특별열차 편으로 화차 6량 분량의 쌀을 비롯한 식량과 건축자재를 전달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세계식량계획」(WFP)과의 협조 아래 곡물 35,000톤을 인도적 차원에서 6월 25일 대북 지원하였다.<sup>373</sup>

7월 4~5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시 북한은 37억 루블(약 1,400억 원)의 채무탕감을 요청했으나 그는 즉답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TSR과 TKR 연결과 관련, 두만강-나진-원산-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802km) 구간을 현대화하기로 2001년 합의한 바 있는 북·러 양국은 7월 열린 북한 청진철도국과 러시아 극동철도국 국장간 실무회의에서 나진-함산 철도 현대화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러시아는 낙후한 북한철도 시설을 복원해 TSR과 연결하는 데 2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북한의 철도현대화 계획에 이미 4억 루블(1,300만 달러)을 투입하였다.<sup>374</sup> 이외에 러시아 연해주는 필요시 대북 전기공급을 위해 북한 국경으로 연결되는 송전선을 건설하고 있고, 사할린-하바로프스크 구간에서 건설되고 있는 가스수송관을 블라디보스톡까지 확장하여 북한을 통해 한국까지도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세계 최대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러시아 가즈프롬사 대표단이 2005년 1월 20일 방북하여 박봉주 내각총리 및 정철운 원유공업성 부상 등과 면담하였다. 방북 목적은 시베리아 가스관의 북한 통과 및 한국 연결 시 북한에 대한 가스의 무상제공 문제 또는 천연가스 및 유전 등 북한

<sup>373</sup> 『연합뉴스』, 2004년 6월 8일; “러, 북에 곡물 3만5천톤 지원”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4.6.25).

<sup>374</sup> “북한, 러시아, 나진-함산 철도현대화 추진”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4.10.11); 『조선일보』, 2004년 2월 20일.

의 에너지자원 개발 문제에 대한 협의일 것이라고 추측되었다.<sup>375</sup>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8월 16일 방북시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에게 함경북도 라선시 정유공장과 승리 화학공장에서 사용되는 원유의 무관세수출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측은 교역확대 방안과 TSR-TKR 연결사업, 임업분야에 대한 북한 노동력 유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sup>376</sup>

교역확대를 위해 김영재 북한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부주지사와 경제무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실무단 결성 합의서』를 10월 5일 체결하였다. 공동실무단은 매년 평양과 사할린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여 사할린과 북한 기업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구축을 모색하며 양측의 대외무역 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과 제5차 6자회담 의제들을 사전조율하기 위해 방북한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양측이 미해결 상태인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가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가로막는 주요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했다”<sup>377</sup>고 11월 8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TSR-TKR 연결사업은 2004년 4월 남북한과 러시아 간에 모스크바에서 제1차 철도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같은 해 말 북한은 “미국과의 대립 상황에서 TKR-TSR 연결 논의를 위한 3개국 간 제2차 실무협상을 진행할 생각이 없다”<sup>378</sup>고 러시아측에 통보하였다.

<sup>375</sup> “Russia: Gazprom Delegation Ends First Visit to North Korea,” ITAR-TASS (January 21, 2005) <<http://toolkit.dialogue.com>>; 『동아일보』 2005년 1월 23일.

<sup>376</sup> “Russian Envoy, North Korean Officials Discuss Economic Cooperation,” ITAR-TASS (August 16, 2005) <<http://toolkit.dialogue.com>>.

<sup>377</sup> “Official Says Russia, North Korea Seek To Solve Problem of Debt,” ITAR-TASS (November 8, 2005) <<http://toolkit.dialogue.com>>.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건축노동자는 약 2,000여 명인데 이들 대부분은 저임금 때문에 자신이 배속된 지역을 이탈해 다른 지역으로 전락해 외화벌이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국제난민으로 인정받아 제3국이나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3월 6일 러·중·카자흐스탄·몽골·베트남·북한 등 6개국으로 구성된 「철도협력기구」(CCRW)는 평양에서 회원국간 2006년 국경통과 철도화물량을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2,300만 톤으로 합의하였다. 2001년부터 전기공급 협상을 벌여온 북·러 양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30~50만KW 잉여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표류하고 남한의 200만KW 대북 송전계획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러시아가 송전선 건설 등에 투자를 하면 이를 광물자원, 광산 개발권 보장 등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북한이 했기 때문이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청진 사이에 370km 길이의 초고압(500KV) 직류 송전선을 건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이 계획은 약 2억 달러 공사비와 3년의 공사기간이 예상되고 있다.<sup>379</sup>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2006년 7월 19~20일 방한하여 ‘한·러 철도운영자 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방북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전달하였다.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통과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와 6자회담 복귀 촉구의 내용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야쿠닌 사장은 김영삼 북한 철도상과 TSR-TKR 연결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sup>380</sup>

<sup>378</sup> “Russia: Official Says North Korea Breaks Up Talks on Trans-Koran Railway,” RIA (August 9, 2005) <<http://toolkit.dialogue.com>>.

<sup>379</sup> 『중앙일보』, 2006년 7월 4일.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8월 29일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 사무소장이 북·러간 금융거래의 상당한 개연성을 주장하며 “러시아는 북한에 열려있는 마지막 금융피난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중앙은행』측은 이를 부인하였다.<sup>38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은 9월 3일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로 막힌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러시아 금융기관에 10개 계좌를 개설했다고 보도하였다.<sup>382</sup>

북·러 경제관계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의 대러 부채가 러시아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월 현재 44억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정부가 이라크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 채무의 일부 탕감 방침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북한의 채무 문제 해결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sup>383</sup> TSR-TKR 연결을 위한 전초로 북·러 양국은 나진-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55km 현대화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측은 북한내 나진 구간 공사를 위해 철강 등 러시아산 자재들을 일부 북한에 반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10월 14일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sup>384</sup>

<sup>380</sup> 『연합뉴스』, 2006년 7월 22일; “DPRK’s KCNA: Russian Businessman Conveys Putin’s ‘Personal Letter’ to DPRK Leader,” KCNA (July 22, 2006) <<http://toolkit.dialogue.com>>.

<sup>381</sup> 『연합뉴스』, 2006년 8월 30일.

<sup>382</sup> 『서울경제』, 2006년 9월 3일.

<sup>383</sup> 『조선일보』, 2006년 9월 4일.

<sup>384</sup> “대북결의안으로 나진-하산 철도현대화 늦춰지나”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6.10.16).

### 3.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과 대응

구소련시대에 북한의 모든 상황은 「국가안보위원회」(KGB) 제6국과 사회주의국가들의 안보문제를 담당하던 제11국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대의 정보들을 기초로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와 핵보유국으로서의 등장을 위하여 김일성 국가주석 생존 시에 김정일 지도하에 핵개발에 착수하였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북한이 1990년 경 핵 기폭장치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이 사실의 은폐를 위하여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으며, 플루토늄 추출상의 문제 등 능력 부족으로 완전한 핵개발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미 수교 및 체제를 인정받기 위한 협상카드로 핵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sup>385</sup>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경우, 어떠한 핵무기라도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sup>386</sup> 북한의 핵개발을 지역불안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3~1994년 제1차 북핵 위기시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한편, 한·미·일과의 공조를 통해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 야기된 제2차 북핵 위기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NPT를 탈퇴하고 2005년 2월 10일 핵보유를 선언하는 한편,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sup>385</sup>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June 24, 1994), pp. 11~12; 『한국일보』, 1992년 7월 30일.

<sup>386</sup> 트카첸코, “러시아-북한관계의 변화와 양한관계 영향,” (한양대 중소연구소 세미나, 1993. 5. 24); 연합뉴스사, 『주요자료 전문집』, 1993년 6월 1일, p. 104.

북·미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2005년 11월 11일 이후 6자회담이 중단되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모스크바 실무방문 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2006년 7월 14~16일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다른 국가 정상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들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6자회담을 강력히 지지하며, 북한이 무조건 회담에 복귀해 2005년 9월 공동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sup>387</sup>

2006년 8월 17일 미국의 한 언론은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의 한 핵실험 장소에서 의심스런 차량 움직임을 관찰하고 실질적인 실험 가능성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다음 날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말하고 “한반도에서 …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sup>388</sup> 프리호드코 푸틴 대통령 보좌관도 9월 12일 모스크바는 북한에서 핵연구의 심화나 생산에 관해 어떠한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sup>389</sup> 이는 북한의 모든 상황이 모스크바에 의해 파악되던 구소련 시대와는 달리, 현재 러시아 시대에는 모스크바의 북한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sup>387</sup> 『연합뉴스』, 2006년 7월 17일.

<sup>388</sup> “Russia has no info on preparation for N.Korea nuclear tests” <<http://en.rian.ru/russia/20060818/52793151-print.html>> (검색일: 2006.8.18).

<sup>389</sup> “Moscow unaware of nuclear research in N.Korea-Putin aide” <<http://en.rian.ru/russia/20060912/53806472-print.html>> (검색일: 2006.9.12).

북한이 10월 3일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같은 날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상황의 더 큰 악화로 이끌고 국제적 핵비확산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sup>390</sup>는 성명을 발표하고 핵실험 의도에 대한 자제를 평양에 촉구하였다. 10월 4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단지 상황을 악화시키고 6자회담의 재개를 복잡하게 할 수 있는 핵실험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또한 한반도에서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날 이바노프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핵실험 문제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자제, 주의, 책임성을 보이도록 촉구하고 핵실험이 러시아에 생태적 훼손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391</sup>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북한이 상황을 확대시킬 어떠한 조치들도 삼가도록 설득하기 위해 북한 정부와 직접 접촉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하자<sup>392</sup>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국제적 핵비확산 과정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비난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였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러시아의 지방 위기관리부 대변인은 북한의 분명히 성공적인 핵실험 이후에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방사능 수준이 정상적이고 상황이 통제 하에

<sup>390</sup> “Moscow urges N. Korea to show restraint over nuclear tests” <<http://en.rian.ru/russia/20061003/54487878-print.html>> (검색일: 2006.10.3).

<sup>391</sup> “Russian, S.Korean ministers discuss N.Korea nuclear program,” <<http://en.rian.ru/world/20061004/54523540-print.html>> (검색일: 2006.10.4).

<sup>392</sup> 러시아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사전통보를 받았다. “국감현장: 북핵실험 리측의 속내 캐묻기에 집중” <<http://www3.yonhapnews.co.kr>> (검색일: 2006.10.15).

있으며 지방 주민들에게 어떠한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sup>393</sup> 이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한에서의 핵실험을 매우 비난한다. 이는 핵비확산 과정에 큰 피해를 끼쳤다. … 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기대하며 외무장관에게 유엔안보리에서 관련된 협의를 하도록 명령한다”<sup>394</sup>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김영재 신임 주러 북한대사를 소환해 6자회담 대표인 알렉세예프 외무차관과 회동을 갖게 하였다. 이 회동에서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① 평양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를 무시했다는 점, ② 동기가 무엇이든지 그러한 조치는 한반도문제들을 단지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 ③ 세계 및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고 핵비확산체제를 훼손한다는 점, ④ 동북아에서 핵무기 경쟁에 대한 전례를 남기고 있다는 점 등을 밝혔다. 그리고 북한이 NPT체제에 복귀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하였다.<sup>395</sup>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늦게 핵폭풍의 증거를 탐지했다고 하면서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했다고 확인하였다. 이바노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2005년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의해 실험된 핵장치의 위력이 TNT 5,000~15,000톤에 상응

<sup>393</sup> “Radiation levels normal following N.Korean nuclear test” <<http://en.rian.ru/world/20061009/54637107-print.html>> (검색일: 2006.10.9).

<sup>394</sup> “Russia condemns N.Korea nuclear test-Putin” <<http://en.rian.ru/russia/20061009/54646166-print.html>> (검색일: 2006.10.9).

<sup>395</sup>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n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exander Alexeyev Converses with DPRK Ambassador to Moscow Kim Yong-jae” (October 9, 2006) <<http://www.In.mid.r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Statement by Mikhail Kamynin, the Spokesman of Russi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garding the Nuclear Test in the DPRK” (October 9, 2006) <<http://www.In.mid.ru>>.

하고, 정확한 실험장소를 알고 있으며, 북한에 접경한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의 환경상황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sup>396</sup>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10월 9일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첫 핵실험이 핵비확산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율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sup>397</sup> 푸틴 대통령은 다음 날 독일의 『Sueddeutsche Zeitung』지와 회견에서 더욱 엄격한 핵비확산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정치적·외교적 수단의 사용, 국제무대에서 법의 지배를 통한 약소국의 안전보장, 비차별적인 민수용 핵기술의 접근 허용 등을 강조하였다.<sup>398</sup>

미·일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준비함에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감정적 대응이나 경제적, 군사적 제재보다는 실용적 접근법과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코사체프 국가두마(연방하원) 국제위원회 위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의 제한적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가난한 국가에 대한 더 이상의 경제제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10월 9일 말하면서 대북 압력 보다는 대화를 강조하였다.<sup>399</sup>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외무장관들은 전화

---

<sup>396</sup> “Russia condemns N.Korea nuclear test-Putin” <<http://en.rian.ru/russia/20061009/54646166-print.html> (2006. 10. 9); “Moscow demands N.Korea return to non-proliferation regime” (October 9, 2006) <<http://en.rian.ru/world/20061009/54643803-print.html>>.

<sup>397</sup> “Putin, Bush agree N.Korea test undermines non-proliferation” (October 9, 2006) <<http://en.rian.ru/russia/20061009/54657810-print.html>>.

<sup>398</sup> “Diplomacy is the way to stop N.Korea nuclear tests-Putin” (October 10, 2006) <<http://en.rian.ru/russia/20061010/54695456-print.html>>.

<sup>399</sup> “Wrap: Russia condemns N.Korean nuclear test, urges talks” (October 9, 2006) <<http://en.rian.ru/russia/20061009/54655232-print.html>>.

대화를 통해 북한 위기를 둘러싼 상황을 논의하고 10월 10일 북한 핵실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가담할 의지를 성명서를 통해 표명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다음 날 「세계식량계획」(WFP)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12,800톤의 곡물을 전달하였고, 10월 12일에는 6자회담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였다.<sup>400</sup>

미·일의 강경한 대북 유엔 제재 요구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푸틴 대통령과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안보위원회 서기 및 세르게이 이바노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10월 13~14일 탕자쉬안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 특사와 각각 회동하였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였으나 대북 군사제재는 물론 경제제재에도 반대하였다. 이들은 가난한 북한이 이미 7월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부과된 제한된 국제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징벌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는 데 반대하며, 한반도 핵문제들 둘러싼 상황이 협상이라는 평화적 수단으로 즉각 복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속한 6자회담의 재개를 요구하였다. 또한 세르게이 이바노프 부총리는 만약 경제제재가 부과되더라도 북핵 6자회담이 진전되는 경우에는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sup>401</sup> 러시아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어 최악의 대결 시나리오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알렉세예프 6자회담 대표

<sup>400</sup> “Russia hopes for early resumption of N.Korea nuclear talks” (October 12, 2006) <<http://en.rian.ru/russia/20061012/54764252-print.html>>.

<sup>401</sup> “Russia, China urge early resumption of 6-nation talks on N.Korea” (October 13, 2006) <<http://en.rian.ru/world/20061013/54798416-print.html>>; “Sanctions vs. N. Korea must not allow for military action—Russia” (October 14, 2006) <<http://en.rian.ru/world/20061014/54810338-print.html>>; “Russia’s Putin, Chinese envoy talk N.Korea” (October 9, 2006) <<http://en.rian.ru/world/20061014/54813373-print.html>>.

를 10월 13일 북한으로 파견하였다.

대북 제재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10월 14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대북 제재위원회 설치, 핵·미사일 관련 북한 자산 동결, 핵·미사일 관련자 입국 거부, 북한 화물 검색 협력, 대북 핵관련 물자 수출입 금지, 비(非)무력제재, 북한 대응에 따른 추가 조치.<sup>402</sup> 러시아 정부는 미국에 의해 초안된 이러한 대북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비편파적이고 균형잡힌’(unbiased and balanced) 것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북한의 실험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② 이 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보유국으로 즉각 복귀하도록 하고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데 있다는 점, ③ 핵 및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잠재력을 억제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나 어떠한 경제제재나 무력사용을 호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④ 이 제재는 평양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는 즉시 해제된다는 점, ⑤ ‘추가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더 이상의 긴장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sup>403</sup>

평양 방문 이후 10월 15일 베이징에 도착한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은 자신의 방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cautiously optimistic)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북한이 유엔안보리 제재이후 6자회담을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점, 타국과 핵 잠재력을 공유하지 않으며 어떠

<sup>402</sup>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October 14, 2006); 『조선일보』, 2006년 10월 16일.

<sup>403</sup> “UN Security Council votes for sanctions vs. N.Korea” (October 15, 2006) <<http://en.rian.ru/world/20061015/54822652-print.html>>; “UN resolution on N.Korea unbiased-Russian MP” (October 15, 2006) <<http://en.rian.ru/russia/20061015/54824565-print.html>>.

한 경우에도 타국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sup>404</sup>

상기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제재를 지지하나 한반도 안정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최대한의 자제를 보이고 협상테이블로 복귀할 것과 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양측이 좀 더 유연성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sup>405</sup> 북한이 탕자쉬안 중국 특사의 권유와 10월 31일 북·미·중 베이징 3자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자, 푸틴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북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sup>404</sup> “No plans for N.Korea to give up 6-nation talks—deputy Russian FM” (October 15, 2006) <<http://en.rian.ru/world/20061015/54822806-print.html>>.

<sup>405</sup> “Russia calls for flexibility in U.S.- N.Korea finance standoff” (October 21, 2006) <<http://en.rian.ru/russia/20061021/55013885-print.html>>.



# VII

## 한국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 1. 대외전략의 기초

탈냉전시대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미·일동맹은 다소 위기 국면을 맞이하였지만, 재정의를 통하여 재확립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9·11테러 이후에는 글로벌 및 지역차원에서 전략적 공통목표의 설정 및 주일미군의 재편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강화가 꾀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일동맹의 강화는 자위대의 전력 증강과 더불어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경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표 V-1>의 미·일의 공통전략목표에서 제시된 바 같이 동북아지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추구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은 한·중·일·러 경제협력과 상호의존의 증대, 글로벌 경제속의 미·중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등으로 인해 지역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일 견제, 중·대만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등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한국의 대외전략도 동북아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은 중장기 차원에서 동북아의 전략환경이 ‘미·일 대 중’의 대립구도로 형성·구축되지 않고 동북아공동체를 지향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이 심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북아지역에서 ‘미·일 대 중’의 대립구도가 구축될 경우, 한반도는 그와 같은 대립구도속에 함몰되어 구심력보다는 훨씬 큰 원심력의 작용을 받을 것이다. 즉, 한민족의 의지·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전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한국은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지

향한 경제협력의 증대·심화를 추구하고, 나아가 이러한 경제협력이 역내 다자 안보협력의 제도화로 연결되도록 전략적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북아 평화문화의 정착을 추구하는 노력을 동시에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6자회담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등은 6자회담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하여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일·중·러는 북한의 핵실험 단행후 개최되는 6자회담을 사전에 치밀하게 전략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즉, 한·미·일·중·러는 6자회담이 성과없이 막을 내리지 않고 북한의 핵폐기 등을 위한 전략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담 개최 전에 충분하고도 치밀한 사전 전략적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미·중·일·러 노력은 6자회담의 성공적 개최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역내 갈등문제를 가능한 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그와 같은 태도와 노력은 역내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지향하는 문화가 형성·구축되는 데 매우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환경의 조성에도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 대한 냉철한 현실적 인식과 더불어 북한문제를 단순히 지역(local) 수준에서 인식하지 말고, 미국의 세계 전략과 동북아전략, 미·일동맹과 일본의 국가전략 및 대외전략, 중국

의 국가전략 및 대외전략 등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핵실험 단행에 대한 관련국들 대북 제재 및 유엔의 대북 결의, 미·북·중 베이징 합의에 따른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볼 때 한·미동맹의 강화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인식케 한다. 한국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도 한·미동맹을 축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상호이익의 증대 및 상호 의존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상생의 전략(win-win strategy)으로서 ‘한반도·동북아 연계 발전전략’<sup>406</sup>의 수립과 더불어 한국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9·11테러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따라 한반도의 지전략적 가치가 저하되고 있다<sup>407</sup>. 한반도의 지전략적 가치의 저하는 한반도의 안정성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 즉, 한반도의 지전략적 가치의 제고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구축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은 한반도의 지전략적 가치의 제고과 함께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핵의 불용과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구축에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전략환경을 한층 복잡하게 하여 한반도 문제 관련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남

<sup>406</sup>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2).

<sup>407</sup> 윤석준, “21세기 한국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21세기 해양 갈등과 한국의 해양 전략』 (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2006. 7. 7).

북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미·일도 북한의 핵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한국도 한·미·일 공조, 한·중 공조, 한·러 공조 등을 통하여 북한의 핵 폐지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대외전략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북한 핵 폐지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이를 국제공조아래 평화적 해결을 꾀할 수 있도록 대외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2. 주변 4강에 대한 대외전략

### 가. 대미전략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현실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이 요구된다. 6자회담 참여국들이 공식적 선언과 달리 일치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분열된 양상을 보인다면 북한은 쉽게 핵보유국 인정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충실히 이행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대북제재에 관해 국제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부시 행정부는 핵문제뿐만 아니라 미사일, 재래식 전력, 인권, 금융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북·미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

다. 다양한 의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6자회담은 다시 공전을 거듭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국측에 대북협상 의제의 우선순위를 확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6자회담에서는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로 의제를 좁히고, 위폐·금융제재·마약밀매 등 범죄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은 별도의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핵문제 이외의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된 문제들은 9·19 공동성명에 규정된 바와 같이 6자회담과 별도의 한반도 평화포럼을 구성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미 국교 정상화 회담이 시작되면 양국간에 논의할 문제로서 6자회담의 의제로서는 부적절함을 설득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에 대해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실천해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즉, 북한이 NPT 복귀하고 IAEA 사찰을 수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제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 등 일부 핵시설을 폐기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받을 경우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수로 제공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실제적으로 핵시설을 폐기하고 사찰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포럼과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회담이 별도로 진행될 것이다.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에 관한 합의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은 재개되어도 북·미 양국이 여전히 상호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군축회담을 제기한

다면 언제 북한의 핵폐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실을 맺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이전 가능성 및 동아시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을 우려하여 6자회담을 서둘러 타결 지을 경우 북한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핵문제를 지나치게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조급증을 보이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6자회담은 핵폐기 범위와 대상, 검증방식 등을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6자회담이 시작되어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기까지 2~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핵폐기를 검증하기 위한 핵사찰이 실시되면 이를 완료하기까지 또다시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와 같이 6자회담은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는 바, 그 기간 동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핵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체제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6자회담이 장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공전하게 되면 PSI 참여 수준을 강화하여 한·미 안보협력을 긴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도 최대한 연기하여 2012년 이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미 안보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이 북한 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를 둘러싸고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한편,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도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미국도 힘의 한계를 의식하여 자국의 편익에 따라 대북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압적인 태도가 핵문제 타결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하에 미국에 대해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북한과 편익에 따라 막후 협상을 진행해도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다. 즉, 핵실험을 단행한

후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된 상황에서 6자 회담의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북·미 협상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한·미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9·19 공동성명의 제4항은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구체적인 핵폐기 조치를 취하여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협상 당사자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평화협정은 북·미간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시점에 이르면 우리 정부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문제가 북·미간 직접협상 의제가 될 수 없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문제도 미국이 북한과 독단적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대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6자회담 틀 밖에서 북·미간에 논의될 경우 향후 남북협상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을 강조하며 핵보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만 또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북한의 행태를 모방할 충동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의 핵도미노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바,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틀을 지역안보를 위한 다자간안보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나. 대일전략

21세기의 미·일동맹의 강화가 미·일 양국의 전략적 공통목표의 설정 및 주일미군의 재편을 계기로 전개되는데, 이는 자위대의 전력 강화 및 전략적 역할 확대와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에도 중요한 전략적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조만간에 이루어질 현행 『미·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의 재개정 또한 매우 주목된다. 한반도 관련, 미·일의 전략적 협력이 한층 질적으로 강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양자간 차원에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일동맹 등을 고려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세계 속의 미·일동맹을 지향한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의 심화, 미·일공동사령부의 대두에 따른 새로운 일본의 전략적 역할, 미·일의 직·간접적 중국 견제와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환경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 유사시 미·일의 전략적 군사협력과 일본의 전략적 역할 등을 심도 있게 전략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강화를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일본과도 전략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단행 이후, 일본은 ‘북한의 조건 없이 6자회담으로의 복귀’<sup>408</sup>를 압박하면서 대북 제재의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표명 후에는 북한의 핵폐기를 강

---

<sup>408</sup> 『연합뉴스』, 2006년 10월 31일.

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본의 대북 압박전략이 범세계적 수준의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의 추구라는 맥락에서 추구되고 있는 성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한국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일동맹의 강화, 그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역할 및 국가전략 등의 관점에서 대일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일본에 대해 갈등보다는 설득에 역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일 전략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략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가능한 한 자극적인 감성적 대일 접근은 자제하고, 일본 국민들의 정서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언어로 이성적이고도 전략적인 대일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베 정권의 향방은 2007년 7월의 참의원 선거 승리 여부에 달려있다. 한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 국민들의 정서에 설득력 있게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일간에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성과 감성이 혼재되어 있고, 한·일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양자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일간의 신뢰조성을 위한 노력의 추구하고 더불어 실천 가능한 대화가 평소에도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보협력 및 대화의 장(場)을 중층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시켜 양국간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강한 일본’의 슬로건 아래 전개되는 안보정책·대북정책이 새로운 차원에서 강화된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아래 전개되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

큼, 일본의 대외·안보전략에 관해 상황에 따라서 한·일 양자간 차원 이상인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과 달리, 한국은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정서, 열렬한 한류 팬 퍼스트 레이디의 존재 등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은 이를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일본에 대해 설득력 있는 정서적 접근이 필요하며, 한류를 유용하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개발·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동북아 안보환경은 중·대만문제, 중·일갈등 등 잠재적 갈등요인과 더불어 불확실성·불안정성·유동성 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역내 갈등 해소를 위한 장(場)의 마련으로서 다자안보협력 틀의 형성·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지역의 갈등 해소를 지향한 사전 예방을 위해 정책 협의와 조정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도 매우 유용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6자회담에서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도 6자회담이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통하여 21세기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틀로서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6자회담’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추구하며, 6자회담에서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이 경제제재 등 압박에 비중을 둔 ‘대화와 압박’전략을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강경정책이라고 해도 ‘채찍’만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다.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적절히 ‘사탕’도 내놓을 것이다. 한국은 이점에 유의하여 대북 한·일공조의 틀을 창출

해 내는 전략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일은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의 출구를 마련하면서 대북 압박이 추진되도록 전략적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다. 대중전략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한반도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반영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 남한, 북한과 미국, 중국 4국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으로 야기된 위기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심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 북핵문제를 6자회담 구도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sup>409</sup>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인식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조성된 한반도 위기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이 추진해 나가야 할 대중 외교안보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협력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배제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2005년 국내에서 한반도

---

<sup>409</sup> 류 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外交部發言人劉建超在例行記者會見上答記者問” <<http://www.fmprc.cn/chn/xwfw/fyrth/t277609.htm>> (검색일: 2006.10.26).

평화체제 전환협상을 남북한과 미국 3국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후,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심지어 중국공산당 산하 연구기관의 한반도문제 책임자는 중국이 배제된 채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논의가 남북한과 미국간에 진행된다면 중국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지지하기 어려우며, 설령 중국의 참여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여전히 정전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sup>410</sup>

현실적으로도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중국의 국익에는 하등의 손실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중국의 경제발전과 안보이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이외에 중국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sup>411</sup> 그러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할지라도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미국마저도 중국의 중재역할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북 설득외교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중국이 북한에게 강력한 압력 행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압력 행사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up>410</sup> 필자 베이징 인터뷰, 2005년 6월 10일.

<sup>411</sup> 김정일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소집된 재외 공관장 회의에서 중국까지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도입하는 원유의 거의 전량을 공급해 주고 있고, 북한이 수입하는 식량의 1/3 정도를 지원해 주는 등 북한의 목줄을 조일 수 있는 나라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일의 정책변화를 유도할 충분한 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일의 대북 제재조치가 강화될수록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실시한 후 많은 중국의 전략가들은 과거 중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북한이 미국과 비밀접촉에 응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도 중국의 적극적 중재외교 때문이었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 주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유엔안보리의 1718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중국도 북한 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북한에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북한에게 퇴로를 열어두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략적으로 견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과 미국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이 경쟁상대로 보는 일본에게 군사력 증강의 구실을 제

공하게 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미·일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중국은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해 봉쇄되고 경제건설에 심각한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 실험과 핵 무장력 증강이 이처럼 동북아 안보 정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중국에게 적극적으로 인식시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미국과도 안보적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대중 발언권을 제고하는 적실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외교부 이외에 당 중앙 대외연락부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가 주도하는 대북 제재조치가 발동됨으로써 중국 외교부와의 접촉과 교류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중국의 대북 정책은 당 중앙 대외연락부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당 중앙 외사관공실 부주임으로 재직해 왔던 류샤오밍을 북한 주재 대사로 파견한 것도 중국의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당 중앙이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와 같은 핵심적 외교 사안은 당 중앙이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한국은 당 중앙 대외연락부와 외사관공실과의 접촉과 교류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대외연락부 내 아시아 담당 부부장 류홍차이와 부장조리 탄자린과의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 내에서 북한 김정일이 신뢰하고 있는 지도자는 중앙 외사관공실 주임을 겸하고 있는 파이빙궈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후진타오 집권 이후 중국은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북한

핵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위원회와 중국 공산당 산하의 개혁개방논단 주관 아래 2005년 7월 시작된 한·중 전략대화를 활성화 하는 것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3차례 개최된 한·중 전략대화의 수준을 정부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양국의 학자들간 대화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대한 한·중간 신뢰를 확대하는 데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6자회담은 여전히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유효한 방안의 하나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중재를 계기로 북·미는 조만간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기존의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보다는 북핵문제의 폭발을 지연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해 왔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6자회담 대표들이 융통성을 갖고 문제해결을 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6자회담 참여자의 레벨을 외교 부장급으로 격상시켜 운영하고, 6자회담 구도 내에 다양한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라. 대러전략

러시아는 국내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립화, 경제 및 군사 제재 등으로 인한 북한의 돌발사태가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러시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NPT 복귀,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 북한의 안전보장, 북·미 양국의 우려사항 동시 해소, '9·19 공동성명'의 단계적 이행방안 모색 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과 견해를 갖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9·19 공동성명'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도 6자회담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 북·미 양측에 유연성을 보이도록 촉구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반발하여 2차 핵실험을 하거나 돌발사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는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기 위해 A-50 조기경보기를 극동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조기경보기는 북한 선박 감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2004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관련 부품과 기술의 제3국 이전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따라서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선박에 대한 검색 등의 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획득

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의 공유를 러시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한·러 양국의 입장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러시아 외교아카데미」가 매년 주최하는 한·러 포럼 등을 통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학술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러간의 전통적인 선린관계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미·일의 견제 차원에서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북한은 체제 유지에 안보 후견국인 러시아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러간의 선린관계 지속은 한반도 안정과 남북대화 및 남북한·러시아간 3각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는 북·러 관계의 발전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외화 획득 차원에서 어느 국가에도 군사무기를 판매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일의 견제 차원에서 북한과 군사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무기를 판매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우리의 요청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기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러시아의 첨단 군사무기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높은 국제가격적으로 2003년 7.3%, 2004년 7.2%, 2005년 6.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의 경제가 급속히 회복·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교역과 투자를 대폭적으로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가전제품, 자동차, 전자, IT, 건설, 호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TSR-TKR 연결은 남  
북한·러시아 3국 모두가 큰 이해를 갖고 있는 사업이나 약 25억 달러  
에 달하는 재정조달과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시적인 성과  
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김경수·김환청·이무성·김상범. 『국제 비확산체제와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통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6.
- 김국신·박영호.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김민주·전세경 율김. 『중국의 세기』. 서울: 렉스미디어, 2006.
- 국방부. 『국방백서 2000』. 서울: 국방부, 200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문준조. 『중국의 WTO 가입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1.
-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_\_\_\_\_.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_\_\_\_\_. 『중·북관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1997.
- 여인곤.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여인곤 외. 『대북포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변 안보·외교환경 조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서울: 연합뉴스, 2001.
- 오용석. 『현대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서울: 나남출판, 2004.
- 유재건 편저.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서울: 나남, 1999.
- 예즈칭 지음. 이우재 율김.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 북스, 2005.
- 이승철 외. 『21세기 동북아국제관계와 한국』. 서울: 나남출판, 2004.

- 일본 경제산업성. 『通商白書 2005』.
- 임양택. 『아시아 대예측』.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9.
- 정여천 편. 『한·러 경제교류 10년의 평가와 러시아 경제의 미래』.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서울: 법문사, 1998.
-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동방특급열차: 김정일과 함께한 24일간의 러시아 여행』. 서울: 도서출판 중심, 2003.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2~2003』.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한광수.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한국국방연구원. 『2005~2006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6.

Harrison, Selig S.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Institut Vostokovedeniya Akademii Nauk SSSR. *Otnosheniya Sovetskogo Soyuzsya s narodnoy Koreey 1945~1980, Dokumenty i Materialy*, Moskva: Izdatelstvo Nauka, 1981.

Mochizuki, Mike M. ed. *Toward A True Alli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O'Hanlon, Michael & Mochizuki, Mik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New York: McGraw-Hill, 2003.

Perle, Richard & Frum, David. *An End to Evil: How to Win the War on Terror*. New York: Random House, 2003.

Shenkar, Oded. *The Chinese Century: The Rising Chinese Economy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the*

*Balance of Power, and Your Job*, N. J.: Pearson Education, Inc. 2005.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南京大虐殺の真相を明らかにする全國連絡會 編. 『南京大虐殺』. 大阪: 東方出版, 1995.

鄧小平. “改革開放政策穩定, 中國大有希望.” 『鄧小平文選』. 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門洪華. 『構建中國大戰略的框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北東アジア・グランドデザイン研究會編著. 『北東アジアのグランドデザイン』.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2002.

山田 明 編. 『外交資料, 近代の膨脹と侵略』. 東京: 新日本出版社, 1997.

船橋洋一. 『同盟漂流』. 東京: 岩波書店, 2000.

戰爭犠牲者を心に刻む會 編. 『七三一部隊』. 大阪: 東方出版, 1997.

朱聽昌 主編. 『中國周邊安全環境與安全戰略』. 第3章. 北京: 時事出版社, 2002.

中國 國家統計局 編. 『中國統計年鑑 2003』.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03.

## 2. 논문

- 김계동. “다자안보기구의 유형별 비교연구: 유럽통합과정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1호(한국정치학회), 1994.
-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다자간 안보협의체와 상호보완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 김현진. “일본의 에너지 안보 정책.” 『협력과 갈등의 동북아 에너지 안보』 세계지역학회·통일연구원 추계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문수언 외.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국제정치논총』. 제37집 3호, 1998.
- 배궁찬. “미국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여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 4. 28.
- 배정호. “강화되는 미일동맹과 한국의 전략 대안.” 『국제문제』. 8월호, 2006.
- \_\_\_\_\_. “21세기 미일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국제문제연구』. 제6권 3호 가을호, 2006.
-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국가전략』. 제11권 2호, 2005.
- 외교통상부. “한·미정상,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논의.” 『뉴스레터』 제141호, 2006. 11. 24.
- 윤석준. “21세기 한국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 해양전략연구소 주최 『21세기 해양 갈등과 한국의 해양 전략』. 세미나 발표논문(2006.7.7).
- 이춘근.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6.
- 전경만. “동북아 안보구도 전망과 신협력주의 구상.” 『국방정책연구』 봄호, 2006.
- 朱建榮. “북한·중국관계의 특수성.” 『극동문제』. 4월호, 1997.
- 트카첸코. “러시아-북한관계의 변화와 양한관계 영향.” 한양대 중소연구

소 세미나, 1993. 5. 24. 『주요자료 전문집』 (연합통신, 1993. 6. 1).  
한광수. “위안화 환율변동과 미·중 통상 관계: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변  
화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8집 1호, 2006.

Yakubovsky. “러시아-북한간의 경제협력: 문제점과 전망.”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학술세미나, 1995. 5. 3.

Armitage, Richard L. et. a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INSS Special  
Report, October 11, 2000.

<[www.ndu.edu/inss/press/Spelrepts/SR\\_JAPAN.HTM](http://www.ndu.edu/inss/press/Spelrepts/SR_JAPAN.HTM)>.

Burns, Nicholas.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Testimony to the House Inter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November 15, 2006.

Chang, Parris H. “Deng’s Last Stand on China’s Reform  
Movement.”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4,  
No. 1. Summer 1992.

Christensen, Thomas J. “Posing Problems without Catching Up:  
China’s Rise and Challenges for U.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4, Spring 2001.

Dumbaugh, Kerry B. “Taiwan-U.S. Political Relations: New Strains  
and Change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October 10,  
2006.

\_\_\_\_\_. “China-U.S. Relations: Current Issues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Updated September 22, 2006.

Eberstadt, Nicholas. “Diplomatic Fantasyland: The Illusion of a  
Negotiated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ww.nautilus.org/fora /security/0342\\_Eberstadt.html](http://www.nautilus.org/fora /security/0342_Eberstadt.html)>.

- Feith, Douglas J.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Transforming the U.S. Global Defense Posture." December 3, 2003. <[www.defenselink.mil/speeches/2003/sp20031203-0722.htm](http://www.defenselink.mil/speeches/2003/sp20031203-0722.htm)>.
- Frisbie, John. & Overmyer, Michael. "U.S.-China Economic Relations: The Next Stage." *Current History*. September 2006.
- Fu, Zheng.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China Strategy*, Vol. 3, July 20, 2004.
- Hale, David & Hale, Lyric Hughes. "China Takes Off." *Foreign Affairs*. Vol. 82. No. 6. November/December 2003.
- Klintworth, Gary. "China: Status Quo Power or Regional Threat."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12, No. 2, Summer/Fall 1998.
- Lam, Willy. "U.S.-Japan Security Declaration Causes China to Reconsider Stance on North Korea." *China Brief*. Vol. 5, No. 5, March 1, 2005.
- Lieberthal, Kenneth. "Preventing a War over Taiwan." *Foreign Affairs*, Vol. 84, No. 2, March/April 2005.
- Lin, Chia-lung. "The Political Formation of Taiwanese Nationalism." Stephane Corcuff (ed.). *Memories of the Future: National Identity Issues and the Searches for a New Taiwan*. Armonk: M. E. Sharpe, 2002.
- Liu, Hong. "The Sino-South Korean Normalization." *Asian Survey*. Vol. 33. No. 11, November 1993.
- Medeiros, Evans S. & Fravel, M. Taylor. "China's New Diplomacy." *Foreign Affairs*. Vol. 82, No. 6, November/December 2003.

- Mearsheimer, John J.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Vol. 105, No. 690, April 2006.
- Nanto, Dick K. "East Asian Regional Architecture: New Economic and Security Arrangements and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18, 2006.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Mapping the Global Future: Repor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s 2020 Project." December 2004.
- Panagariya, Arvind. "Regionalism in Trade Policy: Essays on Preferential Trading. Singapore: World Scientific." 1999.
- Park, Han S. & Park, Kyung-Ae. "U.S. lacks options in crisis with Pyongyang." *Jane's Intelligence Reviews*. April 2003.
- Perl, Raphael F. "North Korean Counterfeiting of U.S. Currency."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2, 2006.
- Rapkin, David P.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power to block: the APEC and AMF cases." *The Pacific Review*. Vol. 14, No. 3, 2001.
- Ravenhill, John. "APEC adrift: implications for economic regionalism in Asia and the Pacific." *The Pacific Review*. Vol. 13, No. 2, 2000.
- Rice, Condoleezza.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Policy*. January/February 2000.
- Rowen, Henry S. "Kim Jong Il Must Go." *Policy Review*. No. 121, October & November 2003.
- Shambaugh, David. "China Engages Chin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Winter 2004.
- Suettinger, Robert L. "The Rise and Descent of Peaceful Ris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12, Fall 2004.

- \_\_\_\_\_. “China’s Foreign Policy Leadership: Testing Tim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9, Winter 2004.
- Sutter, Robert. “China’s Rise in Asia: Bumps in the Road and Unanswered Questions.” *Pacnet*. No. 12, March 17, 2005.
- Tellis, Ashley J. “China’s Grand Strategy: A Kinder, Gentler Turn.” *IISS Strategic Comments*. Vol. 10, No. 9, November 2004.
- 高木 誠一郎. “中國和平崛起論の現段階.” 『國際問題』. No. 540, 2005.
- 高子川. “中國周邊安全環境基本態勢解析.” 『當代亞太』. 第1期, 2004.
- 郭震遠. “和平崛起: 中國的必然選擇.” 『中國評論』. 3月號, 2004.
- 唐世平·張蘊嶺. “中國的地區戰略.” 『世界經濟與政治』. 第6期, 2004.
- 時殷弘. “中國大陸對台新策略評析.” 『中國評論』. 2月號, 2005.
- \_\_\_\_\_. “國家大戰略理論與中國的大戰略實踐.” 『現代國際關係研究』. 第3期, 2004.
- 李家泉. “當前台海形勢與中央對台政策新思維探討.” 『中國評論』. 8月號, 2005.
- 李景治. “戰略機遇期和我國的國際戰略.” 『中國外交』. 第11期, 2003.
- 閻學通. “和平崛起與保障和平.” 『國際問題研究』. 第3期, 2004.
- 劉延棠. “國際變革: 世界與中國的戰略互動.” 『瞭望』. 第9期, 2005.
- 阮宗澤. “當前國際形勢的四個看點.” 『瞭望』. 第10期, 2005.
- 王 毅. “加強互信合作, 促進共同安全.” 『中國外交』. 第3期, 2004.
- 王傳劍. “駐韓美軍重新部署之意義.” 『當代亞太』. 第5期, 2004.
- 丁詩傳. “美國對台灣問題的維持現狀政策與中國的戰略選擇.” 『中國外交』. 第11期, 2004.
- 陳鳳英. “客觀看待中美經貿失衡現象.” 『瞭望』. 第47期, 2003.
- 田邊誠. “日朝新時代の幕あげ アジアの平和と南北統一のために.” 『月刊社會黨』. 12月號, 1990.
-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國務院新聞辦公室. “一個中國

- 的原則與台灣問題。”『新華月報』. 第3期, 2000.
-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新華月報』. 4月號, 2006.
- 川上高司. “在日米軍再編と日米同盟.” 『國際安全保障』. 第33卷 3號, 2005.
- 孫承. “第二次朝鮮核危機.” 『國際問題研究』. 第3期, 2003.
- 孫晉忠. “反恐合作與中美關係.” 『國際問題研究』. 第2期, 2005.
- 馮昭奎. “中國與亞洲: 和平崛起與外交新思維.” 『中國外交』. 第5期, 2004.
- 何德功. “日本熱衷臺灣問題的用心.” 『瞭望』. 第9期, 2005.
- 黃嘉樹. “中國新領導核心對台政策的調整與新意.” 『中國評論』. 5月, 2005.

### 3. 기타자료

국방부. 『보도자료』 2003. 3~2004. 8. <[www.mnd.go.kr/webmodule/htsboard/hbd/hbdlist.jsp?typeID](http://www.mnd.go.kr/webmodule/htsboard/hbd/hbdlist.jsp?typeID)>.

박재욱.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 실태와 전망.”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2006. 9. 29).

배정호·김태우 외. 『미·북 핵·미사일 협상 및 한반도 위기설에 관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보고서, 2002.

외교통상부. 『뉴스레터』.

이인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실태 및 의도.” 통일연구원 정책간담회 발제문, 2006.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CIA. *Unclassified Report to Congress on the Aquisition of Technology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1 January Through 30 June, 2003 <[www.cia.gov/cia/reports/721reports/jan\\_jun\\_2003.htm](http://www.cia.gov/cia/reports/721reports/jan_jun_2003.htm)>.

U.S. Department of State. U.S.-DPRK Joint Communiqué, October 12, 2000.

\_\_\_\_\_. Richard Boucher, Spokesman,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Press statement. October 16, 2002 <[www.state.gov/r/pa/prs/ps/2002/14432.htm](http://www.state.gov/r/pa/prs/ps/2002/14432.htm)>.

\_\_\_\_\_. Washington File, Power Says Beijing Talks Show United Opposition to Nuclear Korea. April 25, 2003 <[usembassy.state.gov/seoul/www41ai.html](http://usembassy.state.gov/seoul/www41ai.html)>.

\_\_\_\_\_. U.S. to Host 5th Meeting 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December 2, 2003 <[usinfo.state.gov/](http://usinfo.state.gov/)>

topical/pol/arms/03120201.htm>.

\_\_\_\_\_. USINFO.STATE.GOV, *Treasury Identifies Eight North Korean Weapons Proliferators* <usinfo.state.gov/is/Arcjove /2005/Oct/21-616972.htm>.

\_\_\_\_\_. *Interview With Wolf Blitzer of CNN, Secretary Condoleezza Rice*, October 10, 2006

\_\_\_\_\_. *Briefing on Upcoming Trip to Asia, Secretary Condoleezza Rice*, October 16, 2006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ss Room. *Prepared Remarks by Stuart Levey, Under Secretary for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Before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September 8, 2006.

U.S. Senate. *Press Releases, First Introduces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July 14, 2006.

The White House. *Statement by the President*. June 6, 2001.

\_\_\_\_\_. *President Deliver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9, 2002.

\_\_\_\_\_.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www.whitehouse.gov/nsc/nss.html.>

\_\_\_\_\_. *President Bush, Chinese President Jiang Zemin Discuss Iraq, N. Korea*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2/10/20021025.html.>

\_\_\_\_\_. *Press Briefing by Tony Snow*. October 16, 2006.

\_\_\_\_\_. *President Bush's Statement on North Korea Nuclear Test*. October 9, 2006.

\_\_\_\_\_.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_\_\_\_\_ . *U.S.-India Joint Statement*, March 2, 2006.

『내외통신』.

『동아일보』.

『러시아 방송』.

『로동신문』.

『모스크바 방송』.

『매일경제』.

『서울경제』.

『세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방송』(평양).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신문』.

『한국일보』.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YaleGlobal.*

『日本經濟新聞』.

『人民日報』.

『産經新聞』.  
『讀賣新聞』.  
『東京新聞』.  
『共同通信』.  
『文匯報』.  
『星島日報』.  
『朝日新聞』.  
『每日新聞』.

<www.atimes.com>.  
<www.beijingreview.com>.  
<www.carnegieendowment.org>.  
<www.chinanews.com.>.  
<www.chinamil.com.>.  
<http://en.rian.ru>.  
<www.fpc.org.uk>.  
<www.fmprc.gov.cn>.  
<www.globalsecurity.org>.  
<www.kifs.org>.  
<www.people.com.cn>.  
<www.president.kremlin.ru>.  
<www.mofat.go.kr>.  
<www.nautilus.org>.  
<www.nytimes.com>.  
<news.xinhuanet.com>.  
<www.state.gov>.  
<www.tsu.org.tw/tsuOutline.php>.  
<www.unikorea.go.kr>.

<www.unirusia.com>.  
<www.usinfo.state.gov>.  
<www.washingtonpost.com>.  
<www.wenweipo.com>.  
<www.whitehouse.gov>.  
<world.people.com.cn>.  
<www.yaleglobal.yale.edu>.  
<www.yonhapnews.co.kr>.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률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 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근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적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 중국 ·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 비매품 ◆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소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에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서보혁  
 고재홍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십시오 정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십시오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